

청년정책 영역별 기초방향 수립연구

이철선
하은솔·이상림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연구책임자】

이철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진】

하은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연구보고서(수시) 2020-03

청년정책 영역별 기초방향 수립연구

발행일 2020년 9월
발행인 조흥식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제8-142호)
인쇄처 (주)현대아트컴

발간사

2020년 2월 청년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해 제정되었다. 그리고 청년정책 총괄부처로 지정된 국무조정실은 향후 5년 동안 추진해야 할 청년지원 정책들을 발굴하고 개발하고자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구축하고 있다. 청년기본법은 우리 청년들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존엄과 가치, 그리고 권리와 책임을 법으로 보장하고, 그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법률이다. 과거 정부가 사회적으로 이슈화 된 청년 실업률 감소를 위해 고용정책 관점에서 청년정책을 조망했다면 올해 제정된 청년기본법은 고용뿐만 아니라 교육, 주거, 복지, 참여 등 전반적인 사회정책관련 인프라를 전체 청년들의 발전을 위해 지원하겠다는 통합적인 전환에 대해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국무조정실의 의뢰를 받아 향후 일자리, 주거 등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필요한 영역별 정책들의 기초 방향과 향후 실시할 청년정책 과제들의 전반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이에 본원에서는 이철선 연구위원 책임 하에 이상림 부연구위원, 하은솔 전문연구원 총 3인의 연구진이 참여하여 청년기본법 제정 이전 실시되어온 청년정책들의 검토를 기반으로 향후 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서 영역별 정책 중 어떤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 그리고 평가관리를 어떻게 구축하는 것이 정책의 효과성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정책들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청년정책의 시발점이 되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미력하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끝으로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저자들의 의견일 뿐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준다.

2020년 9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 흥 식

목 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연구의 개관	9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1
제2절 연구 내용	13
제3절 연구 방법	16
제2장 청년기본법 제정과 정책적 고려 요인	19
제1절 분석 개요	21
제2절 청년기본법 제정과 정책적 고려 요인	22
제3장 기존 청년정책의 현황과 특징	33
제1절 분석 개요	35
제2절 기존 청년정책의 현황	40
제3절 기존 청년정책의 특징	65
제4장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청년의 욕구 파악	79
제1절 분석 개요	81
제2절 청년정책 욕구 조사의 정책 영역별 분석 결과	89
제3절 청년정책 방향설정을 위한 중요도 Matrix 분석	99

제5장 청년정책의 영역별 정책방향과 평가관리체계 개선	117
제1절 분석 개요	119
제2절 청년정책의 영역별 기초방향 설정	122
제3절 청년정책의 평가관리 체계 개선	137
제6장 향후 과제와 연구의 한계점	147
제1절 연구의 시사점	149
제2절 연구의 한계점	152
참고문헌	157
부록	159
[부록 1] 정부의 청년정책에 대한 욕구조사	159

표 목차



〈표 1〉 청년정책의 영역별 정책 방향과 목표치 설정	6
〈표 1-1〉 2020년 6월 IMF의 주요 국가의 WEO Update 전망	11
〈표 1-2〉 청년정책에 대한 최근 연구 동향	15
〈표 1-3〉 연구방법	17
〈표 2-1〉 청년기본법과 시행령의 구성 체계	22
〈표 2-2〉 청년기본법의 주요 내용	25
〈표 2-3〉 청년기본법 내용 중 보편적 복지정책에 관한 기초관련 강제규정	26
〈표 2-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상의 청년연령	27
〈표 2-5〉 정부 위원회 성격	29
〈표 2-6〉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원	30
〈표 3-1〉 기본 범부처 청년정책 조사지의 주요 내용	36
〈표 3-2〉 기본 범부처 청년정책의 조사지 사례	36
〈표 3-3〉 기본 범부처 청년정책 182개의 범주화 내용	38
〈표 3-4〉 부처별 청년정책 현황	40
〈표 3-5〉 5대 영역 중 교육 관련 정책 - (1) 교육비 지원 정책	42
〈표 3-6〉 5대 영역 중 교육 관련 정책 - (2) 연구비 지원 정책	44
〈표 3-7〉 5대 영역 중 교육 관련 정책 - (3) 인건비 지원 정책	45
〈표 3-8〉 5대 영역 중 교육 관련 정책 - (4) 진로탐색	46
〈표 3-9〉 5대 영역 중 생활 관련 정책	47
〈표 3-10〉 5대 영역 중 일자리 관련 정책 - (1) 취업연계	49
〈표 3-11〉 5대 영역 중 일자리 관련 정책 - (2) 취업비용지원	51
〈표 3-12〉 5대 영역 중 일자리 관련 정책 - (3) 고용환경개선	53
〈표 3-13〉 5대 영역 중 일자리 관련 정책 - (4) 직업훈련지원	55
〈표 3-14〉 5대 영역 중 일자리 관련 정책 - (5) 창업환경조성	58
〈표 3-15〉 5대 영역 중 일자리 관련 정책 - (6) 창업훈련지원	60
〈표 3-16〉 5대 영역 중 주거 관련 정책	61
〈표 3-17〉 5대 영역 중 참여 관련 정책	64

〈표 3-18〉 청년정책의 정책유형별 연령대	65
〈표 3-19〉 청년 유형별 정책과 정책대상	67
〈표 3-20〉 청년정책 유형별 과제수와 정부 예산액	69
〈표 3-21〉 청년정책 유형별 과제수와 정부 예산액	70
〈표 3-22〉 청년정책 유형별 과제수와 정부 예산액	72
〈표 3-23〉 청년정책 유형별 성과지표와 목표치 존재유무	74
〈표 3-24〉 청년정책 유형별 성과지표 유형	76
〈표 3-25〉 청년정책 성과지표 유형별 목표치 설정 근거	77
〈표 4-1〉 청년정책 욕구조사 대상	83
〈표 4-2〉 계층 분석적 의사결정법과 결합분석의 차이	85
〈표 4-3〉 기본 범부처 청년정책 182개의 범주화 내용	86
〈표 4-4〉 청년정책 욕구조사 응답자의 인구 통계적 변수 현황	89
〈표 4-5〉 5대 대분류 청년정책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분석 결과	91
〈표 4-6〉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영역별 중요도 분석 결과	92
〈표 4-7〉 청년 일자리 정책 중 취업비용정책에 대한 영역별 중요도 분석 결과	93
〈표 4-8〉 청년 일자리 정책 중 직업훈련지원정책에 대한 영역별 중요도 분석 결과	94
〈표 4-9〉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영역별 중요도 분석 결과	95
〈표 4-10〉 청년 주거 정책에 대한 영역별 중요도 분석 결과	97
〈표 4-11〉 청년 생활지원 정책에 대한 영역별 중요도 분석 결과	98
〈표 4-12〉 청년 생활지원 정책에 대한 영역별 중요도 분석 결과	99
〈표 4-13〉 전체 응답자 기준 중요도 Matrix 분석 결과	103
〈표 4-14〉 청년이행주기별 중요도 Matrix 분석 결과	104
〈표 4-15〉 성별 중요도 Matrix 분석 결과	106
〈표 4-16〉 연령별 중요도 Matrix 분석 결과	107
〈표 4-17〉 청년이행주기별 청년정책에 대한 중요도 재 산정 결과	109
〈표 4-18〉 성별 청년정책에 대한 중요도 재산정 결과	111
〈표 4-19〉 연령별 청년정책에 대한 중요도 재산정 결과	112



〈표 4-20〉 청년정책의 중분류 정책 중 핵심과제 도출	113
〈표 5-1〉 청년정책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 참석자와 주요 논의 내용	121
〈표 5-2〉 전체 청년 정책의 정책방향 설정	123
〈표 5-3〉 청년 일자리지원 정책의 방향 설정	126
〈표 5-4〉 청년 주거지원 정책의 방향 설정	128
〈표 5-5〉 주거복지로드 맵 2.0 중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정책 변화	129
〈표 5-6〉 청년 생활지원 정책의 방향 설정	131
〈표 5-7〉 2012~2017년 국가장학금 신청자 및 수혜자 현황	133
〈표 5-8〉 청년 교육지원 정책의 방향 설정	134
〈표 5-9〉 유럽의 청년 민주주의 육성 제도	136
〈표 5-10〉 청년 참여지원 정책의 방향 설정	136
〈표 5-11〉 청년정책 지수 (가안)	138
〈표 5-12〉 청년정책 지수의 구성요인과 내용	139
〈표 5-13〉 기존 범부처 성과지표 검토 결과 및 변경 상황	140
〈표 5-14〉 기존 범부처 청년정책 중 부적절한 성과지표의 신설 및 변경	141
〈표 5-15〉 청년정책의 목표치 설정 방향	145
〈표 6-1〉 청년정책의 영역별 기초방향과 분석 근거	151
〈표 6-2〉 청년기본법 외 청년정책관련 법률과 문제점	154

그림 목차

[그림 1-1] 청년실업률 추이(2019. 9~2020. 6)	13
[그림 4-1] 계층 분석적 의사결정법을 활용한 인터넷 설문 화면 내용	86
[그림 4-2] AHP 분석을 통한 상대적 중요도 산출 방법	87
[그림 4-3] 일관성 비율과 일관성 지수의 산출 방법	88
[그림 4-4] 청년정책 방향설정을 위한 중요도 Matrix 분석 방법론	100
[그림 5-1] 청년 정책 영역별 기초방향 설정을 위한 분석방법론	119
[그림 5-2] 청년들의 생활비 대출 현황(2018년 7월 기준)	130



Abstract

Research on establishing basic directions for each area of youth policy

Project Head: Lee, Cheol-seon

In February 2020, the Basic Youth Act was passed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The Basic Youth Act guarantees the dignity, values, rights and responsibilities that our youth will enjoy as human beings. If the youth policy in the past focused on youth unemployment, the Basic Youth Act includes not only employment but also the overall social policy infrastructure such as education, housing, welfare, and participation. In this regard, this study was attempted to establish the basic direction of policies for each area of youth policies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first basic youth policy plan.

In particular, three detailed research contents were set as follows. The first is, 'What difference should the policy direction of the first Youth Policy Basic Plan have from existing policies?', The second is, 'If we change the policy direction, which policy should we focus on?' and The third was 'what management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achieve the policy goals'.

To this end, in this study, first, through the content analysis of the Basic Youth Act, the factors to consider in setting policy directions were identified. Seco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2 청년정책 영역별 기초방향 수립연구

government's existing youth policies were analyzed. Third, the importance of support policies was identified by conducting an Internet survey targeting young adults. Fourth, ideas of universal youth policies to be developed were collected through expert meetings.

*Key words: Youth Policy, The Basic Youth Act, The first Youth Policy Basic Plan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20년,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사태로 인해 경제와 사회시스템 모두 사상초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2019년 12월, 7.3%였던 청년실업률은 2020년 6월에 10.7%(청년실업자 45만 1천명)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는 2020년 2월 청년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청년기본법은 ‘청년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무조정실의 의뢰를 받아 청년기본법에 명시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정책적 방향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기획되었다. 특히, 향후 수립될 청년정책 기본계획에서 요구하는 일자리, 주거, 교육, 생활, 참여의 5대 정책 영역에서 정책 대상자인 청년들이 요구하는 청년정책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세부적으로 3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는 ‘청년기본법 제정으로 수립될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방향은 기존 정책과 어떤 차별성을 가져야 하는가?’, 둘째는 ‘청년정책의 전체 방향을 변화시킨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에 집중해야 하는가?’와 관련된 우선 순위의 문제이다. 그리고 셋째는 청년정책의 전체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세부 정책에 집중한다면 ‘청년정책 전체를 지속적으로 어떻게 관리 할 것이냐’ 하는 관리의 문제이다.

이 연구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선, 법제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청년기본법의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국무조정실로부터 기존 청년정책들을 조사한 사업 기술서를

협조 받아 그 내용을 통계 분석하였다. 셋째 단계에서는 청년들의 정책육구 파악을 위해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졸업 후 취업준비생, 취업 후 결혼 적령기 청년, 각각 200명씩 총 600명에 대하여 계층적 의사결정법(AHP)이 적용된 설문지를 이용한 인터넷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앞서 진행한 3가지 분석결과와 청년정책 전문가들의 간담회와 자문을 통합해 청년정책 영역별 기초방향을 설정하였다.

2. 주요 연구결과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청년기본법 내용 분석에서는 기존 청년정책이 선별적 조건에 의한 정책들이었다면 기본법 제정 후에는 일반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요구되며, 정책 우선순위 결정이 청년정책 조정위원회에서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둘째로 기존 범부처 청년정책의 현황 분석에서는 기존 정책이 청년연령보다는 재학생-취업준비생-미혼 직장인 등 청년이행주기단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는 것과 전체 정책 중 일자리 부문이 104개로 가장 많으나 예산규모에서는 주거 정책이 약 58.5%를 차지해, 주거를 제외할 경우 청년예산은 약 10조원에 불과하다는 점, 그리고 그 예산 중 청년이 아닌 기업과 훈련기관 등 관련기관에 집행되는 예산이 약 3조 6천억 원에 달한다는 점 등이 파악되었다. 또한 관리측면에서 목표치가 설정된 경우는 86.8%정도였고, 성과지표가 존재하는 경우는 182개 중 162개(89.0%)였으나, 만족도와 단발성 수행 여부 등 부적절한 지표를 고려한다면 약 55개의 성과지표를 수정해야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셋째, 청년정책 육구조사에서는 우선 청년들이 생각하는 청년정책에 대한 중요도를 파악했는데 전체 청년정책 중 일자리 지원정

책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이 28.2%로 1위였고, 다음으로 주거지원(23.6%), 생활지원(20.5%) 교육지원(15.4%), 정책참여(12.3%) 정책의 순이었다. 그리고 일자리 지원정책 중에서도 공공기관 취업 시 채용비리 근절과 같은 고용환경 개선정책에 대한 중요도가 32.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취업연계지원정책(24.4%), 취업비용지원정책(23.8%), 직업훈련지원정책(19.3%)의 순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일자리 정책 중 가장 역사가 긴 직업훈련지원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중요도가 낮았다는 점인데 그 이유로는 청년들이 직무교육 보다는 최근에 부각되는 인턴십 관련 국내기업 체험지원이나 자격증 취득지원을 보다 중요하게 평가했기 때문이었다. 한편 5대 청년 영역별 정책 중 중요도가 4위였던 교육정책에서 청년들은 교육비지원(30.2%)을 가장 높게 평가했고, 다음으로 진로탐색지원(28.7%), 인건비 지원(22.6%), 연구비 지원(18.4%)의 순이었다. 연구비 지원정책의 경우, 정보통신산업 등 일부 이공계 대학원생이나 연구교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반 청년들의 느끼는 청년정책에 대한 체감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런 다음 5대 대분류 청년 정책에 대한 중요도와 대분류에 속한 중분류의 정책지원사업군 간의 중요도를 이용하여 청년정책의 추진방향을 설정한 결과, 일자리 정책은 강화를, 주거와 생활, 교육정책은 현행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마지막 참여정책은 정책개선이 요구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그리고 설정된 정책 방향을 반영하여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다음 <표 1>와 같이 설정하였다. 단, 목표치 설정에서 청년기본법 제정으로 고려되는 보편성 확대 정책들은 신규 도입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타 정책들의 목표치 설정 방법인 전년도 성과결과 대비 상향/유지/하향보다는 도입 후, 1년 성과를 살펴본 후 결정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6 청년정책 영역별 기초방향 수립연구

(표 1) 청년정책의 영역별 정책 방향과 목표치 설정

구분		5대 대분류 정책	목표치 설정 방향	
강화 정책		일자리		
공격적 강화		- 고용환경개선	- 전년도 성과 대비 10% 상향	
점진적 강화		- 취업연계지원, 취업비용지원	- 전년도 성과 대비 5% 상향	
수정 후 강화		- 직업훈련지원	- 전년도 성과 대비 3% 상향	
보편성 확대 정책		- 대학생 취업연계 제도	- 별도 도입	
유 지 정 책	1 순 위	대분류 정책	주거	
		확대 유지	- 주택비용 지원	- 전년도 성과 대비 3% 상향
		현행 유지	- 공공주택지원, 민간주택활용	- 상기 계획 목표 적용
		일부 유지		
		보편성 확대 정책	- 대학생 전월세 프로그램 지원	- 별도 도입
	2 순 위	대분류 정책	생활	
		확대 유지	- 현금지원	- 전년도 성과 대비 3% 상향
		현행 유지	- 건강검진지원	- 3개년 평균 사업 실적
		일부 유지	- 금융환경지원	- 담당부서와 목표치 설정 논의
		보편성 확대 정책	- 청년기본소득형 생활비 지원	- 별도 도입
	3 순 위	대분류 정책	교육	
		확대 유지	- 교육비 지원	- 전년도 성과 대비 3% 상향
		현행 유지	- 인건비 지원, 진로탐색지원	- 3개년 평균 사업 실적
		일부 유지	- 연구비 지원	- 전년도 성과 대비 3% 상향 - 담당부서와 목표치 설정 논의
		보편성 확대 정책	- 국가장학금 확대	- 별도 도입
개선 정책		정책참여		
전면 개선		- 애국심 고취지원	- 전년도 성과 대비 10% 하향	
일부 개선		- 정책의견 수렴장 지원	- 전년도 성과 대비 5% 하향 - 담당부서와 목표치 설정 논의	
보편성 확대 정책		- 지역청년센터 확대	- 별도 도입	

3. 시사점 및 한계점

본 연구는 2020년 청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향후 수립해야 할 청년 정책 기본계획의 영역별 정책 수립방향과 평가관리에 관한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청년기본법 내용분석을 통해 기존 범부처가

추진해 온 선택적 청년정책이 청년기본법 제정이후에 보편적 복지정책으로서 전환한다는 당위성을 제공하였다. 둘째는 기존 범 부처에서 추진되어 온 182개 청년정책관련 사업들에 대한 현황 및 관리사항을 파악하여 향후 청년정책 수립과 관리 계획에 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 셋째는 대학 및 대학원생, 졸업 후 취업준비생, 결혼을 앞둔 직장인 등 600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존 청년정책에 대한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청년정책 기본계획에서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간의 우선순위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넷째는 향후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후 정책에 대한 관리방안으로서 평가체계를 지수화 하는 방안과 그에 부합하는 성과지표의 개발 및 목표치 설정 방향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연구진행 상에서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기존 청년정책의 현황분석을 위해 2020년 5월 기준, 182개의 정책과제를 분석하지만 보고서 작성 시점인 2020년 9월 기준으로 청년정책과제 수가 국무조정실에서 179개로 조정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현황분석 결과와 국무조정실의 현황분석 결과 간에는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는 정책범위에서 청년기본법 제4장에서 제시한 청년문화활동지원과 청년국제협력지원 정책 분야를 포함하지 못하였다. 이 두 가지 분야는 청년기본법 제정으로 인해 새롭게 청년정책으로 포함되다보니 새로운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가 부재하였기 때문이다. 셋째는 청년정책 욕구조사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준비생과 전문대 재학생, 그리고 창업희망자와 기혼직장인 및 취약계층에 대한 조사가 누락되었다는 점이다. 그 주 이유는 본 연구에 배정된 예산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청년정책간담회에 정책 수요자인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지 못한 점 등도 한계점으로 남는다.

*주요용어: 청년정책, 청년기본법, 청년정책 평가체계 및 성과지표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 1 장

연구의 개관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제3절 연구 방법

제 1 장 연구의 개관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2020년 현재,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사태로 인해 경제와 사회시스템 모두 사상초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례로 국제통화기금(IMF)은 2020년 3월부터 세계 경제성장률이 (-)성장함과 동시에 2020년 6월에는 그 폭이 더 가중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따라서 2019년 말에 예상되었던 2.0%의 한국경제의 경제성장률이 2.0%로 2020년 6월에는 (-)4.3%p 감소된 -2.1%로 예상되고 있다.

〈표 1-1〉 2020년 6월 IMF의 주요 국가의 WEO Update 전망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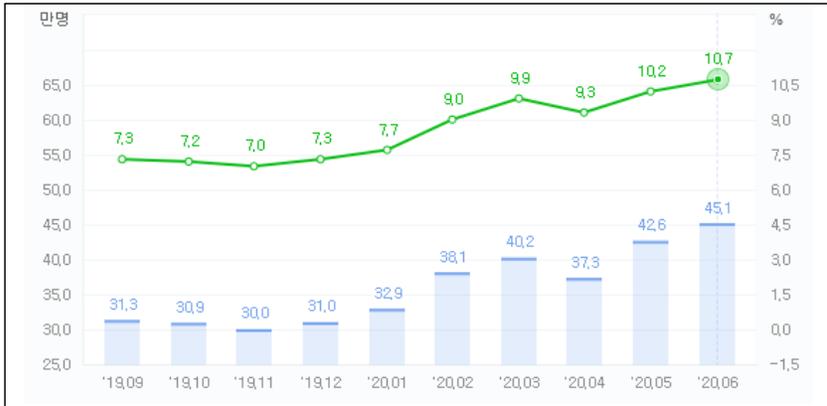
구분	19년	20.1 (A)	20.4 (B)	20.6 (C)	4월 대비 (C-B)	1월 대비 (C-A)
세계	2.9	3.3	-3.0	-4.9	△1.9	△8.2
미국	2.3	2.0	-5.9	-8.0	△2.1	△10.0
독일	0.6	1.1	-7.0	-7.8	△0.8	△8.9
프랑스	1.5	1.3	-7.2	-12.5	△5.3	△13.8
이탈리아	0.3	0.5	-9.1	-12.8	△3.7	△13.3
스페인	2.0	1.6	-8.0	-12.8	△4.8	△14.4
일본	0.7	0.7	-5.2	-5.8	△0.6	△6.5
영국	1.4	1.4	-6.5	-10.2	△3.7	△11.6
캐나다	1.7	1.8	-6.2	-8.4	△2.2	△10.2
한국	2.0	1.9	-1.2	-2.1	△0.9	△4.3

자료: IMF(2020. 6), 세계경제전망 수정(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https://www.imf.org>에서 2020. 9. 8. 인출.

이를 반영하듯 2019년 12월, 7.3%였던 청년실업률은 2020년 6월에 10.7%(청년실업자 45만 1천명)로 증가하였다. 즉, 19년 12월 총 청년실업자 31만 명의 50% 정도가 약 6개월 만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는 2020년 2월 4일 청년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아이러니 하게도 청년기본법이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청년들이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제정되었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청년기본법은 경제악화로 인한 실업으로 고통 받고 있는 청년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동시에 청년기본법 제정은 그동안 실업자, 잠재실업자, 근로빈곤층과 같이 한정된 정책 대상에 머물렀던 것에서 나아가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보편적 복지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었던 청년정책이 국무조정실로 통합·관리되어 정책의 실효성이 강화될 거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무조정실의 의뢰를 받아 청년기본법에 명시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정책적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연구로써 청년정책의 향후 정책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고에서는 정책 대상자이며 수혜자인 청년들이 요구하는 관점에서 향후 수립될 청년정책 기본계획에서 요구하는 일자리, 주거, 교육, 생활, 참여의 5대 정책 영역별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1] 청년실업률 추이(2019. 9~2020. 6)



자료: 통계청(각년도), 청년실업률 추이. <https://www.index.go.kr>에서 2020. 9. 8. 인출.

제2절 연구 내용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청년정책의 영역별 기초 방향 수립은 크게 다음과 같이 3가지 연구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청년기본법 제정으로 수립될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방향은 기존 정책과 어떤 차별성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2020년 현재 각 부처는 약 182개의 청년정책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는 기존 청년정책을 변화시켜 청년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며, 극대화 시킨다면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변화시킬 것인지와 관련이 깊다. 둘째는 ‘청년정책의 전체 방향을 변화시킨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에 집중해야 하는가?’ 하는 우선순위와 관련된 문제이다. 청년기본법 제정으로 국무조정실에 전체 청년정책에 대한 조정·심의 권한이 부여된 만큼 청년정책 전체에 대한 조정을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셋째는 청년정책의 전체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세부 정책을 도입한다

면 ‘지속적으로 어떻게 관리 할 것인가?’하는 문제이다. 즉, 청년정책의 관리를 위한 적절한 평가체제와 성과지표 도출, 그리고 목표치 설정의 기준은 무엇이며,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와 관련되어 있다.

사실, 청년기본법 제정 전후에 기존 청년정책들에 대한 검토와 청년정책 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청년기본법 제정 이전에는 청년을 복지대상자 겸 수혜자로서 어떤 정책이 지원되고 있는지, 그리고 해외에서는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초점이 맞추어 졌었다(김지경·정연순·이계백, 2015, 이철선·김문길·임성은, 2016), 그리고 청년기본법 제정과 관련해서 변금선·김기현·하형석·이용해(2019)는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청년정책의 개념과 분류체계 및 예산관리방안 등을 파악하였다. 또한 김기현·유민상·변금선·배정희·이민정·배진우(2020)는 18개 청년정책과제에 대한 실효성과 향후 개선 방안을 도출했으며, 김기현·유민상·변금선·배정희·권향원·김창환…배진우(2020)는 청년실태 및 환경 분석 등을 통해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방향과 기본계획 구성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배정희·김기현·배진우(2020)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명시된 중앙부처행정기관과 지자체의 시행계획 평가체제 및 지표를 개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과 관리 측면에서 사실상 본 연구와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큰 차이점이라면 본 연구는 청년정책의 방향을 수혜자인 청년의 수요 관점에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하며, 그리고 수혜자에 대한 목표치는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를 파악한다는 데 있다.

〈표 1-2〉 청년정책에 대한 최근 연구 동향

저자 및 연구명	주 연구 내용
김지경 외(2015),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정책 증장기 발전전략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내용)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의 개념 및 범주, 지원 정책현황, 실태 및 정책욕구 분석, 후기청소년 정책 발전 전략 · (연구방법)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 청년 면접 조사 · (연구대상) 대학 학자금 부담, 주거 형태 등에 대한 정책평가 등
이철선a 외(2016), '해외 주요국 청년정책 현황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내용) 복지정책 대상자로서 청년의 타당성 분석,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4개국의 청년정책 방향과 수단 등 · (연구방법) 문헌분석, 해외 주요국 출장조사, 국내의 전문가 간담회 · (연구 대상) 교육, 사회보험, 공공부조, 고용지원, 주거보조 등
이철선b 외(2016), '청년지원정책 해외입법사례 및 한국의 청년 및 청년가구 지원정책 제도화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내용) 복지정책 대상자로서 국내 청년 규모 파악, 청년관련법안의 필요성 검토, 해외 청년정책 입법화 사례 등 · (연구방법) 국민건강보험 기반 통계추출, 온오프 문헌조사 등 · (연구 대상) 핀란드, 오스트리아 등 EU 7개국 입법사례
변금선 외(2019), '청년정책 체계성 강화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내용) 청년정책 개념정립, 청년정책 분류체계 및 사업분석, 청년당사자 대상 정책 평가 및 수요 분석 · (연구방법) 문헌분석 및 전문가 자문, 청년당사자 인터넷 조사 · (연구대상) 주요 내용 외 조사기반 청년정책 인지를, 수혜율 등
김기현a 외(2020), '청년정책 현황 진단 및 정책추진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내용) 기존 범부처 청년정책 사업 중 총 18개 핵심 정책사업에 대한 실효성 진단 및 제고방안 · (연구방법) 문헌분석, 2차 자료 통계분석, 전문가 델파이, 청년 55명에 대한 면접조사 · (연구대상)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 총 18개 청년정책 사업
김기현b 외(2020),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내용) 청년정책의 역할과 기본계획 수립방향을 도출 · (연구방법) 문헌분석, 2차 자료 분석, 전문가 델파이 조사 등 · (연구대상) 청년실태 및 환경 분석, 청년 기본계획 수립 방향 도출 및 기본계획 안, 성과목표 및 측정지표 개발
배정희 외(2020), '청년정책 평가체계를 위한 기초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내용)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명시된 시행계획 상의 평가체계 및 평가지표 개발 · (연구방법) 문헌조사와 사례조사, 전문가 델파이 · (연구대상)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7개 시행계획 분석

이에 본고에서는 앞서 언급한 3가지 연구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총 3가지 관점에서 연구내용에 접근하고자 한다. 첫째는 청년기본법 제정으로 인해 기존의 선별적인 청년정책이 보편적인 청년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관점 하에 새로운 보편적 청년정책을 발굴하는 것이다. 둘째는 청년정책이 청년들의 행복한 삶의 영위라는 관점에서 정책 수혜자들의 욕구 파악이 가장 중요시되는 바, 대상자를 19~34세의 청년들로 한정하고, 청년이행주기 관점에서 대학생 및 대학원 재학생, 졸업 후 취업준비생, 취업 후 결혼적령기 청년으로 나누어 각 대상별 정책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셋째는 기존 범부처 청년정책이 향후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될 것이라는 가정아래 앞서 언급한 정책별 우선순위를 고려한 평가체계 및 목표치 설정이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제3절 연구 방법

본고에서는 앞서 언급한 연구 목적과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크게 4단계로 연구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청년기본법 제정이 청년정책의 정책방향 설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법제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청년기본법의 내용분석을 실시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기존 범부처 청년정책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청년추진사업단으로부터 기존 정책들의 사업기술서를 협조 받아 데이터베이스화 한 후, 그 내용을 통계 분석하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청년들의 청년정책 욕구 파악을 위하여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졸업 후 취업준비생, 취업 후 결혼 적령기 청년 등 각각 200명씩 총 600명에 대하여 인터넷 회원이 존재하는 리서치회사에 의뢰해 계층적 의사결정법(AHP)을 활용한 인터넷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앞서 진행한 3가지 분석내용을 통합 후, 일자리 등 5대 정책분야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 및 평가 전문가의 서면 자문, 그리고 문헌조사의 보완을 통해 영역별 청년정책 방향과 평가체계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것이다.

〈표 1-3〉 연구방법

목차	주요 연구 내용	연구 방법
2장	청년기본법과 정책적 고려요인	- 법제관련 전문가 자문을 통한 청년기본법 내용 분석
3장	기존 청년정책의 현황 및 특징파악	- 국무조정실의 협조를 받아 범부처 182개 청년정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후 정량분석
4장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청년들의 정책욕구 파악	- 청년정책 기초방향 수립을 위한 인터넷 조사 · (대상)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졸업 후 취업준비생, 취업 후 결혼적령기 청년 각각 200명 등 총 600명 · (방법) 쌍대비교법(AHP)을 이용한 인터넷 조사 · (내용) 일자리 정책 등 5대 영역별 정책 중요도, 5대 정책영역별 세부 정책 방식에 대한 선호도
5장	청년정책의 영역별 정책방향과 평가체계 개선	- 2장, 3장, 4장 분석결과와 통합분석 - 청년정책의 영역별 기초방향 수립을 위한 전문가 자문 · (간담회) 일자리, 주거, 생활 등 5대 정책 분야 - 각 정책분야의 평가체계 및 목표치 설정을 위한 기존 정책 성과지표와 목표치에 대한 내용분석



제2장

청년기본법 제정과 정책적 고려 요인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청년기본법 제정과 정책적 고려 요인

제 2 장

청년기본법 제정과 정책적 고려 요인

제1절 분석 개요

앞서 연구 개관에서도 언급한 바처럼 청년기본법이 제정된 이후에 청년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를 설정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목적 중 하나이다. 따라서 새로 제정된 청년기본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해 정책수립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책대상과 수립, 실행과 관리라는 4가지 차원에서 5가지 고려요인의 수준에 대해 확인하였다. 그 첫째는 정책방향에서 청년기본법이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전환하는 지 여부이다. 기존 정책들은 청년실업에 초점을 맞추어 청년실업자나 잠재실업자 청년들이 주 정책대상이었다. 둘째는 정책 대상 연령을 청년기본법에서 설정한 19~34세로 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는 창업·주거지원과 관련된 정책대상의 조정과 관련이 깊다. 셋째는 정책내용에 무엇을 포함해야 하는지와 관련된 문제이다. 지금까지 청년정책은 일자리, 주거 등 크게 5가지 내용에 주력하였지만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문화 활동이나 국제협력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포함여부의 판단이 필요하다. 넷째와 다섯째는 청년정책의 실행관점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중앙부처나 지자체에 대해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중앙부처차원에서 예산조정이나 정책의 침삭 등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가지고 있는지, 지자체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의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지자체의 시행계획 간에 어느 정도의 조정이 가능한지를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5가지 고려요인에 대해 국책연

구원 소속의 법률전문가들에게 자문을 의뢰하였다. 자문 내용은 청년기본법 본문과 시행령을 대상으로 앞서 언급한 5가지 고려요인과 관련된 내용들의 임의 및 강제규정 여부와 타 법률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확인과정과 자문은 청년기본법의 제도적 개선이 아니라 청년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청년기본법의 제정의미를 충분히 포함시키기 위한 확인과정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제2절 청년기본법 제정과 정책적 고려 요인

우선, 청년기본법의 체계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20년 2월에 제정된 청년기본법의 경우, 행정법 상 필요한 법-시행령-시행규칙 중 시행규칙이 존재하지 않는다. 청년기본법의 구성은 법 제정 취지 및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전반적 내용을 담고 있는 총칙과 청년정책 기본계획, 정책 실행상의 총괄부서 및 업무, 그리고 청년정책의 내용 등 총 4가지 부문에 부가적으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보칙 등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시행령은 법조항을 시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등을 기술하고 있는데, 주 내용은 제2장인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관련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2-1〉 청년기본법과 시행령의 구성 체계

청년기본법 [법률 제16956호, 2020. 2. 4. 제정]	청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901호, 2020. 8. 4.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기본이념)	
제3조(정의)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청년의 권리와 책임)	

청년기본법 [법률 제16956호, 2020. 2. 4. 제정]	청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901호, 2020. 8. 4. 제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청년의 날)	제2조(청년의 날)
제2장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	
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청년정책 분석·평가지원기관의 지정) 제7조(분석·평가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제10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제11조(청년 실태조사 등)	제8조(청년 실태조사)
제12조(청년정책 연구사업)	제9조(청년정책 연구사업의 위탁)
제3장 청년정책의 총괄·조정	
제13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10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 제11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제13조(조정위원회 위원의 위촉 등) 제14조(실무위원회의 구성) 제16조(전문위원회) 제18조(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
제14조(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15조(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제20조(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
제16조(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제21조(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제4장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제18조(청년 창업지원)	
제19조(청년 능력개발 지원)	
제20조(청년 주거지원)	
제21조(청년 복지증진)	
제22조(청년 금융생활 지원)	
제23조(청년 문화활동 지원)	
제24조(청년 국제협력 지원)	
제5장 보칙	
제25조(권한의 위임·위탁)	
제26조(포상)	제23조(포상)
제27조(국회 보고)	
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청년기본법 전문 및 시행령, <https://www.law.go.kr>에서 2020. 9. 8. 인출.

둘째로 금년에 새로 제정된 청년기본법의 주요 의의를 살펴보면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그동안 난립되었던 청년의 연령을 19~34세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청년의 연령은 관련 법령이나 통계수치의 산정 기준, 그리고 부처별로 매우 차별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면 청년고용촉진법의 경우 청년의 연령을 15~34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OECD 청년실업률의 경우 15~29세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년연령의 규정은 총괄적으로 청년정책의 수혜자를 규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로 이번에 제정된 청년기본법은 청년정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기존 청년정책의 경우 청년 고용정책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청년의 기본권과 관련된 정책들은 포함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도입된 청년기본권 보장과 관련된 정책은 그동안 정책 수립과정에서 누락되었던 정책수혜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어 그동안 전문가와 행정가 중심으로 이루어진 정책의 사결정과정에서 정책수혜자 중심으로 전환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세 번째는 개별 부처 중심의 정책 실행과 관리가 이제 부터는 통합적으로 전환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중앙부처 중 국무조정실이 정책의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해 정책심의와 조정, 계획 및 평가·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그동안 개별 부처 중심으로 추진되어온 정책의 실효성이 극대화되는 계기가 된다고 판단된다.

〈표 2-2〉 청년기본법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 (기본이념)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정의)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발전)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 (청년지원)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 (기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청년의 권리와 책임, 다른 법률과의 관계, 청년의 날
제2장 청년정책 등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획) ①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 (실태조사) ① 정부는 기본계획 등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공표
제3조 청년정책의 총괄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 (청년의 정책참여)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 결정과정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 - (청년정책책임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그 기관의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년정책 책임관을 지정
제4장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책)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질의 향상, 청년 창업지원, 청년 능력개발 지원, 청년주거지원, 청년 복지증진, 청년금융생활지원, 청년문화 활동지원, 청년 국제협력지원 등 총 8개 분야에 대한 시책을 마련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청년기본법 전문, <https://www.law.go.kr>에서 2020. 9. 8. 인출.
주: 청년기본법 전문 중 특정사항 만을 재인용

세 번째로 앞서 분석 개요에서 언급한 5가지 문제 중 첫 번째인 정책방향 측면에서 청년기본법 제정이 정책 방향을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전환시키는 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 법의 제정 목적을 제1조에서 살펴보면 ‘이 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

다. 그리고 제2조 1항 기본이념에서 ‘이 법은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라고 제시되어 있다. 이 2가지 내용만을 보았을 때 기존 청년정책의 대상이 실업이나 빈곤과 같은 선별적 대상의 청년이었다면 청년기본법상의 청년은 모든 대한민국의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 해석상 정책방향을 기존의 일부 대상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는 명확한 구절이 없어 강제성을 띠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제2항에서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을 달고 있어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에 기본이념상에 제2조 2항 1호부터 4호까지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수립하고, 평가 시에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청년정책 방향을 기존의 일부 빈곤층이나 빈곤층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는 청년에서 전 국민 중 청년으로 확대하는 보편적 복지정책의 기초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2-3〉 청년기본법 내용 중 보편적 복지정책에 관한 기초관련 강제규정

분류	중분류	세분류
제1장 총칙	제2조 (기본이념)	① 이 법은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 2.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참여 촉진 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마련
	제5조 (청년의 권리와 책임)	① 청년의 기본권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청년기본법 전문. <https://www.law.go.kr>에서 2020. 9. 8. 인출.
 주: 청년기본법 전문 중 특정사항 만을 재인용

둘째, 정책대상에서 청년기본법에서 적시한 연령에 한해서만 청년정책의 대상자로 결정하고 정책을 시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청년기본법 제3조 1항에서는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라고 직시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는 청년 연령을 15세~29세로 규정하면서 특정한 경우에 34세까지 인정하고 있다. 다만 고용 외 정책의 경우에는 연령범위 조정이 필요하므로 청년기본법등에서 청소년 연령 등도 고려해 청년 연령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청년기본법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상의 청년 연령의 차이와 관련해서는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 단서에서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연령에 따른 충돌 방지가 가능하다. 다만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 단서에서 “...그에 따를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강제성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표 2-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상의 청년연령

구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제1항
청년연령 관련 조항	-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시행령 제2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제2조)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 정보센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전문. <https://www.law.go.kr>에서 2020. 9. 8. 인출.

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전문 중 특정사항 만을 재인용

세 번째 고려요인은 정책내용에 어떤 것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청년기본법 제4장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에서는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제17조), 청년 창업지원(제18조), 청년 능력개발 지원(제19조), 청년 주거지원(제20조), 청년 복지증진

(제21조), 청년 금융생활 지원(제22조), 청년 문화활동 지원(제23조), 청년 국제협력 지원(제24조) 등 총 8가지 분야의 청년정책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중 청년창업지원 정책은 기존의 청년일자리 정책에 포함되고, 청년 금융생활 지원정책과 청년복지증진 정책은 기존의 청년생활지원 정책에 포함된다고 볼 때 새롭게 도입된 청년정책은 문화활동지원과 국제협력지원 2가지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각각의 정책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어 청년정책 기본계획 마련 시 정책 분야에 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네 번째는 정책실행 관점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예산조정이나 정책의 침삭 등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청년기본법 제3장 제13조 제1호에서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고 직시하면서 제2호에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총 6개 분야에 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심의·조정 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하지만 반드시 위원회의 조정 사항이 관계 행정기관 등을 구속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심의기관·협의기관·조정기관 등의 경우에는 “...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등의 표현을 사용한다. 다만, 자문위원회 중 특히 심의기관, 조정기관 등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의 기능을 “...사항을 심의한다.”라고 하지 않고 “심의·의결 한다”거나 “심사·의결 한다”는 식으로 “의결”용어를 표현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어떤 위원회든지 의결행위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 경우의 “의결”은 모든 위원회의 속성일 뿐이다. 따라서 위원회의 법적 성격은 그 설치 법령 전체를 평가하여 결정되며, 설치 근

거 규정에서“의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결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다.

〈표 2-5〉 정부 위원회 성격

구분	주 내용
심의기관으로서 위원회	- 심의기관인 위원회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다수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관하여 심의 등을 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위원회로서,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적 절차이나 그 의결내용이 관계 행정기관 등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짐
의결기관으로서 위원회	- 의결기관인 위원회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다수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고 계속성·상시성이 있는 업무에 관하여 심의·의결 등을 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위원회로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적 절차이며 그 의결내용이 관계 행정기관 등을 구속한다는 특징을 가짐

자료: 국회 법제실(2016). 법제이론과 실제. p472-474. 서울: 국회 법제실.

그러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원을 보았을 때 사실상의 구속력은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청년기본법 제13조 4항 제1호에서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하여 위원장의 경우, 국무총리가 담당하고 부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으로서 기획재정부 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장과 지장자치법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리고 청년정책 전문가와 청년단체의 장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실무위원회에서도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 차관 등 중앙행정부처 차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그리고 청년정책 전문가와 청년단체의 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6〉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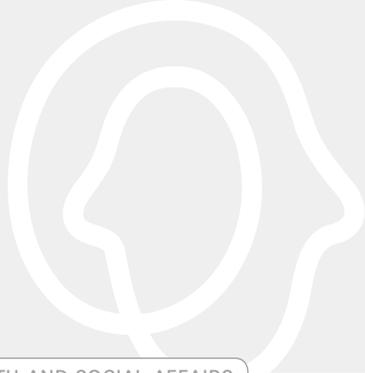
청년기본법 [법률 제16956호, 2020. 2. 4., 제정]	청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901호, 2020. 8. 4., 제정]
<p>제13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p> <p>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획재정부장관 · 교육부장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통일부장관 · 법무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보건복지부장관 · 고용노동부장관 · 여성가족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 · 중소기업부장관 · 금융위원회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p>제14조(실무위원회의 구성)</p> <p>①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중소기업처기업부 차관 및 국무조정실차장. 이 경우 복수 차관 또는 차장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 또는 차장으로 한다. 2. 법 제13조제4항 제2호에 따른 위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년단체의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청년기본법 전문 및 시행령. <https://www.law.go.kr>에서 2020. 9. 8. 인출.

주: 청년기본법 전문과 시행령 중 특정사항 만을 재인용

다섯 번째 고려요인은 중앙부처의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지자체의 시행 계획 간에 어느 정도의 협력과 조정이 가능한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두 행정조직간의 행정권한 관계 정도에 대한 조항이 강제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정책의 실효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청년기본법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부분에서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과 시행’, ‘청년정책 수립 절차 상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청년정책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시책 수립 및 실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발전과 지원 및 청년정책 관련 내용의 홍보와 교육’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규정상 대등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양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제13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2항 제6호에서 “청년정책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역할 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조정하도록 되어 있어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양자 간 역할 조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청년정책 조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에서 중앙부처 장관은 전부 포함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청년기본법 제13조 제4항 제2호)으로 되어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청년정책에 관한 역할 조정이 대등적 지위 하에서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즉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관계가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3장

기존 청년정책의 현황과 특징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기존 청년정책의 현황

제3절 기존 청년정책의 특징

제 3 장 기존 청년정책의 현황과 특징

제1절 분석 개요

우선, 2020년 현재, 범부처에서 실시중인 청년정책들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 청년추진단이 조사한 범부처 청년정책 사업에 관한 조사지를 2차에 걸쳐 협조 받았다. 1차 조사지에는 총 182개 범부처 청년정책의 분야, 과제 명, 정책대상, 2019년부터 2020년, 2개년도의 예산 등이 포함되었는데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에 관한 내용은 부재하였다. 이에 2차로 협조 받은 기존 범부처 청년 정책에는 1차 조사지에서 파악된 과제의 개관 외에 성과지표와 산정방식, 그리고 2개 년도에 대한 실적과 2020년 목표치 및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연구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청년정책의 관리 및 효과성 극대화를 위한 평가체계의 구축임으로 2차 조사지 내용을 중심으로 기존 청년정책의 현황을 분석하기로 결정하였다. 단 분석과정에서 고려되었던 문제는 제1차 조사에서 파악된 182개의 정책과제 수가 2차 조사에서는 203개로 증가한 문제였다. 이와 관련하여 분석 시점인 2020년 4월의 203개 정책 중 추가된 정책들이 청년정책으로서 검증되지 못했고, 향후 정책조사가 지속되어 그 수가 가변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분석 대상을 182개로 설정하였다.

36 청년정책 영역별 기초방향 수립연구

〈표 3-1〉 기본 범부처 청년정책 조사지의 주요 내용

구분	1차 조사지	2차 조사지(19개 항목)
대상	- 범부처 청년 정책 182개	- 범부처 청년 정책 203개
개관	- 분야, 과제 명, 정책 대상, 소관부처, 담당자	- 분야, 과제 명, 정책 대상, 지원 성격, 소관부처, 담당자
정책내용	- 목적, 주요내용, 전달체계, 추진일정, 기대효과	- 목적, 주요내용, 전달체계, 집행체계 및 추진실적
성과목표	- 無	- 지표, 실적('18, '19년), 목표치, 목표치 산출 근거, 측정방식, 자료수집방법
예산	- '19년, '20년 등 2년 치	- '19년, '20년, '21년 계획 등 3년 치
기타	- 개선사항	- 관련법령 및 비교

〈표 3-2〉 기본 범부처 청년정책의 조사지 사례

관리번호	분야	일자리			
과제 명	*****				
정책대상	대학(원)졸업예정자	지원 성격 서비스(직업훈련)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자 ****			
정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대학(원) 졸업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훈련과정 제공 및 취업지원 연계를 통해 청년의 노동시장 조기진입 촉진 ○ (주요내용) - 참여자: 훈련비 전액 지원 - 운영기관: 운영비 80%지원(20% 자부담 매칭) 				
	구분	단기과정 (현장맞춤인재양성)	장기과정 (융합인재양성)	창직과정	신직업 메이킹랩
	대상	해당분야 전공 및 전공수준 졸업(예정)자	인문·사회·예체능계열 졸업(예정)자	재학생 및 졸업예정자	만 34세이하 대한민국 청년
	교육시수	300시간 내외	500시간 내외	200 ~ 500시간	300~400시간
	지원금 (1인당단가)	7,706원×연수시간	7,706원×연수시간	260만원	493만원
	특징	전공자 및 전공자 수준의 현장맞춤형 심화과정	인문·사회·예체능계열대상 IT, SW등의 타전공 융합교육	신직업, 미래직업 창출(팀프로젝트+교육+현장탐방)	창직의 실제사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달체계) - 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 운영기관(기업, 사업주단체, 대학, 우수훈련기관) · 고용노동부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사업을 위탁 →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운영기관에서 연수과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경과 및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년 시범사업 이후 85천명의 청년이 참여 - '18년 7,937명 참여, 6,117명 수료 - '19년 6,349명 참여하여 5,161명 수료 						
성과 목표	○ 성과목표						
	성과목표 (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년	'19년	'20년			
	수료율	75.3	80.3	80	3년 평균치(77.3%) 보다 상향설정	수료자 수/참여자 수	사업실적보고자료
	취업률	63.8	63.1	65	3년 평균치(63.1%) 보다 상향설정	취업자 수/수료자 수	사업실적보고자료
예산 사항	2019 예산		2020 예산		2021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액: 21,121백만 원 ○ 재원: 일반회계 ○ 조건: 국비 80%, 운영기관 20% ○ 청년(19~34세) 예산 - 전체 사업대상의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액: 18,444백만 원 ○ 재원: 일반회계 ○ 조건: 국비 80%, 운영기관 20% ○ 청년(19~34세) 예산 - 전체 사업대상의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액: 43,202백만 원 ○ 재원 : 일반회계 ○ 조건 : 국비 80%, 운영기관 20% ○ 청년(19~34세) 예산 - 전체 사업대상의 100% 		
관련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8조의3, 제10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 *****운영 규정(고용노동부 예규 ****호) 						

자료: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2020). 청년정책 카드.

두 번째로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182개 청년정책의 경우, 엑셀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데이터베이스 작업은 크게 2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그 중 하나는 조사지에 포함된 모든 조사내용을 수록하기 보다는 각 청년정책의 각 현황을 비교분석이 가능한 변수들 즉, 연령, 예산총액, 성과지표 및 목표치 등만을 추출한 것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분석내용을 보다 체계화하기 위하여 변수들의 수준을 하위 수준별로 범주화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일자리 등 5대 대분류 정책을 각각의 유사 정책 수단을 중심으로 중분류 정책으로 세분화 한 후 수단에서도 내용 간에 차이가 뚜렷한 경우 세분류 정책으로 범주화하였다. 예를 들어 정책 수가 가장 많은 일자리 정책의 경우, 정책 수단의 이질성을 고려해 고용환경개선, 취업비용지원, 직업훈련지원, 취업연계지원으로 나누

후 직업훈련지원정책은 그 내용의 차이에 따라 다시 직무교육, 국내기업 체험 등으로 세분화 하였다. 결국 전체 182개 범부처 정책은 <표 3-3>과 같이 5대 대분류 18개, 중분류-7개, 세분류로 범주화하였다. 또한 정책수혜 대상은 정책수혜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청년 이외에 정부로부터 직접 교육비와 운영비를 지원 받는 대학, 관계기관, 기업 등으로 범주화하였다.

<표 3-3> 기본 범부처 청년정책 182개의 범주화 내용

대분류	중-세분류	내용	사례
교육정책 : 대학생 및 대학원생, 청년구직자, 결혼을 앞둔 청년직장인들의 진로탐색, 대학교육, 연구, 그리고 청년대상 교육기관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부의 교육정책	교육비 지원	- (대학생) 대학등록금 및 장학금, 학자금 상환 - (대학원생) 전공 관련 연구를 위한 해외연수비용 - (구직자) SW부문 교육비용을 국가가 제공	- 대학 국가장학금 지급, 대학입학금 면제, 학자금 상환 부담 경감 등
	연구비 지원	- (정보통신 등 이공계 대학원생) 정부가 대학이나 연구소에 연구비용을 지급	- 차세대 공학 연구자 육성, ICT 석·박사 연구역량 강화사업 등
	인건비 지원	- (이공계 대학생) 에너지, 정보통신 등과 관련된 교육에 참가하면 훈련수당을 제공	- 에너지인력 양성사업,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 등
	진로탐색	- (대학생)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외 현장학습을 지원하거나 진로설계 과정을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정책	- 대학생 해외연수 기회 확대, 대학 진로탐색 학점제 등
생활: 청년들이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건강검진, 생활비를 조달 지원하는정책	건강검진	- (20~30대 및 사회복무요원) 국가가 건강검진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건강보험료를 지원	- 2~30대 청년세대 국가 건강검진 확대, 사회 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 지원 등
	금융환경 지원	- (저신용, 저소득 대학생) 생활자금 및 대환자금 대출	- 청년, 대학생 햇살론
	현금지원	- (저소득, 미혼모 청년) 정부가 생활비를 현금 지원	- 근로 장학금, 근로소득 공제, 아동양육비 등 지원
일자리: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미취업청년의 취업연계 및 직업훈련, 불합리한 고용환경개선, 그리고 지역일자리, 지	취업연계	- (구직자) 구인기업과 연계하는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군인, 사회복무요원, 미취업 청년의 취업연계
	취업비용 지원	- (구직자) 지역일자리, 지역 중소기업 취업자를 위한 현금지원	- 금융업종, 군 제대 청년들에 대한 취업 박람회
	-수당지급	- (훈련생, 구직자, 중소기업 재직자) 관련 수당을 제공	- 청년구직 활동지원금, 중소기업 재직자 교통비 지원 등

대분류	중-세분류	내용	사례
역중소기업 취업자를 위한 현금지원 등을 포함	- 월급보조	- (인턴십, 생활지도사, 농업법인, 사회서비스, 지역 중소기업) 지역일자리 취업청년과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게 인건비 보조	-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지역중소기업 R&D 산업 인턴사업 등
	- 자산형성	- (중소기업 청년취업자) 자산형성을 위해 정부가 보조	-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환경 개선	- 공평하고 투명한 청년채용 및 중소기업 등의 근로환경개선 추진	- 청년채용 중소기업 근무 환경개선, 공공기관채용 비리근절
	직업훈련 지원	- (구직자) 국내의 현장체험, 자격증 취득, 직무교육 등을 지원	- 항공, 수산업 등 관련업 종 직무교육 사업
	- 국내기업 체험	- (구직자) 국내 중소기업 탐방, 인턴십 등을 통해 구직자의 실무역량을 강화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해양수산 분야 인력 양성 등
	- 자격증 취득	- (군 복무, 위기청소년) 자격증 취득 지원	- 군 복무 중 자기개발 지원
	- 직무교육지원	- (구직자 및 취업자) 산업현장 맞춤형 직무교육관련 훈련비, 시설, 장비 등 지원	- 국가전략산업, 해상, 신 직업, 지역 문화인력 등
	- 해외체험	- (구직자) 해외 기업 등 현장체험 기회 및 비용 제공	- 해외건설 청년일자리 창출, 수산식품 수출 청년 개척단 등
	창업환경 조성	- (청년창업가) 창업자본 조달, 사무실 임대, 사업비 제공 등	- 대학 창업펀드, 청년창업펀드 조성 및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창업훈련 지원	- (문화, 예술, 농식품 관련 창업가) 창업관련 훈련기회 제공 등	-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청년귀농 장기교육 등	
주거: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비용 절감 대책	공공주택 지원	- (대학생) 기숙사 - (결혼적령기 청년) 공적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제공	- 대학기숙사 확충, 청년맞춤형 공적임대 주택 공급 등
	민간주택 활용	- (청년) 정부가 주택임대 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청년들에게 저가로 임대주택을 제공, 또는 역세권 고시원 등을 임대주택으로 제공	- 집주인 임대주택 활성화, 역세권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주택비용 지원	- (청년) 주택마련비용을 지원하기위해 정부가 저리로 전월세 자금을 지원	- 청년 전,월세 지원 확대
참여 : 정부가 청년들의 정책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정책	애국심 고취	- (청년) 국토나 독립운동 사적지 순례 등을 통해 청년들의 애국심 고취를 지원	- 대한민국 해양영토 대장정 등 사적지 탐방
	의견 수렴	- (청년) 정부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프로그램지원	- 청년정책토론회, 군경장병을 위한 이동신문고 등

제2절 기존 청년정책의 현황

2020년 4월 기준, 범정부 차원에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해 온 182개 청년정책을 현황을 살펴보면 크게 일자리 등 5대 대분류 하에서 총 182개로 집계된다. 그리고 정책의 소관부서별로 살펴보면 182개 청년정책 중 고용노동부가 22개(12.1%)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21개, 11.5%), 국토교통부(18개, 9.9%), 중소벤처기업부(16개, 8.8%), 금융위원회(15개, 8.2%)의 순이다. 즉 전체 30개 부처 중 금융위원회 등 상위 5개 부처가 청년정책의 약 50.5%인 92개의 청년정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이다.

(표 3-4) 부처별 청년정책 현황

(단위: 개, %)

구 분	청년정책 대분류					전체	
	교육	생활	일자리	주거	참여	정책 수	정책 비중
고용노동부			22			22	12.1
공정거래위원회					2	2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6		5			21	11.5
교육부	9		2	1		12	6.6
국가보훈처			2		1	3	1.6
국민권익위원회			1		5	6	3.3
국방부		2	2			4	2.2
국토교통부	2		6	10		18	9.9
금융위원회		7	7	1		15	8.2
기획재정부			2			2	1.1
농림축산식품부	1		10	1		12	6.5
농촌진흥청	2					2	1.1
문화체육관광부			7			7	3.8
방위사업청	1					1	0.5
법무부			1			1	0.5
병무청		1	3			4	2.2

구 분	청년정책 대분류					전체		
	교육	생활	일자리	주거	참여	정책 수	정책 비중	
보건복지부		5	1			6	3.3	
산림청			1			1	0.5	
산업통상자원부	4		3			7	3.8	
식품의약품안전처			1			1	0.5	
여성가족부	1	1	3		1	6	3.3	
외교부			1			1	0.5	
인사혁신처			1			1	0.5	
조달청			1			1	0.5	
중소벤처기업부			16			16	8.8	
통일부			1		1	2	1.1	
해양수산부			3		1	4	2.2	
행정안전부			2		1	3	1.6	
환경부	1					1	0.5	
총계	합계 수	37	16	104	13	12	182	100
	합계 비중	20.3	8.8	57.1	7.1	6.6	100.0	-

주: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2020). 청년정책 사업기술서를 재분석.

1. 교육 관련 정책

청년정책 중 교육정책은 총 37개로 파악되고 있다. 중분류 수준으로 살펴보면 교육비 지원(21개, 56.8%), 연구비 지원(6개, 16.2%), 인건비 지원(6개, 16.2%), 진로탐색지원(4개, 10.8%)으로 구분되며, 교육비 지원이 교육정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먼저, <표 3-5>의 교육비 지원정책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장학금 지원 및 학자금 대출 지원정책과 특수 산업 분야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위한 교육인프라 마련과 각종 장학금, 생활비, 훈련 및 연수비 지원정책으로 구성된다. 대표적인 장학금 지원정책인 국가장학금은 저소득층·중산층 이하 가정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연간 최대 520만원까지 지원해주며, 소득수준과는

별개로 대학 내 자체 기준에 따라 선발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등록금을 대출을 통해 지원하는 학자금 대출 지원정책도 활성화 되어 있으며,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에게 교육기간 동안 저리로 학자금을 빌려주고 취업 후나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학자금 상환부담 경감 정책도 시행되고 있다. 한편, 소프트웨어 분야, 정보보호 및 융합보안 분야, 물 산업, 무역 및 물류산업, 방위산업, 스마트시티 및 농업분야 등 특정 산업분야의 인재육성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지원 정책도 있다. 지원내용으로는 장학금뿐만 아니라 각종 기자재 및 설비 지원 등 교육 인프라 개선부터 해외연수, 실습 관련 프로그램 제공 및 교육비 지원까지 다양하다.

〈표 3-5〉 5대 영역 중 교육 관련 정책 - (1) 교육비 지원 정책

종분류	과제명	지원내용	대상
교육비 지원 (21개)	대학 입학금 부담 완화	- (국공립대) 2018년도부터 입학금 폐지 - (4년제 사립대/전문대) 2018년도부터 입학금 단계적 폐지	대학생
	국가장학금 확대	- (I유형) 소득수준에 따라 연간 67.5~520만원 지원 - (II유형)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선발 지원	대학생
	학자금 상환부담 경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등록금 실소요액 및 생활비 연 300만원 이내 지원 -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등록금 실소요액, 생활비 연 300만원 이내 지원	대학/ 대학원생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	- 현장실습 참여 학생의 안전 및 학습권 보장 -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비, 학생직접지원비 지원 - 전담노무사제 운영	고등 학생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	- (I유형) 등록금 전액 및 취·창업 지원금 학기당 200만원 지원 - (II유형) 등록금 전액 지원	취준생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학생 지원	- 현장실습 참여시 월 60만원 지원(평균2개월)	고등 학생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 (대통령과학장학생) 등록금, 학업장려비 학기당 250만원, 기초수급자 생활비 학기당 250만원 - (이공계국가우수장학생) 등록금, 기초수급자 생활비 학기당 250만원	대학원생

종분류	과제명	지원내용	대상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 SW 인재양성을 위한 2년 비학위 과정의 교육 및 교육 지원금 제공	일반 국민
	SW중심대학	- 2019년 40개 대학 지원, 지원기간 4+2년, SW 교육혁신을 위한 교수채용, 실습기자재, 장학금, 산학프로젝트 등 예산지원	대학생
	SW마에스트로 과정 (전문가 멘토링을 통한 최고급 SW인재 양성)	- 24시간 개발 공간 및 개발 활동비(월100만) 제공, 전문가 멘토링 및 기술창업 교육, 최우수 상위 10%에게 인증서와 해외연수 지원	창업 지원자
	차세대보안리더(BoB)	- 정보보호 최고전문가 멘토링 중심의 도제식 교육 및 프로젝트 수행 등 리더급 화이트해커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 제공	취준생
	정보보호특성화대학	- 정보보호 관련 학과전공 등 운영에 필요한 전문 실습장 구축, 커리큘럼 개발 및 산학협력 등 지원(학교당 5억 원 규모로 최대 6년간 지원)	대학생
	융합보안핵심인재양성	- 융합보안 석사과정 운영에 필요한 전문 실습장 구축, 커리큘럼 개발 및 산학협력 프로젝트, 해외연수 등 지원(학교당 7억 원 규모로 최대 6년간 지원)	대학원생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인력 양성	-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기관인 ICT 폴리텍대학 산업학사학위과정 운영비 지원	취준생
	농업분야 취·창업 연계 장학금	- 매학기 등록금 전액, 학업장려금 200만원(최대 4회)	창업 지원자
	지역전문가 양성 및 공급 (대학생 대상 지역특화 무역전문가 양성 교육)	- 전국 20개 대학 재학생 800명을 대상으로 무역 실무교육, 특화지역 교육(언어, 상권습, 시장진출 전략 등), 해외마케팅 현장실습 등 480시간 교육 (교육비, 산학협력 현장 실습비, 인건비 등 지원)	대학생
	물 산업 프로젝트 매니저 양성사업	- 5개월 집합 직무교육 및 현장교육, 교육훈련지원금, 사이버보수교육(어학, 자격증취득, 취업대비 등) 등 지원	대학생
	물류전문인력 (고교, 대학)양성지원	- 물류전문인력에 대한 맞춤형 교육, 현장실습·국내외 연수, 물류시스템 구축 및 장비운용 등 글로벌 물류인력 및 기능인력양성 교육	취준생
	스마트시티 혁신인재 육성	- 대학원 내 스마트시티 학과 또는 관련 트랙 설치, 분야별 특성화 프로그램, 국제적 연구 활동 및 전문 교육을 위한 교수 및 인프라를 제공	대학원생
	대졸청년에 대한 방위산업 분야 전문교육제공	- 방위산업 전문교육 6개월 과정(이론 4개월, 현장체험 2개월)	대학생
	스마트농업 전문가 육성	- 스마트농업 전문가 양성 교육(작물특성, 현장에 로기술, 빅데이터 분석방법 등)	대학생

주: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2020). 청년정책 사업기술서를 재분석.

다음으로 <표 3-6>의 연구비 지원 정책은 이공계 분야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자들을 위한 연구비 지원이 주된 내용이다. 신진연구자 기초연구비 지원정책은 분야를 특정하지 않고 연구자에게 직접 지원되는 유일한 정책이며, 그 외 연구비 지원정책은 공학, 정보통신(ICT), 인공지능, 혁신성장분야 산업 인재 육성을 위해 정부가 연구소 또는 대학에 연구비용을 투자·지원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표 3-6> 5대 영역 중 교육 관련 정책 - (2) 연구비 지원 정책

중분류	과제명	지원내용	대상
연구비 지원 (6개)	신진연구자 기초연구비 지원	- (신진연구) 연평균 1억 원 이내, 1~5년간 연구비 지원 - (생애첫연구) 연평균 0.3억 원 이내, 1~3년간 연구비 지원	박사 학위자
	차세대 공학연구자 육성	- 사업단(대학)별로 약 5억 원 내외 PBL 과제비 지원	박사 학위자
	ICT 석박사 인재의 글로벌 연구 역량 강화	- 사업 지원 유형(협력 프로젝트형, 인턴십형, 위탁교육형)과 대상자의 역량 및 수준 등을 고려하여 연구비, 인건비, 체재비 등 지원	대학원생
	ICT 석박사 인재의 핵심 기술관련 R&D 역량 강화	- 대학(원) 교육 및 연구소 연구에 필요한 인건비, 연구비, 연구 활동비 등 지원	대학원생
	인공지능 핵심 고급인재 양성	- 인공지능 분야의 대학원생에게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육 및 연구 활동비 지원(인공지능대학원/인공지능학과를 지원)	대학원생
	혁신성장 글로벌 인재양성	- 해외연구기관에서 혁신성장분야 R&D 관련 공동프로젝트수행에 필요한 파견연구자 지원금(인건비, 체재비, 연구비 등)지원	대학원생

주: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2020). 청년정책 사업기술서를 재분석.

<표 3-7>의 인건비 지원 정책은 특정 산업 관련학과 대학생 및 대학원생 또는 구직자에게 교육 인턴십의 기회를 제공하고, 인건비 또는 수당, 교육비, 체재비를 지원해주는 정책이다. 다시 말해, 교육훈련 참여에 대한 수당이라고 할 수 있다. 인건비 지원에는 공공기관 주관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원정책이 있는데 정보통신기획평가원(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한국인터넷진흥원(K-Shield 주니어), 농촌진흥청(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과 같은 공공기관이 국내 또는 해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예이다. 한편 인건비 지원의 또 다른 종류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이나 고부가가치 및 미래 산업에 참여하는 대학 및 연구소의 학생 인건비 지원이 있다.

〈표 3-7〉 5대 영역 중 교육 관련 정책 - (3) 인건비 지원 정책

중분류	과제명	지원내용	지원대상
인건비 지원 (6개)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주관 국내외 인턴십 프로그램에 필요한 실습생 수당 등 지원	대학생
	K-Shield 주니어	- 한국인터넷진흥원 주관 하에 산업계 교육수료를 반영한 정보보호 전문교육 지원(4개월, 교육수당 월 20만원 총 3회 제공 등)	취준생
	청년과학기술인 연구 환경 개선	- 학생인건비 안정적 지급을 위한 통합관리제도 개선 - 출연연 학생연구원 근로계약 체결 및 과기원 학생연구원 학생맞춤형 장려금 포트폴리오 도입 등	대학원생
	산업 전문인력 역량강화사업	- 고부가가치산업 및 미래 산업의 R&D기초 및 고급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학생인건비, 교육과정개발비, 산학프로젝트비 등 지원	대학/ 대학원생
	에너지인력 양성사업	- 에너지 분야 대학(원)생 학생인건비, 교과과정개발비, 산학프로젝트비 등 지원 - 해외 연구기관에서 공동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파견 연구자 지원금 지원	대학/ 대학원생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 (글로벌 농업 인재양성)	-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센터에 파견 - 항공료, 인건비, 주택지원비, 어학지원비 등 지원	대학생

주: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2020). 청년정책 사업기술서를 재분석.

마지막으로 진로탐색 관련 정책은 〈표 3-8〉에서 보듯이 학교에서 직장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는 청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미리 결정할 수 있도록 기업과 약정하여 기업에서 필요한 기본 직무교육을 미리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과 진로설계 과정을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사업, 그리고 후기청 소년들에게 인생설계를 자문·지원해 주는 프로그램들이 있다.

〈표 3-8〉 5대 영역 중 교육 관련 정책 - (4) 진로탐색

중분류	과제명	지원내용	지원대상
진로 탐색 (4개)	대학생 대상 해외연수 기회 확대	- 대학/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WEST, 파란사다리 사업에 따라 파견기간 및 국가별 항공료, 체제비 등 지원	대학생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 대학에서 1년간 전공기초능력과 현장실무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약정기업에 취업하여 해당 직무 관련 심화교육 및 직무역량 고도화	대학생
	대학 진로탐색학점제 확산 지원	- 대학생이 자기 주도적 진로활동을 스스로 설계 수행하고 이를 평가 및 학점으로 인정	대학생
	후기 청소년 (19~24세) 자립 지원	- 주거 안정에 기반한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 자립 지원관 운영, 비진학 후기청소년 인생설계프로그램 운영	일반 국민

주: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2020). 청년정책 사업기술서를 재분석.

2. 생활 관련 정책

다음으로 〈표 3-9〉의 생활 관련 정책은 일반 국민, 대학생, 저소득 청년을 정책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유형(중분류)에 따라 정책 대상을 달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각 유형을 살펴보면, 크게 건강검진(3개, 18.8%), 금융환경지원(7개, 43.8%), 현금지원(6개, 37.5%)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건강검진은 주로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금융환경지원은 대학생 또는 저소득 청년, 현금지원 정책은 주로 저소득 청년을 위한 정책으로 분류된다. 건강검진 정책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건강에 대한 관심과 지원정책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국가건강검진의 기회를 확대 재공하고, 정신질환 발병 위험이 높은 시기에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을 늘리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그 외에도 사회복지요원 건강보험료 지원정책도 있다. 다음으로 금융환경지원 정책은 직장에 다니지 않는 대학생들까지도 최대 1,2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청년·대학생 햇살론 정책과 신용평가 및 회복을 지원하는 정책,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정책을 포함한

다. 또한 청년 병사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적금상품도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금지원 정책은 주로 생활안정이 필요한 저소득층 청년들이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자산형성 통장사업, 근로인센티브, 자립촉진수당과 같은 현금성 정책 수단을 지원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희망키움통장이나 청년저축계좌 신설 사업은 본인 납입금에 정부가 일정 금액을 매칭해 적립하고, 그 기한이 만료되면 목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다. 그리고 빈곤청년에 대한 근로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의 자녀들,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은 한부모 가구 자녀들을 위한 빈곤예방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이다. 이외에도 군인연금 미 수혜 전역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 가입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표 3-9〉 5대 영역 중 생활 관련 정책

중분류	과제명	지원내용	지원대상
건강 검진 (3개)	20~30대 청년세대 국가건강검진 확대 실시	- 1회/2년 일반건강검진 및 20·30세 2회 우울증 검사 무료 실시	일반 국민
	청년층 정신건강 서비스지원 확대	- 조현병 등 주요 정신질환을 처음 진단받은 환자 에 대한 치료 집중지원, 상담 및 치료연계 등 지 속치료지원	일반 국민
	병역이행 중인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 직장가입자 중 휴직자인 사회복무요원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10만원까지)	군인
금융 환경 지원 (7개)	청년병사 목돈 마련 지원	- 병사들의 목돈 마련 관련 은행 적금상품 개선(적 금상품 운용은행 확대, 월 적립한도 상향 등)	군인
	청년 신용회복 지원	- 채무조정제도 안내 활성화, 채무조정 연계지원 및 신용교육 인센티브 제공 등	저소득 청년
	청년·대학생 금융현장소통	- 청년·대학생 현장메신저(15명)를 구성하여 분기 1회 간담회 개최, 청년관련 특장소비자 대상 현 장소통 간담회 개최(수시)	대학생
	사회초년생의 신용평가 불이익 완화	- 금융이력 부족자 등에 대한 개인 신용평가체계 개선(체크카드 사용실적 등 다양한 비 금융정보 반영하여 신용점수 불이익 완화)	대학생

48 청년정책 영역별 기초방향 수립연구

중분류	과제명	지원내용	지원대상
	청년 금융교육 지원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여신금융협회 등 유관기관(금융교육 콘텐츠 마련 및 전달)과 대학교 등을 통해 금융교육 제공	대학생
	청년·대학생 금융 지원 (청년·대학생 햇살론)	- 생활자금 및 대환자금 대출 (대출한도 1,200만원, 금리 연 4.5~5.5%, 거치기간 최대 7년, 상환기간 최대 7년)	대학생 및 저소득 청년
현금 지원 (6개)	군인연금 미 수혜 전역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허용(협의 중)	- 연금 수혜기간을 채우지 못한 전역 군인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여 재취업기간 동안 실업급여 지급을 통해 생활안정 보장 및 구직활동 촉진(기대효과)	군인
	근로빈곤 청년 자산형성 지원 (청년희망키움통장)	- 매월 1인 평균 40만원(근로·사업소득 공제 10만원 + 근로 장려금 30만원) 적립, 3년 후 약 1,500만원 수령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시행	저소득 청년
	빈곤 청년에 대한 근로인센티브 확대	- 근로소득공제 - 수급가구 자녀의 취업에 따른 자립지원별도가구 보장 기간을 고교 졸업 후 7년, 대학졸업 후 5년간 적용 - 자립지원별도가구보장 중인 부양의무자로서 가구 월 소득 258만 원 이하인 청년 1인 가구주에 대해서 부양비 면제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대학생청년에 대해 등록금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저소득 청년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 아동양육비(월 35만원) - 검정고시 학습비(연간 154만원 이내 최대 2년) - 고교생교육비 실비(최대 500백만 원) - 자립축진수당(구직, 교육활동시 자립 활동비 월10만원)	저소득 청년
	청년형 ISA 운영	- ISA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하고, 금융상품별 손익을 통산하여 순이익에 세제혜택 부여	취업자
	청년저축계좌 신설	- 본인저축액 매월 10만원, 정부지원금 매월 30만원 총 월 40만원 저축하여 3년간 1,440만원 저축 지원	저소득 청년

주: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2020). 청년정책 사업기술서를 재분석.

3. 일자리 관련 정책

청년정책 5대 대분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은 총 104개로, 중분류 수준으로 살펴보면 취업연계지원(18개, 17.3%), 취업비용지원(18개, 17.3%), 고용환경개선(5개, 4.8%), 직업훈련지원(30개, 28.8%), 창업환경조성(24개, 23.1%), 창업훈련지원(9개, 8.7%)으로 분류할 수 있다.

취업연계 정책은 미취업 청년들을 구인기업과 연계해주는 일종의 취업지원서비스이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취업연계 정책은 크게 청년들에게 진로 및 취업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심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미취업 청년이 주된 정책의 대상이며, 그 외에도 군복무 청년에게 특화된 취업연계 지원정책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진로 및 취업상담서비스 관련 정책의 경우에는 대학일자리센터, 청년 희망 멘토링, 미취업 청년에 대한 단계별·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가 있으며, 균형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도 운영되고 있다. 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서비스는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기업탐방기회와 같은 방식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표 3-10〉 5대 영역 중 일자리 관련 정책 - (1) 취업연계

중분류	과제명	지원내용	지원대상
취업 연계 (18개)	청년장병 진로·취업지원 강화	- 찾아가는 진로도움 교육 운영 및 현장채용행사 개최, 취업상담 및 중견기업 방문기회 제공 등	군인
	청년의 지역안착유도를 위한 지역기업 인식개선 및 취업연계 지원	- 지역 우수기업 발굴 및 탐방 지원, 청년 지역 기업 심층탐색을 위한 희망이음경진대회	취준생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강화	- 공공기관 등에게 매년 정원의 100분의 3이상씩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부과(청년 만15~34세 이하)	취준생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 중소기업 정책자금 선정, 세무조사제외선정, 병역특례업체선정 등에 우대	취준생

50 청년정책 영역별 기초방향 수립연구

중분류	과제명	지원내용	지원대상
	대학일자리센터	- 진로지도 및 취·창업 서비스 제공	대학생
	미취업 청년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제공	- 상담 및 진단(참여수당 최대 20만원), 직업능력향상(최장 8개월간 훈련비 200만원(내일배움카드), 참여수당 최대 40만원, 취업알선	취준생
	청년희망멘토링 프로그램(청년센터)	- (온라인청년센터) 독립홈페이지를 통해 중앙·지자체 청년정책, 청년공간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 (오프라인청년센터) 지자체 청년센터를 통해 정책연계·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직업진로탐색 프로그램 운영지원	일반 국민
	항공일자리 취업지원 센터를 통한 항공 산업 분야 취업지원 강화	- 항공일자리 채용정보 및 취업전문 상담서비스 (멘토링) 제공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취준생
	우수벤처기업 공동 채용	- 온라인(취업포털 등), 신문, 대학 순회 설명회 및 박람회 등을 통한 공동채용 참여기업의 채용정보 전달 및 채용 매니저의 구인구직 매칭을 통한 채용연계지원, 채용자 대상 공동훈련을 통한 조기이탈방지	취준생
	좋은 일자리 중소기업 플랫폼	- 정부·지자체 인증한 우수 중소기업 정보를 통합 플랫폼을 통해 유형별로 제공	취준생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 개최 지원	- 6개 금융협회 주최, 금융위원 후원으로 59개 금융기관이 참여하여 면접, 상담 등 금융권 채용관련 행사 진행	취준생
	청년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서비스 지원	- 취·창업 컨설팅 및 알선, 직업교육훈련, 전직지원금 지급	군인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보호대상 미등록 경상이자에 대한 취업 지원	- 제대군인지원센터 취업서비스(v-net 회원 가입일로부터 2년간 3회 이내 지원)	군인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도 (7·9급)	- (지역인재 7급)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학교추천을 거쳐 선발, 1년간 수습근무 후 일반직 7급 공무원으로 임용 - (지역인재 9급) 특성화·마이스터고 등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학교추천을 거쳐 선발, 6월간 수습근무 후 일반직 9급 공무원으로 임용	취준생
	청년고용우수기업 및 청년 기업에 대한 조달우대강화	- 청년고용우수기업에 물품 및 일반용역 입찰 시 가점 강화, 다수공급자계약 납품 업체 선정 시 평가 우대, 3억 원 이하 건축 설계 공모에 대하여 청년건축사 제한 공모	취준생
	입영 前 병역진로설계 (취업맞춤특기병 확대 포함) 추진	- 생애 설계적 관점에서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강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연계, 각 군 취업맞춤특기병 활성화 추진	군인

중분류	과제명	지원내용	지원대상
	산업기능요원 채용박람회	- 청년일자리창출 및 중소기업인력난 완화를 위해 군충원에 자장이 없는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지원규모 확대	취준생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무요원 사회진출 지원	- 심리상담·치유프로그램 이수 후 소집하여 복무의욕 고취 및 성실복무 유도, 자격·전공 연계 배치로 사회진출지원, 정신질환자·수형자 등 복무부실 우려자 맞춤형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	군인

주: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2020). 청년정책 사업기술서를 재분석.

다음으로 취업비용지원 정책은 취업준비생과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현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이다. 취업비용지원 정책은 세 가지의 세 분류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수당지급(6개, 33.3%), 월급보조(10개, 55.6%), 자산형성(2개, 11.1%) 정책이 이에 해당된다. 수당지급 정책은 미취업자들을 대상으로 구직활동을 장려하는 수당지원 정책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대표적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한 제도로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이다. 다음으로 월급보조 정책은 정부가 중소기업이나 지역 일자리에 취업한 청년들의 인건비를 기업에 보조해주는 방식이며, 자산형성 지원정책은 중소기업 취업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청년들의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방식의 지원이라 할 수 있다.

〈표 3-11〉 5대 영역 중 일자리 관련 정책 - (2) 취업비용지원

중분류	세분류	과제명	지원내용	지원대상
취업 비용 지원 (18개)	수당 지급 (6개)	고교취업연계장려금	- 학생 1인당 총 3백만 원 지원	고등학생
		연구개발성과의 기업이전 촉진	- 66개 대학 청년TLO 4,000명 인건비, 대학운영비 지원 - 훈련생 연수 수당(월 1백만 원)과 훈련과정 운영(1인당 월 0.5백만 원 내외)을 위한 비용 지원	취준생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	- 학·석·박사 연수 특별로 연수수당 지원, 이공계인력증개센터를 통한 취업연계 지원	박사 학위자

52 청년정책 영역별 기초방향 수립연구

중분류	세분류	과제명	지원내용	지원대상
월급 보조 (10개)		산업단지 중소기업 재직 청년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교통비 지원	- 월 5만원 한도의 교통비 지원(신용, 체크 카드 발급 후 사용)	중소기업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 (I 유형)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 촉진수당(50만원×6개월) - (II 유형)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 활동비용 일부 지원	취준생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취업지원 (내일이룸학교)	- 자립장려금 월30만원 훈련기간 동안 지원(3~11개월)	취준생
		중소기업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 2021.12.31.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연간150만원 한도로 5년간 소득세 90% 감면	중소기업 청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 청년일자리 기본유형(지역정착지원형, 창업투자생태계 조성형, 민간취업 연계형)에 근거하여 청년인건비, 창업지원, 일·경험 제공 등 지원	취준생
		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십 사업	- 데이터 관련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공공기관 일체형 기회제공(전문교육 2개월, 일·경험 지원금 월 160만원 4~6개월간 지원)	취준생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 생활체육지도자를 시도체육회에서 채용하여 월급여 2,274천원 지급	취준생
		농업법인 취업지원	- 청년인턴 1인당 월 100만원 한도에서 월 보수의 50% 이내, 연간 600만원(최대6개월)까지	창업 지원자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일자리 지원	- 초기 중견기업이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 시 최대 3년간 계약연봉의 40% 이내 지원	박사 학위자
		청년층 건강개선 및 일자리창출(청년사회서비스지원사업)	- 17개 시도별 청년사업단에서 청년을 채용하여 청년대상 신체·정신건강 개선을 위한 사회서비스 개발·제공	일반 국민
청년 정규직 추가 고용한 중소·중견기업 인건비 지원	-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900만원을 3년간 지원	중소기업 청년		
지역중소기업 R&D 산업인턴 지원 사업	- R&D인턴 사업운영 비용 컨소시엄 당 평균 3.05억 원 지원	중소기업 청년		
고용증대세제(청년 고용 시 공제액 우대)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수 증가 시 고용 증가인원 1인당 400~1,200만원 세금 공제(중소중견기업 3년간, 대기업 2년간)	취업자		

중분류	세분류	과제명	지원내용	지원대상
	자산 형성 (2개)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기업과 공동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시 지원금 지원	중소기업 청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청년 720만원(5년), 기업 1,200만원(5년), 정부 1,080만원(3년)을 공동 적립하고, 5년 장기 재직시 공제금 3천만 원 청년근로자에 지급	중소기업 청년

주: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2020). 청년정책 사업기술서를 재분석.

〈표 3-12〉의 고용환경개선 정책은 말 그대로 청년들이 고용되어 있는 사업장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공정한 채용 조건을 마련하는 정책들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사업장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으로는 청소년·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이 일하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과 중소기업 취업청년들의 계속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근무환경 개선정책이 있다. 대표적인 채용조건 개선 정책에는 최근 공공에서 민간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NCS 기반의 능력중심 채용 및 블라인드 채용 정책이 있으며,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 추진 정책도 시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청년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분석 및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청년고용지원 정책도 한국고용정보원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표 3-12〉 5대 영역 중 일자리 관련 정책 - (3) 고용환경개선

중분류	과제명	지원내용	지원대상
고용 환경 개선 (5개)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강화	- 소규모 영세사업장 등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만개소를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점검 실시 -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를 위해 기초노동질서 현장 홍보 및 계도,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강화	아르바이 트생
	NCS기반 능력중심 채용 및 공공/민간 블라인드 채용	- 관계부처 합동으로 「평등한 기회·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 발표, 부문별 가이드라인 제공 및 공공민간 컨설팅, 정보제공 등 지원	취준생

중분류	과제명	지원내용	지원대상
	청년고용지원	- 한국고용정보원을 통한 청년고용정책 심층 모니터링, 대학일자리센터 컨설팅 및 운영지원, 청년고용정책참여단 기수별 운영, 청년 사회생활 실태조사, 청년고용인식 및 정책 인식 조사를 통한 분석 및 제언, 대학 진로취업 관련 콘텐츠 개발보급	취준생
	청년채용 중소기업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 지원	- 화장실·샤워실 설치 및 개·보수 비용의 40% 지원 (기업 당 최대 2,000만원 한도, 2020년 100개사)	중소기업 청년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	- 공공기관 대상 채용비리 연루자 제재강화, 기관 내·외부 통제 강화, 채용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 채용비리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취준생

주: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2020). 청년정책 사업기술서를 재분석.

다음으로 <표 3-13>의 직업훈련지원정책은 지원대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주로 취업준비생들을 정책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탈북청년, 위기청소년, 군인, 예술가 등 특수 청년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정책대상까지도 포괄하고 있다. 그 세부내용을 보면, 국내외 현장체험, 자격증 취득, 직무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정책의 주요 내용이며, 국내기업체험형(6개, 20%), 자격증취득형(3개, 10%), 직무교육지원형(15개, 50%), 해외체험형(6개, 20%)으로 분류될 수 있다.

국내기업체험형 정책은 구직 청년들이 국내 중소기업 탐방, 일·학습병행 및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기반 지식 및 경험을 쌓는 것을 돕는 산학연계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자격증 취득형 정책은 군복무 청년이나 위기청소년, 저소득층의 자기계발을 돕는 지원프로그램으로, 자격취득이나 학점인정, 훈련비용 대출 등의 정책수단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직무교육지원형 정책은 산업현장에서 맞춤형 직무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각종 훈련비와 시설 및 장비비 등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세부과제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는 4차 산업분야, 지역문화전문 분야, 신직업 분야, 국가전략산업분야, 항공분야, 의료분야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제공하는 직무교육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제반 운영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이 공통적

이다. 끝으로 해외체험형 정책은 해외 기업 등의 현장체험 기회 및 비용을 제공하는 정책을 의미하며, 국외 체류 활성화를 통해 국제기구 취업, 농·수산 식품분야, 해외산림분야의 인재양성을 돕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표 3-13〉 5대 영역 중 일자리 관련 정책 - (4) 직업훈련지원

중분류	세분류	과제명	지원내용	지원대상
직업 훈련 지원 (30개)	국내 기업 체험형 (6개)	탈북청년 취업·교육지원	- 청년취업아카데미 개설 및 운영, 탈북대학 생 예비대학 운영대학 선정 후 운영비 지원	탈북 청년
		중소기업탐방	- 참여청년 1인당 1일 평균 13.5만원 내외 운영비(기업탐방, 특강, 진로탐색 등) 지원	취준생
		기업의 현장훈련과 학교·공동훈련센터의 교육을 병행하여 신규 입직자의 역량 강화	- 특성화고, 대학재학생 중심으로 일학습병행 을 확대하여 현장기반 숙련 형성 지원	취준생
		해운항만 물류전문 인력 양성 산학연계 지원	- 학기 중 전문가 특강, 자격증 취득 등 사전 이론교육을 진행하고, 하계·동계 방학을 활용하여 4~8주간 인턴십 실시 및 지원금 등 지급	대학생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청년취업 지원	- 장병교육 및 취업상담, 대소상공생교육(2개 월 내외, 훈련수당 월40만원), 현장코칭 숙 련인력양성(최대 3개월, 훈련수당 월60만 원, 직무교육 3일 이내, 현장코칭 50만원 최대 12회)	취준생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청년체험단 운영	-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에 최대 3개월간(방학 기간 참여 등) 직무체험 진행 및 채용연계	취준생
	자격증 취득형 (3개)	소년원 출원생 등 위기청소년 사회복귀 지원	-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직업훈련과 인성교육을 통해 취업 및 창업 기회를 제공, 취업 연계 및 사후지도 등을 통해 위기청소년의 자립 지원	일반 국민
		군복무 중 자기개발 지원	- 대학 원격 강좌 학점취득 지원, 군복무 경험 의 학점인정, 고졸검정고시 지원, 국가기술 자격취득 지원, 온라인 학습콘텐츠 제공	군인
		항공조종사 선선발 후교육 제도	- 선선발 인원 중 저소득층 등 해당자에게 하 늘드림재단을 통해 저금리(약3%) 훈련비용 대출(최대 1억 원)	취준생
	직무 교육	현장맞춤형 이공계 인재양성 지원	- 실전문제연구팀별 연구과제비(팀당 7백만 원) 지원	대학/대 학원생

56 청년정책 영역별 기초방향 수립연구

중분류	세분류	과제명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형 (15개)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 4차 산업분야 산업맞춤형 프로젝트 수행과 실무교육훈련을 위한 인건비, 강사멘토 수당, 임차비, 간접비 등 지원	취준생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지원	-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정규과정 및 심화과정 운영, 지역문화시설에 지역문화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1인당 월 200만원)	청년 예술가
		청년취업아카데미	- 교육비 전액지원(운영기관 자부담 20%+정부지원 80%), 취업 연계 지원	대학생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무능력향상 강화	- 훈련시설·장비 등 훈련 인프라 비용 지원 (연간 20억 원 限)	중소기업 청년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 금속, 전기, 전자 산업분야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훈련비 전액 및 훈련 장려금(월 11.6만원) 지원	취준생
		일반고 고졸청년 특화형 일자리 안전망 도입	- 훈련비 전액 및 훈련 장려금(월 11.6만원) 지원	고등 학생
		산업현장 수요 맞춤형 청년 기술기능인력 양성	-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실시를 위한 교육훈련비 및 교육훈련장비 확충	취준생
		신직업 Making Lab	- 교육비 전액지원(운영기관 자부담 20% + 정부지원 80%), 취업 연계 지원	대학생
		미래유망산업맞춤형 훈련	- 협약기업의 재직자 채용예정자 훈련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편	중소기업 청년
		산업계주도청년맞춤형훈련	- 사업주에 대한 훈련비 지원,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시설·장비비 등 지원	취준생
		청년여성 내일역량 개발 지원	- 청년여성 대상 그룹멘토링 및 멘토링의 날 운영, 경력개발형 새일센터 운영, 노무고충 상담 지원	취준생
		항공정비인력 양성채용	- 고용부 직업훈련비 지원(내일배움카드 등)	취준생
		미취업 청년해기인력 취업지원 강화	- 항해기관부문의 선종별 공통·현장실무교육 및 취업 알선	취준생
		의료제품 전문인력 양성	- (의약품 전문인력) 33개 과목 편성 및 100시간 이상 교육 실시 - (의료기기 전문인력) 취업연계 및 역량강화 교육 실시, 국가공인 자격시험을 통해 전문가 자격 부여 등	취준생
		해외 체험형 (6개)	청년 해외진출 활성화	- 국제기구 초급전문가, 해외봉사 등 해외파견사업을 통한 청년들의 국제업무 역량강화 및 취업연계에 기여

중분류	세분류	과제명	지원내용	지원대상
		농식품 청년 해외개척단(AFLO) 운영	- 현지어 능력 및 경험을 가진 청년을 선발하여 해외 수출업체에 파견하고, 체재비(교육비, 항공료, 출장비, 보험료 등) 지원	창업 지원자
		해외취업지원	- 해외취업연수(K-Move스쿨), 민간해외취업알선, 해외취업정착지원금, 국내해외취업지원, 해외취업촉진인프라 지원	취준생
		해외건설 청년일자리창출	- 해외건설현장에 보내질 참여자에 파견비, 훈련비 지원	중소기업 청년
		수산식품 청년 마케터 육성	- 현지보험(긴급의료서비스), 비자발급, 현지통신비, 숙소, 왕복항공료 실비 등 지원	취준생
		해외산림청년인재육성	- 체재비(월 800~1,400천원), 항공료, 비자발급비, 파견준비비 등	취준생

주: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2020). 청년정책 사업기술서를 재분석.

창업환경조성 정책은 <표 3-14>에서 보듯이 창업 초기단계에서 필요한 자본을 지원해주는 정책이다. 창업 시 필요한 창업공간 및 임대료를 제공하거나,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각종 세금 면제 및 우대수수료 혜택을 제공하기도 하며, 컨설팅 지원과 같은 다양한 수단들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창업환경조성 정책은 분야를 특정하지 않고 청년 연령과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할 시 지원해주는 정책들이 있는데, 청년 창업가 대상 사업화 지원 정책과 청년전용창업자금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정부가 특정 산업분야의 창업을 장려하고 있기도 한데, 주로 콘텐츠 분야, 농업 또는 스마트팜분야, 사회적 경제분야, 외식분야, 생활혁신 분야가 이에 해당한다.

(표 3-14) 5대 영역 중 일자리 관련 정책 - (5) 창업환경조성

종분류	과제명	지원내용	지원대상
창업 환경 조성 (24개)	대학창업펀드 조성	- 대학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창업 초기 자금을 지원	대학생
	청년 콘텐츠기업 투자 펀드	- 청년콘텐츠 기업 지원에 약정총액(조성하려는 펀드의 총 규모, 450억)의 60%이상(270억)을 투자	창업 지원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 영농 초기 낮은 소득으로 농업·농촌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농가 경영비·생활안정자금) 지원	취준생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 4주~3개월 동안 조리시설이 갖춰진 사업장(임차료 연 6천만 원 이내), 컨설팅·교육, 홍보비 등(1개소 당 단가 2억 원, 자부담 30%) 지원	창업 지원자
	스마트팜 창업 지원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 스마트팜 혁신밸리 선정 지자체 및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 온실의 신축을 지원하고 적정임대료로 청년들에게 제공	창업 지원자
	사회적경제분야 청년여성일자리창출	- 사회적 경제 지원정책 특성성별영향평가 실시, 정책 개선사항 도출,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적 확대를 위한 단계적 지원	취준생
	창업공간지원을 위한 희망상가 공급	- LH 장기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 공급, 2년 단위 계약 갱신, 최장 10년간 계약 가능	창업 지원자
	도시재생사업시 청년을 위한 복합시설 설치 유도	- 도심의 뉴딜사업지역에 청년 창업공간, 주거지원 센터, 임대주택 등을 결합한 복합앵커시설 설치유도	무주택 청년
	고속도로 휴게소 청년창업매장 활성화	- 휴게소 기존 매장 및 여유공간 활용, 리모델링 또는 신규 매장 조성 등으로 창업매장 제공	창업 지원자
	전통시장 복합청년몰 조성을 통한 청년상인 육성	- 전통시장 내 유희공간을 청년 창업공간, 기반시설, 문화체험, 생활·편의시설이 융합된 복합쇼핑몰 조성	창업 지원자
	청년창업기업 대상 세무·회계,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	- 세무·회계, 기술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기업 당 연간 1백만 원 이내, 2년간 지원)	창업 지원자
	청년 예비창업자 사업화 지원	- 창업사업화 지원(재료비, 마케팅비, 멘토링, 교육 등)	창업 지원자
	청년 창업가 대상 사업화 지원	- 사업화 소요비용의 70%(1억 원 이내 지원)	창업 지원자
	청년전용창업자금	- 업체당 1억 이내 용자(기간 6년, 2.0% 고정금리)	창업 지원자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 생활혁신형 창업자를 발굴·멘토링하고, 성공불용자, 최대2천만 원 지원 후 성실 실패 시 상환면제	창업 지원자

중분류	과제명	지원내용	지원대상
	청년창업기업 세금 면제	- 청년 창업기업 5년간 100% 세금 면제	창업 지원자
	청년창업펀드 추가조성	- 2020년 모태펀드에서 600억 원을 출자하여 총 1,000억 원 규모의 청년창업펀드 조성	창업 지원자
	대규모 창업혁신공간 조성	- 창업보육공간 제공 및 최장 3년 동안 금융, 교육, 컨설팅, 해외진출 등 전 분야를 패키지로 지원	창업 지원자
	유망청년창업기업 보증 제공	- 운영자금 최대 10억 원, 0.3% 고정요율, 보증 비율 최대 100% 등 우대보증 제공	창업 지원자
	신규 사업자에 대한 카드 우대 수수료 적용	- 전자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거래를 하는 온라인 사업자에 대해 개별 사업자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우대수수료를 적용	창업 지원자
	은행권 청년창업재단(디캠프)을 통한 청년창업 지원	- 우수기업 선발 및 사무 공간 등 지원, 초기스타트업에 직·간접투자, 조직관리, 홍보, 교육 등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창업 지원자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 일자리창출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수은) 자금 지원	취준생
	은행권 일자리펀드 운용 지원	- 각 하위펀드 운용사가 일자리 기업을 정의하고 투자 집행(일자리 기업에 약정 총액의 80% 이상 투자하고, 약정 총액의 60%이상은 신주방식)	취준생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 기술교육, 경영진단, 사업계획서 컨설팅 및 아이디어사업 지원	취업자

주: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2020). 청년정책 사업기술서를 재분석.

〈표 3-15〉의 창업훈련지원정책은 문화, 예술, 농식품 관련 창업 훈련 기회를 제공한다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다. 창업훈련지원정책에는 청년 예술가를 지원해 이들의 창작 및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 농·식품 관련 분야 청년창업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이공계 대학원생의 창업탐색을 지원하는 정책 등이 있다.

(표 3-15) 5대 영역 중 일자리 관련 정책 - (6) 창업훈련지원

중분류	과제명	지원내용	지원대상
창업 훈련 지원 (9개)	이공계 대학원생 창업탐색 지원	- 예비고객 인터뷰를 통한 사업화 모델 검증, 전문가 컨설팅, 최소요건제품(MVP) 제작 등 지원	대학원생
	'청춘마이크' 사업을 통한 청년 문화예술가 지원	- 문화가 있는 날 공연 기회 제공(공연사례비 및 무대· 장비 등 지원)	청년 예술가
	한국 예술창작 아카데미	- 창작소재 개발, 조사연구 과정 및 작품제작 발표활동 지원	청년 예술가
	예비 예술인 첫 공연 지원	- 문화예술분야 맞춤형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비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및 작품제작 지원(최대 1,500만원)	청년 예술가
	청년두레(관광두레 청년주민사업체) 지원	- (청년두레) 멘토링, 선진지 견학, 홍보마케팅 지원 - (관광두레) 관광두레PD와 청년 PD 각각에 월 활동 비 240만원, 180만원 지원	창업 지원자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 3개월 간 인턴활동 보조비(월 30시간 이상, 100만 원 이내) 지원, 인턴기간 종료 후 창업보육 프로그램 우선지원(가산점 부여)	창업 지원자
	국가식품클러스터 청년식품창업 Lab	- 지원센터의 시설·장비(R&D 및 파일럿플랜트)를 활 용, 실습형·체험형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및 맞춤 형 컨설팅 실시 (4개월+α)	창업 지원자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운영	- (실습용온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선정 지자체(4개소) 에 스마트팜 교육용 실습농장을 약 4.5ha규모 지원 - (교육운영)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에서 교육 운 영에 필요한 교육생모집, 교육운영비(이론, 실습, 컨 설팅 등) 지원	창업 지원자
	청년귀농 장기교육	- 선도농가, 농업법인 등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영농실 습, 지역활동, 창업준비 등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비 의 70% 지원(자부담 30%)	취준생

주: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2020). 청년정책 사업기술서를 재분석.

4. 주거 관련 정책

주거 관련 정책은 각 세부 과제들에서도 드러나듯이 정책 대상으로는 무주택 청년을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그 외에도 대학생과 청년예술가 등의 주거 취약 계층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며, 다양한 지원 방식을 활용하되 공통적으로 주거비용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

원 방식으로는 크게 공공주택을 확충하여 공공에 제공하는 방식(8개, 61.5%), 기존에 있던 민간 주택을 활용하는 방식(2개, 15.4%), 주택비용을 지원하는 방식(3개, 23.1%)이 활용되고 있다.

먼저 공공주택을 확충하여 공공에 제공하는 방식은 확충의 대상으로 대학 기숙사, 청년 농촌 보금자리 내의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 공동육아 나눔 시설, 문화여가 커뮤니티시설, 청년 맞춤형 공적임대주택, 사회주택을 삼는다. 이와 같은 다양한 공공 주택은 사업 주체와 형태, 그리고 부지 마련 방식에 있어서 조금씩의 차이는 있으나, 무주택 청년이나 대학생, 청년 예술가 등을 주거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주거비용의 부담을 낮춰주고자 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다음으로 민간주택 활용은 민간 영역의 임대사업자를 지원하거나 역세권의 노후 고시원을 리모델링함으로써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는 임대형 주거 공간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마지막으로 주택비용의 지원은 주택 공급의 확대를 통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었던 앞선 정책들과는 달리, 주택비용 지원을 통해 주거 수요자들을 지원하는 것에 정책의 주안점을 둔다. 청년 전월세 지원 확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우대 금리의 적용과 여러 세제상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을 통해 당장의 시급한 주거 수요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고, 장기적으로도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표 3-16〉 5대 영역 중 주거 관련 정책

중분류	과제명	지원내용	지원대상
공공주택 지원 (8개)	대학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까지 대학생 기숙사 수용인원 5만 명 확충 - 생활SOC사업과 연계한 연합기숙사 복합화 및 국립대 연합기숙사 - 학교 밖 임차 주거시설에 대한 대학의 교사 소유 규제 완화 	대학생

62 청년정책 영역별 기초방향 수립연구

중분류	과제명	지원내용	지원대상
	청년 농촌보급자리 조성사업	-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 4개소(개소당 30호 내외), 공동육아 나눔시설과 문화여가 커뮤니티시설 각1개 등 복합·설치	청년창업 지원자
	청년 맞춤형 공적임대주택 공급 (행복주택)	- 국유지, 공유지, 공기업 보유토지, 도시재생용지 등을 활용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무주택 청년
	청년 맞춤형 공적임대주택 공급 (매입·전세임대)	- 저렴한 보증금 및 임대료로 도심지 내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무주택 청년
	청년 맞춤형 공적임대주택 공급 (공공지원주택)	- 공공지원주택 7만호 공급	무주택 청년
	대학생 기숙사 확충	- 학교 내 용적률 규제 완화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 매 입전세임대를 활용한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2022년까지 1만 명 공급	대학생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LH 토지를 15년 이상 장기 저리로 임대,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사회주택 건설·매입 자금 용자 지원	무주택 청년
	사회주택 도입을 통해 신진예술가 주거공간 마련	-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 입주	청년 예술가
민간 주택 활용 (2개)	집주인 임대주택 활성화	- 임대사업자를 지원해 기금 저리 용자를 통해 주거 취약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가구당 최고 1억원, 금리 1.5%)	무주택 청년
	역세권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 역세권, 대학 인근 등의 노후 고시원을 리모델링하여 시세 50% 이하의 청년 셰어하우스로 공급	무주택 청년
주택 비용 지원 (3개)	청년 전·월세 지원 확대	- (중소기업 청년) 보증금 1억, 1.2% 금리 - (청년전용 버팀목) 보증금 3.5천만, 1.8~2.7% 금리 - (보증부 월 세) 보증금 3.5천만(1.8%금리), 월세금 40만원(1.5%금리) - (취준생 등 월세) 월세금 40만원, 1.5% 금리	무주택 청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	- 연간 600만원 한도로 가입기간에 따라 최고 3.3% 우대금리 적용, 2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 5백만원까지 비과세, 현행 청약저축과 동일한 수준으로 소득공제 혜택 부여	무주택 청년
	청년 전·월세 지원 프로그램	- 청년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한 소액 전·월세 보증금, 월세자금, 기존 고금리 전·월세 자금의 저금리 전환 지원	무주택 청년

주: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2020). 청년정책 사업기술서를 재분석.

5. 참여 관련 정책

참여 관련 정책은 총 12개로, 크게 애국심 고취 정책(2개, 14.3%)과 의견 수렴의 장 확대와 관련된 정책(10개, 85.7%)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애국심 고취와 관련된 정책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특징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독도와 백령도 등의 의미 있는 해양영토를 방문하여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대한민국 해양영토 대장정〉, 그리고 국외에 있는 독립운동 사적지를 탐방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층을 확대하는 사업이 있다.

다음으로 의견 수렴의 장을 넓히는 정책은 정책 대상 집단을 청년에 국한하지 않고 대학생, 일반 국민 전체, 군인, 취업준비생으로 폭넓게 설정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 정책 영역은 민원 및 고충 수렴, 청년 참여 플랫폼 조성, 청년 공동체 활성화, 소비자 보호로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민원 및 고충 수렴은 2030세대의 관심 이슈 또는 고충과 관련된 민원을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활동, 청년들이 일상생활과 생애주기 상 직면하게 되는 고충을 해소해주기 위한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활동, 군장병의 고충과 민원 처리를 위한 이동신문고 운영 등이 있다.

청년 참여 플랫폼 조성, 청년 공동체 활성화라는 목표 또한 다양한 정책 과제들로 구성된다. 청년들의 정책적 수요와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국민생각함 운영, 청년의 정책 제안과 이를 토대로 한 토론회 개최 및 웹툰·영상 제작과 캠페인 운영 등을 포괄하는 〈청년 참여 플랫폼 운영〉, 멘토링과 각종 교육 및 네트워킹 등으로 구성되는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통일국민협약 도출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진 청년 참여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보호는 청년 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하여 특히 청년들이 많이 소비하는 상품 등을 관심 영역으로 삼으며, 청년들이 접근하기 쉬운 홍보 수단을 활용하여 관련된 정보와 홍보물을 제공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표 3-17〉 5대 영역 중 참여 관련 정책

중분류	과제명	지원내용	지원대상
애국심 고취 (2개)	대한민국 해양영토 대장정	- 독도, 백령도 등 끝단도서 및 주요 해양도시와 항일운동 유적지 탐방, 해안누리길 체험, 해양산 업 시설 견학 및 해안정화 활동과 해양 및 해양 영토 관련 전문가 강의 청취	대학생
	국의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사업 청년층 참여 확대	-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 프로그램 지원(매년 2~10월 탐방 추진)	대학생
의견 수렴장 확대 (10개)	통일국민협약 도출을 위한 청년 참여 프로그램 운영 지원	- 평화·통일 관련 청년세대의 자발적인 대화 프로 그램 운영 지원(분기별 1회, 매회 200~300만원 의 비용 지원)	일반국민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 멘토링(1:5)을 통한 청년들의 공동체 조직, 역량 강화 교육컨설팅 및 전문가 자문, 현장학습, 지 역 네트워크파티, 경진대회, 청년네트워크 등 다 양한 프로그램 지원	일반국민
	청년 참여 플랫폼 운영	- 청년이 정책을 제안 및 정책제안을 토대로 토론 회 개최, 정책제안과 연계해 웹툰·영상·캠페인 등 프로젝트지원	일반국민
	청년 소비자층 보호정책	- 청년 소비자들이 많이 소비하는 상품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청년 소비자 소비환경개선	일반국민
	특수거래분야 소비자 보호	- 대학교 등에 피해 예방 포스터 및 리플렛 배포, 대학교 홈페이지, 위원회 계정 유튜브 및 네이 버블로그, 지하철 등을 통한 홍보물 배포	대학생
	군·경 장병 대상 고충 상담 및 해소를 위한 이동신문고 운영	- 군 생활 중 겪는 고충에 대한 상담, 민원신청 방 법 안내 및 해소	군인
	청년체감 고충과제 제도개선 추진	- 2030대 일자리 고충해소, 자녀보육·교육관련 고충해소, 2030세대관련 행정서비스 등 생활불 편해소	취준생
	국민생각함 청년 정책참여 프로그램	- 청년들이 생활과 관련된 정부정책에 대해 자유 롭게 제안하고 집단지성을 통해 내용을 발전, 구체화시켜 실제 정부 정책으로 반영, 실현되도 록 관계기관 협의 등 지원	대학생
	국민생각함 청년 아이디어 공모전	- 청소년 및 대학생의 입장과 시선에서 바라보는 정부정책 및 행정서비스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 공모	대학생
	2030세대 관련 민원 분석	- 비트코인(가상통화), 아르바이트, 결혼식장, 전동 킥보드 등 2030세대의 관심이슈 또는 고충에 관한 민원 분석 및 정책 시사점 제시	일반국민

주: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2020). 청년정책 사업기술서를 재분석.

제3절 기존 청년정책의 특징

현 청년정책의 특징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 청년정책은 연령대별 정책 보다는 청년의 생애주기에 따른 정책지원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파악된다. 기존 청년정책의 대상별 연령을 살펴보면 전체 182개 중 47.3%인 86개의 정책의 경우, 대상별 연령이 없으며, 나머지 96개의 경우에도 최저 15세를 기준으로 총 24개의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중 이번 청년기본법상에서 정한 19~34세 이외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의 수는 만 19세 미만이 포함된 경우가 23개, 만 35세 이상이 포함된 경우가 46개로, 연령이 존재하는 92개의 정책 중 69개나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크게 2가지로 설명이 가능한데 그 첫째는 청년기본법이 제정 전 청년의 연령을 19~39세로 보는 경향이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형별 정책 연령대를 살펴보면 전체 182개 정책 중 19~39세 대상의 정책은 32개로 전체의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 청년기본법에서 설정한 만 19~34세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총 18개로 전체의 9.9%로 두 번째이다.

〈표 3-18〉 청년정책의 정책유형별 연령대

(단위: 개, %)

연령	청년정책 대분류						
	교육	생활	일자리	주거	참여	총계	
						수	%
만 15~24세 이하			2			2	1.1
만 15~29세 이하		1				1	0.5
만 15~34세 이하			9			9	4.9
만 15세 이상			1			1	0.5
만 16~29세 이하					1	1	0.5
만 18~34세 이하			2			2	1.1

연령	청년정책 대분류						총계	
	교육	생활	일자리	주거	참여	수	%	
만 19~24세 이하	1					1	0.5	
만 19~29세 이하		1				1	0.5	
만 19~34세 미만				1		1	0.5	
만 19~34세 이하	3	4	7	2	2	18	9.9	
만 19~35세 이하		1	2			3	1.6	
만 18세 이상	1		1			2	1.1	
20 대 이상					1	1	0.5	
만 20~34세 이하			1			1	0.5	
만 23세 미만			1			1	0.5	
만 24세 이하		1				1	0.5	
만 34세 이하			7			7	3.8	
만 35세 이하			1			1	0.5	
만 15~39세 이하		2				2	1.1	
만 17~39세 이하			1			1	0.5	
만 18~39세 이하			3			3	1.6	
만 18~40세 미만			1			1	0.5	
만 19~39세 이하	2	2	21	5	2	32	17.6	
만 20~39세 이하			2		1	3	1.6	
(비어 있음)	30	4	42	5	5	86	47.3	
총합계	37	16	104	13	12	182	100.0	

주: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2020). 청년정책 사업기술서를 재분석.

정책 연령대가 모호한 주요 이유는 기존의 청년정책이 정책대상의 연령보다는 청년들의 생애주기 즉, 재학생-취업준비생-결혼 적령기-신혼 부부에 따라 정책의 수단이 차별적으로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실례로 182개 기존청년정책들의 세부 대상을 직업과 정책 수혜 조건 등을 기준으로 범주화 한 후 청년들의 생애주기별로 살펴보면 연령과 상관없이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총 42개(23%) (대학 및 대학원 대상 4개, 대학생 29개, 대학원생 9개)이며 취업준비를

하는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총 48개(26.4%)개 그리고 창업 희망자 대상의 정책이 26개로(14.3%) 나타난다. 그리고 취업에 성공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상의 정책과 군대에 복무중인 군인대상의 정책이 각각 10개이며, 이외에 청년예술가, 일반기업 취업자, 박사학위자 등을 직업을 가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은 총 12개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업을 가진 신혼부부를 포함한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정책도 약 10개에 달한다. 즉, 생애주기별 이행과정에서 제공되는 청년정책들은 총 182개 정책 중 약 158개로 전체 청년 정책 중 약 86.8%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외에 일반적인 생애주기와 상관없이 경제사회적으로 관심대상인 저소득층 청년(6개)이나 탈북청년(1개), 아르바이트생(1개)에 관한 청년정책이 존재하고 이번 청년기본법 제정에서 청년의 연령에 포함되지 못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정책도 4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3-19〉 청년 유형별 정책과 정책대상

(단위: 개, %)

정책 대상	청년정책 대분류						총합계	
	교육	생활	일자리	주거	참여	총합계		
						수	%	
고등학생	2		2			4	2.2	
군인		3	6		1	10	5.5	
대학 및 대학원생	3		1			4	2.2	
대학생	13	4	5	2	5	29	15.9	
대학원생	8		1			9	4.9	
무주택 청년			1	9		10	5.5	
박사학위자	2		2			4	2.2	
아르바이트생			1			1	0.5	
일반 청년	2	2	3		5	12	6.6	
저소득층 청년		6				6	3.3	

정책 대상	청년정책 대분류						총합계	
	교육	생활	일자리	주거	참여	총합계		
						수	%	
중소기업 취업청년			10			10	5.5	
청년예술가			4	1		5	2.7	
창업희망자	2		23	1		26	14.3	
일반 기업 취업자		1	2			3	1.6	
취업준비생(구직자)	5		42		1	48	26.4	
탈북청년			1			1	0.5	
총합계	37	16	104	13	12	182	100.0	

주: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2020). 청년정책 사업기술서를 재분석.

둘째, 생애주기별 정책 수에서 일자리 정책이 가장 많으나 예산은 주거 정책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총 182개 청년 정책 중 약 57.1%에 해당하는 104개(57.1%)가 일자리 정책이며, 그 다음이 교육정책이 37개(20.3%), 생활정책이 16개(8.8%), 주거 정책이 13개(7.1%), 참여정책이 12개(6.6%)로 구성된다. 그 중 일자리 정책의 경우 직업훈련지원이 30개이고, 창업환경 조성이 24개, 취업연계지원이 19개, 취업비용지원 정책이 17개, 창업훈련지원이 9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용환경개선 정책이 5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일자리 정책에 소요되는 예산은 2020년 총 예산 25조 8,855억 원의 23.4%에 불과한 6조 472억 원으로 파악된다. 반면에 182개 청년정책 중 13개에 불과한 주거 정책의 경우, 총 예산(‘20년)은 15조 1,350억 원을 전체 예산의 58.5%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주거정책 3가지 중 전·월세 지원 확대 정책이 소속된 주택비용지원정책의 경우에는 총 9조 6,442억 원(37.3%)이 배정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 또는 가구에서 주택문제해결에 소요되는 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지만, 104개에 이르는 일자리보다 13개의 주거정책에 소요되는 예산이 더 크다는 점은 정책 수혜자 규모 차원에서 한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표 3-20〉 청년정책 유형별 과제수와 정부 예산액

(단위: 개, %)

정책 유형	과제 수		2019년 예산총액		2020년 예산총액	
	수	%	금액(억 원)	%	금액(억 원)	%
교육	37	20.3	44,745	20.5	45,946	17.7
교육비지원	21	11.5	40,671	18.7	40,667	15.7
연구비지원	6	3.3	2,647	1.2	3,661	1.4
인건비지원	6	3.3	1,215	0.6	1,341	0.5
진로탐색	4	2.2	211	0.1	276	0.1
생활	16	8.8	872	0.4	1,060	0.4
건강검진	3	1.6	487	0.2	483	0.2
금융환경지원	7	3.8	17	0.0	150	0.1
현금지원	6	3.3	368	0.2	427	0.2
일자리	104	57.1	49,386	22.7	60,472	23.4
고용환경개선	5	2.7	25	0.0	44	0.0
직업훈련지원	30	16.5	13,790	6.3	14,116	5.5
- 국내기업 체험형	6	3.3	3,693	1.7	3,789	1.5
- 자격증 취득형	3	1.6	95	0.0	162	0.1
- 직무교육지원형	15	8.2	8,390	3.9	8,479	3.3
- 해외체험형	6	3.3	1,612	0.7	1,686	0.7
창업환경 조성	24	13.2	5,868	2.7	6,550	2.5
창업훈련지원	9	4.9	401	0.2	507	0.2
취업비용지원	17	9.3	26,489	12.2	37,707	14.6
- 수당지급	6	3.3	2,501	1.1	5,595	2.2
- 월급보조	9	4.9	11,991	5.5	15,908	6.1
- 자산형성	2	1.1	11,998	5.5	16,204	6.3
취업연계	19	10.4	2,813	1.3	1,548	0.6
주거	13	7.1	122,733	56.4	151,350	58.5
공공주택 지원	8	4.4	41,791	19.2	49,558	19.1
민간주택 활용	2	1.1	2,500	1.1	5,350	2.1
주택비용 지원	3	1.6	78,442	36.0	96,442	37.3
참여	12	6.6	22	0.0	28	0.0
애국심 고취	2	1.1	11	0.0	10	0.0
의견수렴장 마련	10	5.5	11	0.0	18	0.0
총합계	182	100.0	217,757	100.0	258,855	100.0

주: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2020). 청년정책 사업기술서를 재분석.

한편, 2020년 청년정책 예산을 정책대상 별로 살펴보면 무주택 청년이 14조 8,478억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대학생 및 대학원생(대학 및 대학원생 3,207억 원, 대학생 4조 886억 원, 대학원생 1,651억 원)이 4조 5,743억 원, 중소기업 취업청년이 2조 8,413억 원, 취업준비생이 2조 3,119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특이점은 청년 정책이 청년실업 증가로 발생했음에도 취업준비생예산(2조 3119억 원)보다 중소기업 취업청년(2조 8,413억 원)이 더 많고, 대학원생(1,651억 원)보다 이공계 박사학위자(2,873억 원) 예산이 더 많다는 점이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예산이 큰 이유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의 보완정책으로 도입된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1조 2820억 원)와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3,384억 원), 고용부의 청년정규직 추가고용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인건비 보조사업(9,919억 원) 때문이다. 또한 이공계 박사학위자 예산이 큰 이유는 과기부의 '신진연구자 기초 연구비 지원사업 예산'(2,611억 원) 때문이다(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2020).

〈표 3-21〉 청년정책 유형별 과제수와 정부 예산액

(단위: 개, %)

정책대상	과제 수	2019년 예산 총액		2020년 예산총액	
		금액	%	금액	%
고등학생	4	1,728	0.8	2,176	0.8
군인	10	714	0.3	639	0.2
대학/대학원생	4	3,011	1.4	3,207	1.2
대학생	29	41,186	18.9	40,886	15.8
대학원생	9	1,229	0.6	1,651	0.6
무주택 청년	10	120,270	55.2	148,478	57.4
이공계 박사학위자	4	2,154	1.0	2,873	1.1
아르바이트생	1	9	0.0	9	0.0
일반국민	12	898	0.4	836	0.3
저소득층 청년	6	368	0.2	427	0.2

정책대상	과제 수	2019년 예산 총액		2020년 예산총액	
		금액	%	금액	%
중소기업 취업청년	10	21,653	9.9	28,413	11.0
청년예술가	5	78	0.0	108	0.0
청년창업지원자	26	4,917	2.3	6,014	2.3
취업자	3	18	0.0	18	0.0
취준생	48	19,522	9.0	23,119	8.9
탈북청년	1	2	0.0	2	0.0
총합계	182	217,757	100.0	258,855	100.0

주: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2020). 청년정책 사업기술서를 재분석.

셋째, 정책의 전달체계를 예산과 고려해 볼 때, 정책의 주수혜대상이 청년이 아닌 기업이나 관계기관에 투여되는 경우가 전체 예산 비중에서 높다는 것이다. 기존 청년정책의 수혜대상을 예산이 존재하는 경우에 근거해 살펴보면 청년이 주 수혜자인 과제 수는 36.2%이며, 다음으로 관계기관(31.2%), 대학(18.4%), 기업(12.1%) 등의 순이다. 그리고 2020년 청년정책 예산 중, 청년이 아닌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에게 제공되는 예산은 19.7%이다. 그러나 주거 정책을 제외한 경우에는 전체예산이 12조 1,116억 원에 불과하고 그중 청년이 주 정책 대상이 되는 예산은 7조 207억 원인데 반해, 기타 이해관계자가 주 정책의 수혜자가 되는 경우는 4조 9,909억으로 약 41%에 해당한다. 즉 주거 정책을 제외 시 청년정책의 주 수혜자가 청년이 아닌 전달체계 상의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투여되는 예산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기업이 주 수요자가 되는 경우가 2조 4,109억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정부 관계기관(1조 2,864억 원), 대학(7,526억 원)의 순이라는 점이다. 물론 본고에서는 정책의 전달체계 상에서 예산의 흐름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청년과 관계기관 모두에게 전달되는 경우에 임의적으로 예산의 비중이 많이 투여되는 수혜대상자를 해당 범주

로 분류하였다(예: 직업훈련 시 청년에게는 훈련수당을, 훈련기관에게는 교육비를 지불할 경우, 교육비가 예산이 관계기관으로 분류). 이를 고려하면 이해관계자가 주 수혜자가 되는 예산액이 과대계상 될 가능성이 높다는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지만 과제수를 고려해 볼 때 기업, 대학, 정부산하기관 등을 통해 정책 예산이 집행되는 비중이 아주 낮다고는 할 수 없다. 특히 기업에 대한 예산 비중이 높은 이유는 2020년 기준 약 9,919억 원의 규모로 고용부가 중소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청년 정규직 추가 고용 시 인건비 지원’ 사업의 영향이 크다(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2020). 이와 같이 전달체계를 기타 전달체제로 우회하는 경우는 정책 시행 차원에서 빠른 전달체계 구축과 전문성 확보하는 차원에서 장점을 가지지만 정책의 최종 수혜자인 청년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필요한 욕구에 기반 한 선택권, 즉 훈련기관이나 훈련과목 선정, 특히 수도권이 아닌 지역청년의 경우에는 한계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정부산하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을 통하거나 대학 및 기업을 경유하여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정부 관계기관 및 대학의 인건비나 사업비를 조달해 준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표 3-22〉 청년정책 유형별 과제수와 정부 예산액

(단위: 개, %, 억 원)

구분	전체 과제 수		예산 有 과제 수		2020년 예산총액	
	수	%	수	%	억원	%
관계기관	46	25.3	44	31.2	12,864	5.0
- 교육	6	3.3	6	4.3	458	0.2
- 생활	1	0.5	0	0.0	-	0.0
- 일자리	37	20.3	36	25.5	12,390	4.8
- 참여	2	1.1	2	1.4	17	0.0
기업	27	14.8	17	12.1	24,109	9.3
- 일자리	25	13.7	16	11.3	17,700	6.8

구분	전체 과제 수		예산 有 과제 수		2020년 예산총액	
	수	%	수	%	억원	%
- 주거	2	1.1	1	0.7	6,409	2.5
대학	28	15.4	26	18.4	7,526	2.9
- 교육	17	9.3	17	12.1	3,310	1.3
- 일자리	9	4.9	8	5.7	2,364	0.9
- 주거	1	0.5	1	0.7	1,852	0.7
- 참여	1	0.5	0	0.0	-	0.0
임대사업자	3	1.6	3	2.1	5,410	2.1
- 일자리	1	0.5	1	0.7	60	0.0
- 주거	2	1.1	2	1.4	5,350	2.1
직업학교	1	0.5	0	0.0	-	0.0
- 일자리	1	0.5	0	0.0	-	0.0
청년	77	42.3	51	36.2	208,946	80.7
- 교육	14	7.7	12	8.5	42,178	16.3
- 생활	15	8.2	6	4.3	1,060	0.4
- 일자리	31	17.0	22	15.6	27,959	10.8
- 주거	8	4.4	6	4.3	137,739	53.2
- 참여	9	4.9	5	3.5	11	0.0
총합계	182	100.0	141	100.0	258,855	100.0

주: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2020). 청년정책 사업기술서를 재분석.

넷째, 정책 관리 측면에서 기존 182개 청년정책 중 과제의 정책효과를 가늠하는 성과지표가 존재하는 경우는 162개(89.0%), 정책 목표치가 존재하는 경우도 158개(86.8%)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기존 청년정책을 정책 유형별로 살펴보면 참여정책의 경우 총 12개 중 12개 정책의 성과지표가 모두 존재하나, 교육정책의 경우 총 37개 정책 중 1개, 주거정책의 경우, 총 13개 중 2개, 생활 정책의 경우 총 16개 중 3개 정도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성과지표가 가장 많이 부재한 경우는 일자리 정책으로서 총 104개 정책 중 14개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나는 데 구체적으로 보면 창업환경조성 정책이 4개, 고용환경정책과 취업비용지원정책이 각각 3개, 취업연계지원 정책이 2개, 그리고 기타 정책이 각각 1개로 파악된다.

또한 2020년 목표치 설정에 있어서도 일자리 정책의 경우 총 104개 정책 중 17개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생활정책에서 성과지표 부재의 경우 보다 1개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성과지표와 목표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최근에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게 됨으로써 적절한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선정하는 관리체계가 아직 자리 잡지 못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비예산 사업이면서 은행권 등 민간 관계기관을 이용한 사업은 사업 부처가 직접 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직접 관리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국비예산의 투여여부와 제도의 최근 시행에 여부와 상관없이 정부가 수행하는 정책에 대한 효과를 측정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성과지표 및 목표치에 대한 설정 부재는 이를 감독·조율할 수 있는 상위 부처가 부재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 중의 하나라고 판단된다.

〈표 3-23〉 청년정책 유형별 성과지표와 목표치 존재유무

(단위: 개, %, 억 원)

구분	전체	성과지표			목표치		
		수	%	부재 수	수	%	부재 수
교육	37	36	97.3	1	36	97.3	1
- 교육비지원	21	21	100.0		21	100.0	
- 연구비지원	6	6	100.0		6	100.0	
- 인건비지원	6	5	83.3	1	5	83.3	1
- 진로탐색	4	4	100.0		4	100.0	
생활	16	13	81.3	3	12	75.0	4
- 건강검진	3	3	100.0		3	100.0	
- 금융환경지원	7	6	85.7	1	5	71.4	2
- 현금지원	6	4	66.7	2	4	66.7	2
일자리	104	90	86.5	14	87	83.7	17
- 고용환경개선	5	2	40.0	3	2	40.0	3
- 직업훈련지원	30	29	96.7	1	28	93.3	2
국내기업 체험형	6	6	100.0		6	100.0	
자격증 취득형	3	3	100.0		3	100.0	
직무교육지원형	15	14	93.3	1	13	86.7	2

구분	전체	성과지표			목표치		
		수	%	부재 수	수	%	부재 수
해외 체험형	6	6	100.0		6	100.0	
- 창업환경 조성	24	20	83.3	4	20	83.3	4
- 창업훈련 지원	9	8	88.9	1	8	88.9	1
- 취업비용지원	17	14	82.4	3	14	82.4	3
수당지급	6	6	100.0		6	100.0	
월급보조	9	7	77.8	2	7	77.8	2
자산형성	2	1	50.0	1	1	50.0	1
- 취업연계	19	17	89.5	2	15	78.9	4
주거	13	11	84.6	2	11	84.6	2
- 공공주택 지원	8	7	87.5	1	7	87.5	1
- 민간주택 활용	2	1	50.0	1	1	50.0	1
- 주택비용 지원	3	3	100.0		3	100.0	
참여	12	12	100.0		12	100.0	
- 애국심 고취	2	2	100.0		2	100.0	
- 의견수렴장 마련	10	10	100.0		10	100.0	
총합계	182	162	89.0	20	158	86.8	24

주: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2020). 청년정책 사업기술서를 재분석.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설정된 성과지표 중에는 정책효과를 측정함에 있어 부적절한 지표 선정이 존재하기도 하고, 목표치 설정에서도 근거가 모호한 경우가 존재해 정책 효율성을 차감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우선 성과지표가 존재하는 정책들의 성과지표의 유형들을 살펴보면 참여(인원/기업/대학)수가 총 56개로 전체의 30.8%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수행여부(건수)가 28개, 참여(이수/유지/해결/반영)율이 20개, 만족도가 19개, 취업률이 13개, 취업자 수가 10개 등의 순이었다. 이 중 향후 효율적인 정책관리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점은 수행여부(건수)가 28개 존재하고, 만족도와 예산액이 총 26개가 존재하는 등 총 54개의 성과지표가 전체 청년정책을 관리하는데 적절치 못한 성과지표로 판단된다는 점이었다. 수행여부는 단발성 지표로써 예산의 투입여부나 교육 여

부, 그리고 관계법령의 개정 여부 등으로 측정될 수 있으며, 만족도는 수혜자가 정책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포함한 총체적인 평가로 매년 목표치를 설정하기 어렵다. 또한 예산액은 국회와 예산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타의적으로 예상치 보다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 일관성이 낮은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특히 청년기본법으로 인해 전체 청년정책을 주관부서인 국무조정실이 관리할 경우, 5년 주기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사업부처의 과제를 선정할 경우, 전체 청년정책의 평가지표가 하위 사업과제인 개별 각 사업부처의 성과지표와 연동하여 측정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하고 5년 동안의 진행될 기본계획에서도 수행건수와 같은 경우에는 단발성으로 과제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매년 성과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표 3-24> 청년정책 유형별 성과지표 유형

(단위: 개, %)

구분	정책유형											
	교육		생활		일자리		주거		참여		총합계	
	수	%	수	%	수	%	수	%	수	%	수	%
기타		0.0		0.0	1	0.5		0.0		0.0	1	0.5
만족도	10	5.5		0.0	9	4.9		0.0		0.0	19	10.4
수행여부/건수	5	2.7	3	1.6	9	4.9	7	3.8	4	2.2	28	15.4
예산액	1	0.5	1	0.5	4	2.2	1	0.5		0.0	7	3.8
증감률	2	1.1		0.0	3	1.6		0.0	1	0.5	6	3.3
참여(인원/기업/대학)수	12	6.6	6	3.3	33	18.1	3	1.6	2	1.1	56	30.8
참여율 (이수/유지/해결/반영)	3	1.6	3	1.6	9	4.9		0.0	5	2.7	20	11.0
창업률		0.0		0.0	2	1.1		0.0		0.0	2	1.1
취업률	3	1.6		0.0	10	5.5		0.0		0.0	13	7.1
취업자 수		0.0		0.0	10	5.5		0.0		0.0	10	5.5
성가지표 부재	1	0.5	3	1.6	14	7.7	2	1.1		0.0	20	11.0
총합계	37	20.3	16	8.8	104	57.1	13	7.1	12	6.6	182	100.0

주: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2020). 청년정책 사업기술서를 재분석.

한편, 성과지표가 존재하는 경우, 목표치 설정에 관한 근거를 살펴보면 총 158개 과제에서 평균 실적치가 89개(56.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목표치 설정에 관한 자료수집이 24개(15.2%), 전년도 만족도 대비 상향 및 하향 조정이 19개(12.0%), 과제의 상위계획 반영이 16개(10.1%), 신규 사업이 7개(4.4%), 예산고려가 3개(1.9%)의 순이었다. 목표치 설정의 경우 사업과제의 상위계획반영이나 자료수집과 같은 경우는 정책대상의 수요 대비 정부의 공급 능력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거나 만족도와 평균 실적치 고려의 경우에는 정책의 추진방향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지, 아니면 점진적으로 철수를 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자원 우선순위에 따른 배분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적절치 못한 목표치 설정 근거라고 판단된다.

〈표 3-25〉 청년정책 성과지표 유형별 목표치 설정 근거

(단위: 개, %)

구분	성과지표 설정근거													
	과제 상위 계획반영		신규사업		예산고려		자료수집		전년 대비 상하향		평균 실적치		총합계	
	수	%	수	%	수	%	수	%	수	%	수	%	수	%
만족도									19	12.0			19	12.0
수행여부/건수	9	5.7	3	1.9			3	1.9			12	7.6	27	17.1
예산액	2	1.3					4	2.5			1	0.6	7	4.4
증감률	1	0.6					2	1.3			3	1.9	6	3.8
참여수	4	2.5	3	1.9	3	1.9	10	6.3			35	22.2	55	34.8
참여율			1	0.6			4	2.5			14	8.9	19	12.0
창업률											2	1.3	2	1.3
취업률											13	8.2	13	8.2
취업자 수							1	0.6			9	5.7	10	6.3
총합계	16	10.1	7	4.4	3	1.9	24	15.2	19	12.0	89	56.3	158	100.0

주: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2020). 청년정책 사업기술서를 재분석.



제4장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청년의 욕구 파악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청년정책 욕구 조사의 정책 영역별 분석 결과

제3절 청년정책 방향설정을 위한 중요도 Matrix 분석

제 4 장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청년의 욕구 파악

제1절 분석 개요

본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 중 하나는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청년정책의 영역별 기초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2가지 관점에서 기존 청년정책을 평가한 후 그 차이를 파악하여 그 갭을 줄이는 방향으로 연구방법론을 설정하였다. 그 첫 번째 관점은 정책 수행자 관점에서 기존의 정책에 대한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앞서 제2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청년기본법 제정 이전의 범부처 청년정책 182개에 대한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정책들을 모두 포기하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 정책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과정이 청년기본법 이후 청년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둘째는 기존 청년정책 중 청년기본법 이후 정책방향 설정에 있어 수혜자인 청년들의 욕구를 반영한 정책이 무엇이며 어디에 자원을 집중해야 할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정책수혜자인 청년들의 관점에서 현 정책들에 대한 각 부분별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청년대상의 '청년정책 욕구조사'를 계획·실시하였다. 보통 정책수혜자들은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하는 과정에서 예산관련 부서와 국회와의 의견조율을 통해 사업예산을 배정받기 때문에 정책 수혜자의 욕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정책수행자가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였다 하더라도 그 대상이 한정적일 때 정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청년들의 정책관심도가 감소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대학교육 정책 수행자

가 새로운 대학교육 지원 정책을 개발하였다 한다면 그 정책 대상은 현재 대학생이거나 대학을 휴학한자에 한정된다. 따라서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에게는 자신에게 해당하지 않는 정책 개발에 상대적으로 무감각해 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정책시행과 수행자간에 기대-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로 정책의 효과성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청년정책에 대한 욕구조사'의 대상을 19세~34세 전체 청년들의 이행주기를 고려하여 대학 및 대학원생-대학 및 대학원 졸업 후 취업준비생-취업 후 결혼적령기 청년, 3단계로 나누어 각각 200명씩 할당하여 총 600명을 조사하였다. 우선 조사대상자를 이행주기별로 설정한 이유는 생애주기 상 이행주기가 급변하는 청년들은 이행주기에 따라 필요로 하는 정책의 우선순위가 가변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었다. 즉, 2장에서 설명한 바처럼 정부는 일자리 등 5대 분야로 별로 지원정책을 제공해 왔지만 학생-취업준비생-결혼적령기에 각각 속한 청년입장에서는 필요한 정책이나 정책수준이 매우 차별적일 것이다. 또한 이는 정책실행자 입장에서 볼 때,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대상 선정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지에 관한 우선순위 결정과 직접 관련된다.

두 번째로 조사대상자를 4년제 대학이상으로 한정된 이유는 국내 대학 진학률이 약 70%를 상회하여(한국교육개발원, 2019), 청년정책의 수혜자에서 4년제 대학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유도 있지만 조사예산 부족으로 청년정책의 대상인 모든 청년들을 조사에 포함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19세 이상 청년들이 제외되었고, 대학재학생 중 전문대 재학생도 제외되었다. 또한 취업준비생에서도 취업희망자 이외에 창업지원자와 34세 미만인면서 기혼 직장인 청년들도 누락되었다. 특히, 창업지원자와 기혼직장인들이 제외된 이유는 조사시점인 2020년 6~7월

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면접원 설문조사가 실질적으로 어려워 인터넷 조사로 변경되면서 청년 창업희망자와 기혼 직장인 섭외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결국 본 조사에서는 19~34세 청년 정책 대상자 중 전문대 재학생, 고교 및 전문대 졸업생, 창업희망자, 기혼 직장인 등을 조사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향후 청년기본법상 청년정책 실태조사가 추진될 때 이들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길 희망한다.

〈표 4-1〉 청년정책 욕구조사 대상

구분	재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조사대상 포함 (총 600명)	4년제 대학 및 대학원생 (200명)	4년제 대학 및 대학원 졸업생 (200명)	미혼 직장인 (200명)
조사대상 미포함	전문대 생	고교 및 전문대 졸업생 창업지원자	기혼(신혼) 직장인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방법으로 청년 인터넷 패널을 이용한 자기입식 설문조사를 전문리서치 회사에 위탁하여 2020년 7월 20일부터 약 2주 동안 실시하였다. 특히 분석방법으로 공공분야의 정책분야 도입 시 수용 가능성을 측정하는데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계층 분석적 의사결정 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nalysis)을 이용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계층적 의사결정법이란 1970년대 초 Pennsylvania 대학의 Tomas L. Saaty에 의해 제안된 분석방법으로 Saaty는 복잡한 평가기준을 계층화하여 단계별 요인들에 대한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를 통해 최적의 대안을 도출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의사결정문제는 서로 상반된 기준과 불완전한 정보 및 제한된 자원 하에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해야 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AHP는 이러한 다수 기준 하에서 평가되는 다수 대안들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문제를 다루며, 여러 가지 대안들을 체계적으로 서열화 시키고, 그 가중치(weight)를 비율척도

(ratio scale)로 도출하는 방법을 제시해 준다. 즉, 의사결정수준을 최상-중간-하위 수준으로 나눈 후 각 단계의 의사결정을 위한 대안들을 복수의 2개의 쌍으로 구성하여, 각각 1쌍으로 구성된 대안들을 1:1로 비교하는 방식으로 각 속성의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한다. 따라서 AHP는 공공과 민간부문에서는 다양한 의사결정이나 계획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의 주요 R&D 및 정책에 대한 예비 타당성평가에서 AHP평가를 이용하고 있다.

사실 연구 초기 단계에서 연구진은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분석방법으로 기업들이 신제품을 개발할 때 주로 활용하는 결합분석(Conjoint Analysis)을 주 조사 방법으로 고려하였다. 결합분석은 의사결정을 위한 중요 속성에 대한 응답자의 상대적 중요도와 속성별 수준(예: 가격측면에서 1만 원, 2만 원, 3만 원 등)에 대한 효용치를 산출한다는 면에서 계층 분석적 의사결정법과 동일한 특성을 가진다. 즉, 제품의 여러 가지 속성과 속성별 수준을 구체화 한 후 무작위로 구성된 속성별 수준을 포함한 대안(제품의 프로파일)을 구성하여 설문 응답자들이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순위별로 대안을 선택케 하여 각 속성별 상대적 중요도와 각 수준에 대한 효용치를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청년정책 전체에 대한 청년들의 전반적인 선호도와 각 속성 및 속성수준별 효용치 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종분석 방법으로 계층 분석적 의사결정법으로 분석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구 분석 방법이 각 속성별 중요도와 하위수준의 중요도 내지 효용치를 산출하는 데는 동일하지만 결합분석의 경우, 중요속성과 속성별 하위수준 정도가 중분류 수준에 머물러 분석할 수 있지만 계층 분석적 의사결정법의 경우, 일자리 등 5대 대분류 및 중분류 정책 이외에 세분류 수준까지 분류하여 청년들의 정책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표 4-2〉 계층 분석적 의사결정법과 결합분석의 차이

구분	계층 분석적 의사결정법 (Analytic Hierarchy Process)	결합분석 (Conjoint Analysis)
조사 분야	공공 정책 분야	기업의 신제품 개발
조사 방법	면접원 심층 및 자지 기입식 설문지 작성 방식	조사자의 가상(프로파일)대안 선택 방식
측정방식	대안간 쌍대(Pair-Wise)를 통한 다수 비교방식 리커트 척도 측정방식	모든 속성을 포함한 선택대안의 1회 비교 우선순위 선정방식(1위-2위-3위 등)
측정문항	선호도를 통한 속성의 상대적 중요도 및 효용치	선호도를 통한 제품속성의 중요도와 효용치
측정수준	대분류-중분류-소분류 등 속성수준 차이에 영향을 받지 않음	주요 속성-속성별 수준 1개 수준

셋째, 조사내용으로는 본 연구에서 기존 청년정책 182개 사업을 범주화한 정책들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와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조사내용인 청년정책들을 기존 청년정책으로 지칭한 이유는 정책들이 현재에도 유효하게 실행되고 있지만 2020년 2월에 제정된 청년기본법에 의해 계획되거나 설계된 정책들이 아니라 청년기본법 제정 이전부터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추진된 정책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 3-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기존 182개 청년정책을 5대 대분류와 16개 중분류, 그리고 7개 세분류로 범주화 한 후 그 내용을 각 수준별로 총 38개의 쌍을 구성하여 응답자로 하여금 1:1 비교시켜 각각을 1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통상 가장 많이 사용되는 9점 척도(보다 엄밀히 말하면 1/9~9점으로 17점 척도이다)로 측정하였는데 응답자의 정책분야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더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한정된 예산 하에서 어떤 정책 분야의 지원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하는지’를 질문하였고, 질문에 맞추어 척도를 규정하였다. 질문문항은 수준별 정책수가 n 라면 총 $n(n-1)/2$ 회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총 38개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응답자의 신뢰성 있는 응답을 받기 위하여 각 정책에 대한

설명을 문항에 삽입하였고, 1페이지에 3회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표 4-3) 기본 범부처 청년정책 182개의 범주화 내용

구분	내용	질문문항	질문문항 수	측정척도
대분류	- 일자리 지원, 교육 지원, 주거 지원, 생활 지원, 참여 지원정책	- 5개 정책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 총 10개	- 18점 리커트 척도 · 중앙 0점, · 좌우 각 9점
중분류	- 일자리 지원정책(4개) · 직무훈련, 취업비용, 취업연계, 고용환경개선 - 교육 지원정책(4개) · 교육비, 연구비, 인건비, 진로탐색 - 주거 지원정책(3개) · 공공주택, 민간주택, 주택비용 - 생활 지원정책(3개) · 건강검진, 생활비대출, 현금지원 - 참여 지원정책(2개) · 국토순례, 의견 수렴장 마련	- 각 대분류 내용 분류 정책 간 선호도	- 일자리 지원 · 총 6개 - 교육 지원 · 총 6개 - 주거 지원 · 총 3개 - 생활 지원 · 총 3개 - 참여 지원 · 총 1개	
세분류	- 일자리 직무훈련지원(4개) · 직무교육, 국내기업체험, 해외기업체험, 자격증 취득지원 - 일자리 취업비용지원(3개) · 수당지급, 월급보조, 자산형성	- 일자리 정책의 2개 중분류 항목의 세분류 정책 간 선호도	- 직무훈련 · 총 6개 - 취업비용 · 총 3개	

[그림 4-1] 계층 분석적 의사결정법을 활용한 인터넷 설문 화면 내용

2. 정부의 진반적인 청년정책 평가

※ 지금까지 정부는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 교육, 건강, 주거, 참여 등 크게 5개 영역에 대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귀한께서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어떤 정책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첫째 상자 안에 제시된 정책 설명들을 읽어보신 후, 두번째 상자에 2정책이 1상으로 구성된 질문에서 어느 정책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할지를 평가하여 주세요.

정책 설명	정책 평가										정책 평가
	국립대 대학원 지원	대중창업지원	3000억 지방채	유망기업 지원	공공주택 지원	취업연계 지원	중소기업 지원	지역중소기업 지원	대중창업지원	국립대 대학원 지원	
교육지원 정책	청년들에게 교육비, 연구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청년 자신이 진로를 스스로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생활지원 정책	청년들이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생활비와 무료 건강검진 등을 지원하는 정책										
일자리 지원 정책	청년 취업을 위한 직장연계 및 직업훈련, 불합리한 고용환경 개선, 지역 중소기업 취업자를 위한 현금지원 등에 관한 정책										
주거지원 정책	청년들의 주거생활 지원을 위한 임대주택 지원 및 전월세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정책										
정책참여지원 정책	청년들의 의견 수렴과 정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 정책										

정책 평가	정책 평가	정책 평가										정책 평가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2.1	교육지원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일자리 지원
2.2	생활지원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주거지원
2.3	일자리 지원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정책참여 지원
2.4	정책참여 지원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생활지원
2.5	주거지원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교육지원

넷째로 청년 인터넷 패널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인터넷에 탑재한 후 웹 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순서는 대분류 질문인 5대 청년정책의 우선순위를 시작으로 중분류와 소분류 정책 중요도를 순차적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하였다. 단, 대분류-중분류-소분류로 이어진 질문에 응답자들이 응답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질문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조사 사이트를 구축하였다.

다섯째, 각 수준별 정책들의 상대적 중요도는 쌍대비교를 통해 얻은 자료를 쌍대비교행렬로 변환한 후, 아래와 같은 고유치 산정방법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상대적 중요도는 Saaty(1980)가 개발한 중요도 측정 계산방법을 MS Excel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우선, 최초의 쌍대비교 행렬을 중요도 행렬 A로 나타낼 때, 고유치 방법에 의해 $A \cdot w = n \cdot w$ 의 관계식이 성립하며, 이 식을 통해 w 를 구할 수 있다.(n 은 A의 고유치이고 w 는 A의 고유벡터) 그런데 AHP에서는 평가자가 정확한 w 를 모르고, 쌍대비교에 의해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행렬을 A' 이라 가정하고 행렬의 중요도 추정치는 w' 하여 ③과 같은 식을 통해 구할 수 있었다. 여기서 Lamda max는 행렬 A' 의 가장 큰 고유치로 n 에 접근하는 값을 가질수록 쌍대비교행렬 A의 수치들이 일관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2] AHP 분석을 통한 상대적 중요도 산출 방법

①	$a_{ij} = w_i/w_j (i, j = 1, \dots, n)$
②	$A = \begin{bmatrix} w_1/w_1 & w_1/w_2 & w_1/w_3 & \cdots & w_1/w_n \\ w_2/w_1 & w_2/w_2 & w_2/w_3 & \cdots & w_2/w_n \\ w_3/w_1 & w_3/w_2 & w_3/w_3 & \cdots & w_3/w_n \\ \vdots & \vdots & \vdots & \cdots & \vdots \\ w_n/w_1 & w_n/w_2 & w_n/w_3 & \cdots & w_n/w_n \end{bmatrix}$
③	$A' \cdot w' = \text{lamda max} \cdot w'$

여섯째, 응답자들의 정책(분야) 중요도 질문에 대한 응답치의 일관성 여부를 검증하였는데, 일관성 비율이 0.2가 넘는 응답과 신뢰성이 의심되는 응답(예를 들어 모든 정책이 동등하게 중요하다고 한 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고 다시 대상자를 조사하였다. 일관성 정도는<그림 4-3>의 ④와 같이 일관성지수(Consistency Index : CI)와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 CR)을 통해 산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일관성 비율의 수식에 있는 RI는 난수지수(Random Index)를 의미하는데, 이는 1에서 9까지의 수치를 임의로 설정하여 역수행렬을 작성하한 다음 이 행렬의 평균 일관성지수를 산출한 값으로 일관성의 허용한도를 나타낸다. 계층 내 평가요소의 수 n이 1에서 10까지 변화할 때의 난수지수는 <그림 4-3>의 ⑤ 와 같다.

[그림 4-3] 일관성 비율과 일관성 지수의 산출 방법

④

$$\lambda_{\max} = \frac{1}{n} \sum_{i=1}^n \frac{\sum_{j=1}^n w_i \times a_{ij}}{w_i}$$

$$C.I. = \frac{\lambda_{\max} - n}{n - 1}$$

$$C.R. = \frac{C.I.}{R.I.} \text{ (R.I. = Random Index)}$$

⑤

		Random Index								
n	1	2	3	4	5	6	7	8	9	10
RI	0	0	0.58	0.9	1.12	1.24	1.32	1.41	1.45	1.49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종합적인 결론 및 함의를 제시하기 위해 다수의 응답자들의 AHP 분석 결과를 하나로 통합하였다. 응답자들의 AHP 응답결과를 수학적 방법을 통해 통합하는 방법으로는 기하평균과 산술평균이 많이 사용되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도 결과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본 연구에서는 산술평균 방법을 사용하였다. 평가대상

이 되는 여러 정책(분야)들에 대한 종합선호도 순위(중요도)는 최하위 계층에 대한 직계 상위계층의 가중치 행렬에 그 상위계층에서 구한 가중치 행렬을 곱하여 구하였다.

제2절 청년정책 욕구 조사의 정책 영역별 분석 결과

1. 인구 통계적 변수

조사에 응답한 청년들의 인구 통계적 변수를 살펴보면 우선 남녀 성별에 있어 남성이 56.7%로 여성(43.3%) 보다 약 13%p정도 높았는데 이러한 성향은 각 이행 주기별로 대동소이하였다. 두 번째로 연령대의 경우, 대학 및 대학원생들 중에는 20~24세(55.0%)가, 취업준비생에서는 25~29세(51.0%)가, 그리고 미혼직장인에서는 30~34세(67.5%)가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표 4-4〉 청년정책 욕구조사 응답자의 인구 통계적 변수 현황

구분		전체	대학생· 대학원생	대학·대학원 졸업 후 취업준비생	미혼 직장인
		600(100.0)	200(100.0)	200(100.0)	200(100.0)
성별	남성	340(56.7)	113(56.5)	112(56.0)	115(57.5)
	여성	260(43.3)	87(43.5)	88(44.0)	85(42.5)
연령대	20~24세	147(24.5)	110(55.0)	33(16.5)	4(2.0)
	25~29세	243(40.5)	80(40.0)	102(51.0)	61(30.5)
	30~34세	210(35.0)	10(5.0)	65(32.5)	135(67.5)
혼인상태	미혼	600(100.0)	200(100.0)	200(100.0)	200(100.0)
교육수준	대학생	172(28.7)	172(86.0)		
	대학원생	28(4.7)	28(14.0)		
	대졸 이상	400(66.7)		200(100.0)	200(100.0)

구분		전체	대학생· 대학원생	대학·대학원 졸업 후 취업준비생	미혼 직장인
		600(100.0)	200(100.0)	200(100.0)	200(100.0)
직업	대학/대학원 재학 중	200(33.3)	200(100.0)		
	대학/대학원 졸업 후 취업 준비생	200(33.3)		200(100.0)	
	공무원, 직업 군인	10(1.7)			10(5.0)
	사무직	135(22.5)			135(67.5)
	기술직	11(1.8)			11(1.8)
	판매, 서비스직	13(2.2)			13(6.5)
	전문직	14(2.3)			14(7.0)
	생산, 기능, 노무직	7(1.2)			7(3.5)
	자영업자	9(1.5)			9(4.5)
	프리랜서	1(0.2)			1(0.5)
주거상태	본인 자가 거주	23(3.8)		1(0.5)	22(11.2)
	본인 전세 거주	62(10.3)	9(4.5)	13(6.5)	40(20.0)
	본인 월세 거주	100(16.7)	37(18.5)	29(14.5)	34(17.0)
	기숙사	16(2.7)	11(5.5)		5(2.5)
	부모님 집	393(65.5)	142(71.0)	154(77.0)	97(45.8)
	친구 등 지인 집	4(0.7)	1(0.5)	1(0.5)	2(1.0)
	고시원 거주	2(0.4)		2(1.0)	

2. 청년정책에 대한 영역별 중요도 분석 결과

가. 전체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영역별 중요도

우선 일자리, 교육, 주거, 생활, 정책참여 등 기존 5대 청년정책 분야에 대한 청년들의 정책에 대한 중요도를 살펴보면 일자리 지원정책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이 28.2%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주거지원(23.6%), 생활 지원(20.5%) 교육지원(15.4%)의 순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정책참여(12.3%)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남녀 성별과 연령대에 상관없이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5대 대분류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이행주기

별 중요도 분석에서도 대학 및 대학원생과 취업준비생에서는 5대 대분류 정책에 대하여 전체의견과 동일한 우선순위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미혼직장인의 경우, 일자리 지원정책(25.7%)보다는 주거지원(28.4%)에 대한 중요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미혼 직장인의 경우, 직장을 구한 상태에서 일자리 지원정책보다는 결혼 적령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거지원 정책에 대한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상승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판단된다.

〈표 4-5〉 5대 대분류 청년정책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분석 결과

구분		사례수	일자리 지원	교육 지원	주거 지원	생활 지원	정책 참여
[전 체]		600	28.2	15.4	23.6	20.5	12.3
청년 이행 주기	대학생·대학원생	200	27.9	17.0	21.7	20.7	12.7
	대학·대학원 졸업 후 취업준비생	200	31.2	15.4	20.8	20.5	12.2
	미혼 직장인	200	25.7	13.7	28.4	20.3	12.0
성별	남성	340	27.8	15.7	23.7	20.1	12.8
	여성	260	28.9	15.0	23.6	20.9	11.6
연령	20~24세	147	27.3	16.5	22.0	21.4	12.9
	25~29세	243	28.1	16.1	22.6	20.1	13.2
	30~34세	210	29.2	13.7	26.0	20.2	10.9

나. 일자리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영역별 중요도

가장 중요도가 높다고 평가된 일자리지원 정책의 유형으로 직업훈련지원정책, 취업비용지원정책, 취업연계지원정책, 고용환경개선지원정책 4가지에 대한 청년들의 중요도를 평가한 결과, 전반적으로는 공공기관 취업 시 비리근절과 같은 고용환경개선정책에 대한 중요도가 32.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취업연계지원정책(24.4%), 취업비용지원정책(23.8%)

의 순이었으며 마지막은 직업훈련지원정책(19.3%)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향은 청년이행주기 상에서는 재학생이, 성별에서는 여성이, 연령 대에서는 20~24세가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청년이행주기 상에서 취업준비생의 경우, 취업연계지원정책(25.2%)보다는 취업비용지원정책(27.2%)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했는데 이러한 경향은 남성(25.5%)과 25~29세(24.5%)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결국 대학 및 대학원 졸업 후 준비 중인 청년들 중 일반 직장보다는 공무원이나 대기업 등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하기 원하는 청년들의 경우, 어느 정도 취업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취업비용이 부담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추정된다.

〈표 4-6〉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영역별 중요도 분석 결과

구분		사례 수	직업훈련 지원정책	취업비용 지원정책	취업연계 지원정책	고용환경 개선정책
[전 체]		600	19.3	23.8	24.4	32.5
청년 이행주기	대학생·대학원생	200	18.5	22.8	25.4	33.2
	대학·대학원 졸업 후 취업준비생	200	17.7	27.2	25.2	29.8
	미혼 직장인	200	21.6	21.4	22.6	34.4
성별	남성	340	19.3	25.5	24.1	31.1
	여성	260	19.2	21.6	24.8	34.3
연령	20~24세	147	17.0	25.1	27.2	30.7
	25~29세	243	20.1	24.5	23.7	31.7
	30~34세	210	19.9	22.1	23.3	34.7

그렇다면 청년들은 취업비용지원정책에서 어떤 구체적인 지원정책들을 선호하는 것일까? 이와 관련해서 본 조사에서는 취업비용지원정책의 유형을 수당지급 정책, 월급보조, 자산형성지원정책 3가지로 나누어 상대적 중요도를 조사해본 결과 전체적으로 자산형성지원정책이 34.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수당지급(34.0%), 임금보조(31.1%)의 순이었다.

이와 같은 경향은 미혼직장인, 30~34세에서 동일한 모습을 보고 있었다. 청년집단들에 대한 세부정책별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보면 자산형성의 경우 미혼직장인(37.3%), 여성(36.3%), 30~34세(37.2%)에서 타 청년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수당기급지원정책에서는 취업준비생(35.1%)과 여성(36.1%), 그리고 25~29세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취업비용지원정책의 경우, 현재 도입된 자산형성정책인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영향력과 미혼직장인의 경우 결혼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고려할 때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또한 취업준비생이 자산형성보다는 수당기급에 대한 중요도가 높은 이유는 구직자에게 부여되는 청년구직수당 등이 도입되어 이를 반영하는 결과라고 이해된다.

〈표 4-7〉 청년 일자리 정책 중 취업비용정책에 대한 영역별 중요도 분석 결과

구분		사례 수	수당기급	임금보조	자산형성
[전 체]		600	34.0	31.1	34.9
청년 이행주기	대학생·대학원생	200	34.3	32.0	33.7
	대학·대학원 졸업 후 취업준비생	200	35.1	31.1	33.8
	미혼 직장인	200	32.5	30.2	37.3
성별	남성	340	32.3	33.8	33.9
	여성	260	36.1	27.5	36.3
연령	20~24세	147	32.5	32.7	34.8
	25~29세	243	35.7	31.2	33.1
	30~34세	210	33.0	29.8	37.2

한편, 일자리 정책 중 가장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던 직업훈련지원정책의 세분류 정책유형에 대한 중요도 평가에서는 국내기업체험 지원이 28.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자격증 취득지원(26.8%), 직무교육지원(23.0%), 해외기업 체험지원(22.2%)의 순이었다. 이와 같은 경

향은 청년이행주기 상에서는 재학생이, 연령대에서는 30~34세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세분류 정책유형을 각각 나누어 살펴보면 가장 중요도가 높은 국내기업체험지원의 경우 취업준비생이 30.9%로, 남성(27.2%)보다는 여성(29.0%)이, 그리고 30~34세(28.5%)가 기타 청년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자격증 취득지원에서는 미혼직장인(27.4%)이, 남성(29.0%)이, 25~29세(27.9%)에서 다른 청년집단보다 상대적 중요도가 높았다. 한편, 총 30개 직업훈련지원정책에서 절반(15개)을 차지하고 있지만 중요도에서는 낮게 나타난 직무교육지원정책은 재학생(24.6%)과 여성(24.9%), 그리고 30~34세(23.5%)에서 비교적 중요도가 높았다. 이와 같이 국내기업체험과 자격증 취득지원에 대한 중요도가 직무교육보다 높게 나타난 점은 청년들이 향후 어떤 직무를 담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원되는 직무교육보다는 현장에 적응하거나 실질적으로 업무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 등 실효성 있는 훈련지원 정책을 요구한다는 의사표현으로 해석된다.

〈표 4-8〉 청년 일자리 정책 중 직업훈련지원정책에 대한 영역별 중요도 분석 결과

구분		사례 수	직무교육 지원	국내기업 체험지원	해외기업 체험지원	자격증 취득지원
[전 체]		600	23.0	28.0	22.2	26.8
청년 이행 주기	대학생·대학원생	200	24.6	26.5	22.4	26.5
	대학·대학원 졸업 후 취업준비생	200	21.1	30.9	21.4	26.6
	미혼 직장인	200	23.1	26.5	22.9	27.4
성별	남성	340	21.5	27.2	22.3	29.0
	여성	260	24.9	29.0	22.2	23.9
연령	20~24세	147	22.8	27.5	22.8	27.0
	25~29세	243	22.7	27.9	21.6	27.9
	30~34세	210	23.5	28.5	22.6	25.5

다. 교육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영역별 중요도

5대 대분류 청년정책 중 4순위의 중요도를 나타냈던 교육지원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하위 정책들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분석결과, 교육비지원 정책이 30.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진로탐색지원정책(28.7%), 인건비 지원정책(22.6%), 연구비 지원정책(18.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우선순위 경향은 교육비 지원정책(28.8%)과 진로탐색지원정책(28.8%)에 대한 중요도가 동일하게 나타난 남성 집단을 제외한 전체 청년이행주기상의 집단과 여성, 그리고 전 연령대에서 동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각 세부 정책에 대한 집단별 중요도 결과를 살펴보면 가장 중요도가 높은 교육비 지원의 경우,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은 31.1%로 대학 및 대학원 졸업 후 취업준비생(30.2%)과 미혼 직장인(29.5%)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교육비 지원의 경우, 현재 직접 지원대상인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들이 기타 이행주기 상의 집단보다도 현재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민감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가장 중요도가 낮은 연구비 지원정책의 경우, 정책수혜자가 일부 정보통신 등 첨단 과학 분야 전공의 대학생, 석·박사 그리고 연구교수들이기 때문에 일반 청년들에게는 정책 지원의 필요성에서 둔감해 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표 4-9〉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영역별 중요도 분석 결과

구분		사례 수	교육비 지원정책	연구비 지원정책	인건비 지원정책	진로탐색 지원정책
[전 체]		600	30.2	18.4	22.6	28.7
청년 이행주기	대학생·대학원생	200	31.1	17.6	22.2	29.1
	대학·대학원 졸업 후 취업준비생	200	30.2	19.1	21.5	29.2
	미혼 직장인	200	29.5	18.6	24.1	27.8

구분		사례 수	교육비 지원정책	연구비 지원정책	인건비 지원정책	진로탐색 지원정책
성별	남성	340	28.8	19.7	22.7	28.8
	여성	260	32.2	16.8	22.4	28.6
연령	20~24세	147	31.0	17.1	21.3	30.7
	25~29세	243	30.8	19.0	22.7	27.6
	30~34세	210	29.1	18.8	23.4	28.7

라. 청년들의 주거 정책에 대한 영역별 중요도

5대 대분류 청년정책 중 일자리 정책 다음으로 중요도가 높았던 주거 지원정책의 하위 지원정책들에 대하여 청년들의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주택비용지원정책이 36.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공공주택지원정책(34.4%), 민간주택지원정책(28.8%)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주택비용 지원정책에 대한 중요도가 높은 청년 집단들을 살펴보면 청년이 행주기 상에서는 타 집단보다 대학생 및 대학원 재학생(39.3%)이, 남성 보다는 여성(40.0%)이, 타 연령대보다는 20~24세(38.8%)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성향을 보이고 있었다. 반면에 공공주택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청년이행주기 단계의 경우, 취업준비생(36.3%)과 미혼직장인(35.3%)과 재학생(31.7%)간에 격차가 컸고, 연령대에서는 30~34세(37.4%)와 20~24세(31.8%)간에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청년층 중 재학생이나 20~24세의 상대적으로 젊은 청년들은 저리의 월·전세 대출과 같은 주택대출비용 지원 정책이 중요한 반면에 결혼을 앞둔 30세 이상 청년층에게는 공적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정책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4-10〉 청년 주거 정책에 대한 영역별 중요도 분석 결과

구분		사례 수	공공주택 지원정책	민간주택 활용정책	주택비용 지원정책
[전 체]		600	34.4	28.8	36.7
청년 이행주기	대학생·대학원생	200	31.7	29.0	39.3
	대학·대학원 졸업 후 취업준비생	200	36.3	29.0	34.6
	미혼 직장인	200	35.3	28.4	36.3
성별	남성	340	34.6	31.1	34.3
	여성	260	34.2	25.8	40.0
연령	20~24세	147	31.8	29.4	38.8
	25~29세	243	33.5	30.5	36.0
	30~34세	210	37.4	26.5	36.1

마. 청년들의 생활지원 정책에 대한 영역별 중요도

5대 대분류 청년정책 중 3순위로 전체 평균 정도인 20.5%의 중요도 수준을 보여주었던 생활지원정책의 3가지 하위 지원정책인 건강검진지원, 생활비 대출지원, 현금지원 정책에 대한 중요도 분석결과, 현금지원정책이 39.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건강검진지원정책(34.4%), 그리고 생활비지원정책이 26.4%로 가장 낮았다. 현금지원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은 이유는 전액 현금인 근로 장학금이나 근로소득공제, 아동양육비 지원 등이 대출이나 분담액 지원보다 본인 부담이 적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재학생의 경우 생활비 지원정책(32.0%)의 순위가 3위가 아닌 2위였고, 미혼 직장인의 경우 건강검진지원정책이 1순위로 나타났다. 대학 및 대학원생의 경우, 대학에서 소액의 보험료로 건강검진이 가능한 반면, 저소득 저 연령의 청년들에게는 오히려 생활비가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판단된다. 또한 미혼 직장인의 경우, 취업한 기업이 전체 보험료의 절반정도를 지원하고 있지만 본인이 나머지

절반을 지불해야 하고, 건강검진 시, 부가적인 검사에 대한 비용도 만만치 않아 이를 지원해주는 정책을 선호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4-11) 청년 생활지원 정책에 대한 영역별 중요도 분석 결과

구분		사례 수	건강검진 지원정책	금융환경 지원정책	현금지원 정책
[전 체]		600	34.4	26.4	39.2
청년 이행주기	대학생·대학원생	200	28.9	32.0	39.1
	대학·대학원 졸업 후 취업준비생	200	33.7	26.1	40.2
	미혼 직장인	200	40.7	21.1	38.2
성별	남성	340	33.9	27.9	38.2
	여성	260	35.1	24.5	40.4
연령	20~24세	147	31.3	28.1	40.6
	25~29세	243	33.6	28.6	37.8
	30~34세	210	37.6	22.7	39.7

바. 청년들의 정책참여 정책에 대한 영역별 중요도

5대 대분류 청년정책 중 가장 중요도가 낮은 수준을 보여주었던 정책 참여 지원정책의 2가지 하위 지원정책인 국토순례나 해외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과 같은 애국심 고취 지원정책과 청년정책 토론회, 국군장병을 위한 이동 신문고 등 의견수렴마련 지원정책에 대한 중요도 분석결과, 의견수렴장 마련지원정책의 중요도가 65.32%로 높은 반면에 애국심 고취 지원정책은 34.7%로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지원정책에 대한 중요도 경향은 청년이행주기 단계에서나, 성별, 전 연령대에서 모두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의견 수렴장 마련 지원정책의 경우, 청년이행주기 단계에서는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66.8%)이, 성별에서는 남성(67.8%)이, 연령대에서는 20~24세(67.1)가 타 집단 보다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기존 청년정책의 수혜자인 청년들이 일방적으로 정책혜택이 주어지면 수령하는 수동적인 입장 보다는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능동적인 자세를 보여줌과 동시에 그 의견의 중심이 전통적으로 정치적 의견이 강했던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의 성향을 보여준다고 추정된다.

〈표 4-12〉 청년 생활지원 정책에 대한 영역별 중요도 분석 결과

구분		사례 수	애국심 고취 지원정책	의견 수렴장 마련 지원정책
[전 체]		600	34.7	65.3
청년 이행주기	대학생·대학원생	200	33.3	66.8
	대학·대학원 졸업 후 취업준비생	200	34.4	65.6
	미혼 직장인	200	36.4	63.6
성별	남성	340	32.2	67.8
	여성	260	37.9	62.1
연령	20~24세	147	32.9	67.1
	25~29세	243	35.9	64.1
	30~34세	210	34.5	6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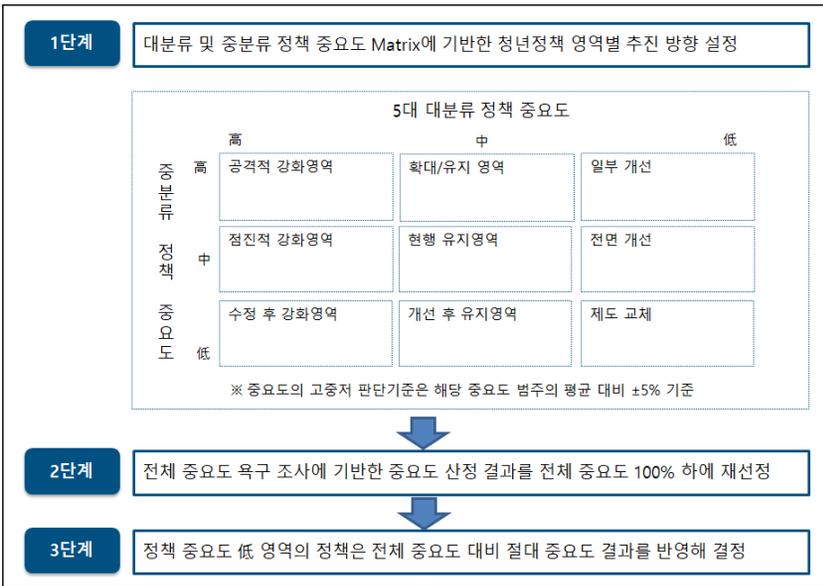
제3절 청년정책 방향설정을 위한 중요도 Matrix 분석

1. 세부 분석 방법론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정책의 영역별 정책에 대한 기초방향을 수입하는 데 있다. 이는 청년 정책 중 어떤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정책은 현 상황에서 유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인지와 관련된 정책방향 선정과 관계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분석한

청년정책의 수혜자인 청년정책들에 대한 중요도 결과를 이용하여 정책 방향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중요도 Matrix를 이용한 분석방법론을 설정하였다.

[그림 4-4] 청년정책 방향설정을 위한 중요도 Matrix 분석 방법론



분석 방법론은 크게 3단계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 단계는 앞서 분석한 대분류 및 중분류의 중요도 결과를 해당 정책의 대안의 개수를 고려한 평균치를 구한 후 高中低로 구분한 후 대분류 및 중분류 영역의 정책 중요도 결과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각 정책의 방향을 강화, 유지,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분류하였다. 중요도 Matrix 분석 틀은 기업이 고객만족경영을 위해 자주 사용하는 핵심요인들의 전략적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도-만족도 Matrix 분석틀을 벤치마킹해 수정한 것으로 전체 정책 중 향후 강화해야 할 정책과 유지해야 할 정책, 그리고 개선이 요구되는 장책을 구분하여 한

정된 예산 하에 정책을 추진 시 어떤 정책에 주력해야할 지를 알려주는 의사결정 툴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전체 대분류-중분류-세분류 청년정책에 관한 우선순위 경향이 조사결과 전반적으로 조사대상의 집단별로 즉, 청년이행주기나 성별, 연령별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강했지만 일부 집단에서는 일부 정책에 대한 중요도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존재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정책 방향설정에 있어 전체 응답자 기준 뿐만 아니라 각 집단별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중요도 Matrix 분석도 병행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앞서 계층 분석적 의사결정법(AHP)을 이용해 분석된 영역별 정책과 그 하위 수준에 속한 정책들, 즉 청년정책들 중 중분류와 세분류에 속한 정책 중요도의 조사결과를 전체 중요도 100% 하에서 재산정하는 것이다. 중요도를 100% 수준에서 재산정하면 전체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가독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향후 성과지표 관리에 있어서도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세 번째 단계는 중요도 Matrix 분석을 통해 도출된 각각의 정책의 추진방향을 보완하는 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욕구조사 결과의 경우, 전체 대분류 정책의 중요도 산정에서 정책 참여지원 정책의 중요도는 낮지만 범주화된 중분류의 정책 수가 2개이기 때문에 타 중분류 정책 대비 절대적 중요도 결과는 높게 나타난다. 또한 중요도 Matrix 분석 방법이 전체 청년 정책 중 5대 대분류 정책과 16개 중분류 정책을 이용하여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툴인 만큼 세분류가 존재하는 2개의 중분류 정책에 대한 시사점이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한계점을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2. 전체 청년정책의 대분류 및 중분류 중요도 Matrix 분석 결과

중요도 Matrix 분석에 앞서 본 연구에서는 정책이 속하는 영역을 구분하는 데 기준이 되는 중요도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보통 기업들이 사용하는 중요도-만족도 Matrix와 같은 기법들은 중요도와 만족도의 평균을 기준으로 2×2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이런 경우 측정 오차를 고려치 않고 중요도의 절대 수치에 따라 기업정책 수단이 강화전략이나 유지전략에 귀속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는 기업의 예산 손실로 이어지곤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사된 중요도 수치를 구간화하기로 하고 그 구간의 범위를 평균중요도의 $\pm 5\%$ 로 설정하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설문조사에서 적용되는 표본 측정오차범위인 $\pm 5\%$ 를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5대 대분류 정책을 전체 중요도 100%의 평균 중요도인 20%에 $\pm 5\%$ 를 적용하여 중요도 30%이상은 강화정책 영역에, 중요도 15~29%는 유지정책 영역에, 15% 미만은 개선정책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각 대분류 정책의 하위 영역별 중요도에서도 정책 개수가 4개이면 $25\% \pm 5\%$ 를, 3개이면 $33.3\% \pm 5\%$ 를, 2개이면 $50\% \pm 5\%$ 를 기준으로 하여 구간을 설정한 다음에 각각의 중분류 정책 영역에 정책들을 배치시켰다. 단, 대분류 중요도에서 제도개선정책으로 분류된 참여정책은 영역별 중요도에서 중간범위인 전면개선정책 이 부재하여 영역별 정책개선 수준을 일부 개선과 전면개선의 2개 영역으로 한정하였다.

전체 응답자 기준의 중요도 Matrix 분석결과, 강화정책 영역에는 일자리 정책이, 유지정책 분야에는 주거와 생활, 그리고 교육지원 정책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선 정책 영역에서는 정책참여 정책이 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화정책분야로 나타난 일자리 정책의 경우, 공격적 강화정책 분야에는 고용환경개선정책이, 점진적 강화정책에는 취업연계 및 취

업비용지원 정책이, 그리고 수정 후 강화정책에서는 직업훈련지원 정책이 배정되었다. 둘째로 유지정책 3가지 중 가장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주거 정책의 경우, 확대 또는 현행 유지가능성이 높은 정책 분야에는 전월세 대출 지원과 같은 주거 비용지원정책이, 현행정책을 유지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영역에는 공공주택지원정책과 민간주택 활용지원 정책이 배정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개선정책으로 분석된 정책참여정책에서는 일부개선 정책 분야에 정책 의견수렴장 지원정책이, 그리고 전면 개선 정책으로는 국토순례지원과 같은 애국심 고취지원 정책이 각각 배치되었다.

〈표 4-13〉 전체 응답자 기준 중요도 Matrix 분석 결과

구분	전 체		
	1순위	2순위	3순위
강화 정책	일자리		
공격적 강화	- 고용환경개선		
점진적 강화	- 취업연계지원, 취업비용지원		
수정 후 강화	- 직업훈련지원		
유지 정책	주거	생활	교육
확대 유지	- 주택비용지원	- 현금지원	- 교육비 지원
현행 유지	- 공공주택지원, 민간주택활용	건강검진지원	- 인건비 지원, 진로탐색지원
일부 유지		- 금융환경지원	- 연구비 지원
개선 정책	정책참여		
전면 개선	- 애국심 고취지원		
일부 개선	- 정책의견 수렴장 지원		

주: 5대 대분류 정책은 평균 중요도 20%±5%를 기준으로 중요도 30%이상은 강화전략, 중요도 15~29%는 유지전략, 15% 미만은 개선정책으로 분류, 영역별 중요도는 정책 개수가 4개이면 25%±5%, 3개이면 33.3%±5%, 2개이면 50%±5%를 기준으로 대분류 정책과 같이 구간을 설정해 분류함

한편 응답자를 세분화하여 3가지 집단별로 중요도 Matrix 분석을 실시한 결과 우선 청년주기이행 단계에서는 전체 응답자와 달리 미혼 직장인의 경우, 주거 정책이 일자리정책보다 중요도가 높아 제1순위의 강화 정책 영역에 배정되었다. 그리고 2순위강화정책인 일자리 정책에서 직업 훈련지원정책의 중요도가 재학생이나 취업준비생 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외에도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들에서는 전체 응답자 대비 일자리정책의 취업연계지원 정책(25.4%)과 생활지원 정책 중 생활비 대출지원 정책의 중요도(32.0%)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각각 공격적 강화 영역과 현행 유지정책 영역에 포함시켰다. 또한 취업준비생에서는 주거 정책의 민간주택 활용지원 정책에서 전체 응답자 대비 중요도가 높게 나타나 현행 유지정책에 포함시켰다.

〈표 4-14〉 청년이행주기별 중요도 Matrix 분석 결과

이행 주기	구분	전체 청년 정책		
		1순위	2순위	3순위
대학 및 대학원생	강화 정책	일자리		
	공격적 강화	- 고용환경개선, 취업연계지원		
	점진적 강화	- 취업비용지원		
	수정 후 강화	- 직업훈련지원		
	유지 정책	주거	생활	교육
	확대·유지	- 주택비용지원	- 현금지원	- 교육비 지원
	현행 유지	- 공공주택지원, 민간주택활용	- 건강검진, 생활비대출	- 인건비, 진로탐색지원
	일부 개선			- 연구비 지원
	개선 정책	정책참여		
	제도 교체	- 애국심 고취		
	전면 개선	- 정책의견 수렴장 지원		

이행 주기	구분	전체 청년 정책		
		1순위	2순위	3순위
졸업 후 취업 준비생	강화 정책	일자리		
	공격적 강화	- 고용환경개선, 취업비용지원		
	점진적 강화	- 취업연계지원		
	수정 후 강화	- 직업훈련지원		
	유지 정책	주거	생활	교육
	확대·유지		- 현금지원	- 교육비 지원
	현행 유지	- 주택비용지원 - 공공주택지원 - 민간주택활용	- 건강검진지원	- 인건비 지원 - 진로탐색지원
	일부 개선		- 금융환경지원	- 연구비 지원
	개선 정책	정책참여		
	제도 교체	- 애국심 고취		
전면 개선	- 정책의견 수렴장 지원			
미혼 직장인	강화 정책	- 주거	일자리	
	공격적 강화		- 고용환경개선	
	점진적 강화	- 주택비용지원 - 공공주택지원 - 민간주택활용	- 취업연계 - 취업비용지원 - 직업훈련지원	
	유지 정책	생활	교육	
	확대·유지	- 건강검진지원 - 현금지원		
	현행 유지		- 교육비 지원 - 인건비 지원 - 진로탐색지원 - 연구비 지원	
	일부 개선	- 금융환경지원		
	개선 정책	정책참여		
	제도 교체	- 애국심 고취		
	전면 개선	- 정책의견 수렴장 지원		

두 번째로 남녀 별로 진행된 중요도 Matrix 분석에서는 남성의 경우, 일자리지원 정책 중 취업비용지원정책(25.5%)의 중요도가 전체응답자 대비 높게 나타나 공격적 강화정책 영역에 배정되었으며, 교육정책 중 교육비 지원정책의 중요도가 전체 응답자 대비 낮아 현행 유지정책 영역에

배정되었다. 또한 여성에서는 대부분의 정책영역들이 전체 응답자와 동일한 수준이었으나 주거지원 정책 중 민간주택활용지원정책의 중요도 (25.8%)가 전체 응답자 대비 낮게 나타나 일부 개선정책에 배정되었다.

〈표 4-15〉 성별 중요도 Matrix 분석 결과

성별	구분	전체 청년 정책		
		1순위	2순위	3순위
남성	강화 정책	일자리		
	공격적 강화	- 고용환경개선, 취업비용지원		
	점진적 강화	- 취업연계		
	수정 후 강화	- 직업훈련지원		
	유지 정책	주거	생활	교육
	확대·유지		- 현금지원정책	
	현행 유지	- 주택비용지원 - 공공주택지원 - 민간주택활용	- 건강검진지원	- 교육비 지원 - 인건비 지원 - 진로탐색지원
	일부 개선		- 금융환경지원	- 연구비 지원
	개선 정책	정책참여		
	제도 교체	- 애국심 고취		
	전면 개선	- 정책의견 수렴장 지원		
여성	강화 정책	일자리		
	공격적 강화	- 고용환경개선		
	점진적 강화	- 취업연계 - 취업비용지원		
	수정 후 강화	- 직업훈련지원		
	유지 정책	주거	생활	교육
	확대·유지	- 주택비용지원	- 현금지원정책	- 교육비 지원
	현행 유지	- 공공주택지원	- 건강검진지원	- 인건비 지원 - 진로탐색지원
	일부 개선	- 민간주택활용	- 생활비대출	- 연구비 지원
	개선 정책	정책참여		
	제도 교체	- 애국심 고취		
	전면 개선	- 정책의견 수렴장 지원		

두 번째로 연령대 별로 진행된 중요도 Matrix 분석에서는 20~24세의 경우, 생활지원정책 중 생활비대출 지원정책(31.3%)과 교육정책 중 진로 탐색지원 정책(30.3%)의 중요도가 전체응답자 대비 높게 나타나 각각 점진적 강화영역과 확대유지영역에 배정되었고, 25~29세의 경우, 일자리 정책 중 직업훈련지원(20.1%)의 중요도가 전체 응답자 대비 높은 반면에 주거정책 중 주택비용지원과 생활지원 정책(28.6%) 중 생활비 대출지원 정책이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각각 현행유지 정책에 배정되었다. 마지막으로 30~34세의 경우, 주거지원 정책 중 주택비용 지원정책(37.4%)과 교육정책 중 교육비 지원정책의 중요도가 전체 응답자 대비 낮게 나타나 각각 현행 유지정책 영역에 배정되었다.

〈표 4-16〉 연령별 중요도 Matrix 분석 결과

연령	구분	전체 청년 정책		
		1순위	2순위	3순위
20 ~ 24세	강화 정책	일자리		
	공격적 강화	- 고용환경개선		
	점진적 강화	- 취업비용지원, 취업연계		
	수정 후 강화	- 직업훈련지원		
	유지 정책	주거	생활	교육
	확대·유지	- 주택비용지원	- 현금지원정책	- 교육비 지원 - 진로탐색지원
	현행 유지	- 공공주택지원 - 민간주택활용	- 건강검진지원 - 생활비대출	- 인건비 지원
	일부 개선			- 연구비 지원
	개선 정책	정책참여		
	제도 교체	- 애국심 고취		
전면 개선	- 정책의견 수렴장 지원			

108 청년정책 영역별 기초방향 수립연구

연령	구분	전체 청년 정책		
		1순위	2순위	3순위
25 ~ 29세	강화 정책	일자리		
	공격적 강화	- 고용환경개선		
	점진적 강화	- 취업연계 - 취업비용지원 - 직업훈련지원		
	수정후 강화			
	유지 정책	주거	생활	교육
	확대·유지			- 교육비 지원
	현행 유지	- 주택비용지원 - 공공주택지원 - 민간주택활용	- 현금지원정책 - 건강검진지원 - 생활비대출	- 인건비 지원 - 진로탐색지원
	일부 개선			- 연구비 지원
	개선 정책	정책참여(13.2%)		
	제도 교체	- 애국심 고취		
	전면 개선	- 정책수렴지원		
30 ~ 34세	강화 정책	일자리(29.2%)		
	공격적 강화	- 고용환경개선		
	점진적 강화	- 취업연계 - 취업비용지원		
	수정 후 강화	- 직업훈련지원 (19.9%)		
	유지 정책	주거(26.0%)	생활(20.2%)	교육(13.7%)
	확대·유지		- 현금지원정책	
	현행 유지	- 주택비용지원 (37.4%) - 공공주택지원 (36.1) - 민간주택활용 (26.5%)	- 건강검진지원 (40.7%)	- 교육비 지원 - 인건비 지원 - 진로탐색지원 - 연구비 지원
	일부 개선		- 생활비대출(22.7%)	
	개선 정책	정책참여(10.9%)		
	제도 교체	- 애국심 고취		
전면 개선	- 정책수렴지원			

3. 청년정책 기초방향 설립을 위한 전체 중요도 재 산정 및 핵심과제 선정

우선, 청년정책에 대한 영역별 정책방향에 대한 조사 응답결과를 전체 중요도 100%하에 재분류하였다. 즉 5대 대분류정책 하의 중분류 및 세분류 정책에 대한 응답결과를 상위 정책에 대한 중요도를 100%로 가정하고 이에 비례하여 앞서 제2장에서 제시한 중요도 수치를 재산정한 것이다. 예를 들어 전체 청년정책에 대한 중요도를 100%라고 한다면 그 중 가장 중요도가 높은 일자리 지원정책은 29.1%의 중요도를 가지며, 또한 일자리지원 정책 중 가장 중요도가 낮았던 직업훈련 지원정책은 5.5%의 중요도를 가지게 된다. 또한 대분류 정책 중 중요도가 11.7%로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던 정책참여지원정책 중 의견 수렴장 마련지원정책의 중요도의 경우 8.1%로 재 산정되었다. 이와 같은 중요도 재산정은 앞서 분석된 중요도 Matrix 분석에 의한 정책방향의 결정과 더불어 중요도 수치의 절대가치를 중심으로 핵심과제를 선정하는 데 기초자료가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체 응답자 결과 뿐 만아니라 청년이행 주기 등 기타 집단도 다음과 같이 재 산정하였다.

〈표 4-17〉 청년이행주기별 청년정책에 대한 중요도 재 산정 결과

(단위: %)

구분	전 체	청년이행주기		
		대학·대학원 재학생	대학/대학원 후 취업준비생	미혼 직장인
중요도	100.0	100.0	100.0	100.0
일자리지원정책	29.1	28.7	32.4	26.2
직업훈련지원정책	5.5	5.3	5.5	5.6
- 직무교육지원	1.3	1.3	1.1	1.3
- 국내기업체험지원	1.5	1.4	1.7	1.5

110 청년정책 영역별 기초방향 수립연구

구분	전 체	청년이행주기		
		대학·대학원 재학생	대학/대학원 후 취업준비생	미혼 직장인
- 해외기업체험지원	1.2	1.2	1.2	1.3
- 자격증취득지원	1.5	1.4	1.5	1.5
취업비용지원정책	6.9	6.5	8.9	5.5
- 수당지급정책	1.8	1.8	2.3	1.5
- 월급보조정책	1.5	1.4	1.8	1.2
- 자산형성정책	3.6	3.4	4.9	2.8
취업연계지원정책	7.0	7.3	8.1	5.8
고용환경개선정책	9.6	9.7	9.8	9.3
교육지원정책	15.1	16.9	15.1	13.3
교육비지원정책	4.7	5.4	4.7	4.0
연구비지원정책	2.7	2.9	2.8	2.4
인건비지원정책	3.4	3.7	3.2	3.2
진로탐색지원정책	4.3	4.9	4.4	3.7
주거지원정책	23.9	21.8	20.8	29.0
공공주택지원정책	8.2	6.8	7.6	10.3
민간주택활용정책	6.8	6.3	6.0	8.1
주택비용지원정책	8.9	8.7	7.2	10.6
생활지원정책	20.2	20.4	20.1	20.1
건강검진지원정책	7.0	5.9	6.8	8.3
금융환경지원정책	5.2	6.5	5.1	4.0
현금지원정책	8.0	8.1	8.2	7.7
정책참여지원정책	11.7	12.1	11.6	11.4
애국심 고취 지원정책	3.6	3.5	3.5	3.7
의견 수렴장 마련 지원정책	8.1	8.7	8.1	7.7

〈표 4-18〉 성별 청년정책에 대한 중요도 재산정 결과

(단위: %)

구분	전 체	청년이행주기	
		남성	여성
중요도	100.0	100.0	100.0
일자리지원정책	29.1	27.8	28.9
직업훈련지원정책	5.5	5.4	5.5
- 직무교육지원	1.3	1.2	1.4
- 국내기업체험지원	1.5	1.5	1.6
- 해외기업체험지원	1.2	1.2	1.2
- 자격증취득지원	1.5	1.6	1.3
취업비용지원정책	6.9	7.1	6.2
- 수당지급정책	1.8	2.3	2.2
- 월급보조정책	1.5	2.4	1.7
- 자산형성정책	3.6	2.4	2.3
취업연계지원정책	7.0	6.7	7.2
고용환경개선정책	9.6	8.6	9.9
교육지원정책	15.1	15.7	15.0
교육비지원정책	4.7	4.5	4.8
연구비지원정책	2.7	3.1	2.5
인건비지원정책	3.4	3.6	3.4
진로탐색지원정책	4.3	4.5	4.3
주거지원정책	23.9	23.7	23.6
공공주택지원정책	8.2	8.2	8.1
민간주택활용정책	6.8	7.4	6.1
주택비용지원정책	8.9	8.1	9.4
생활지원정책	20.2	20.1	20.9
건강검진지원정책	7.0	6.8	7.3
금융환경지원정책	5.2	5.6	5.1
현금지원정책	8.0	7.7	8.4
정책참여지원정책	11.7	12.8	11.6
애국심 고취 지원정책	3.6	4.1	4.4
의견 수렴장 마련 지원정책	8.1	8.7	7.2

〈표 4-19〉 연령별 청년정책에 대한 중요도 재산정 결과

(단위: %)

구분	전 체	청년이행주기		
		20~24세	25~29세	30~34세
중요도	100.0	100.0	100.0	100.0
일자리지원정책	29.1	27.3	28.1	29.2
직업훈련지원정책	5.5	4.6	5.6	5.8
- 직무교육지원	1.3	1.0	1.3	1.4
- 국내기업체험지원	1.5	1.3	1.6	1.7
- 해외기업체험지원	1.2	1.0	1.2	1.3
- 자격증취득지원	1.5	1.2	1.6	1.5
취업비용지원정책	6.9	6.9	6.9	6.5
- 수당지급정책	1.8	2.2	2.5	2.1
- 월급보조정책	1.5	2.3	2.2	1.9
- 자산형성정책	3.6	2.4	2.3	2.4
취업연계지원정책	7.0	7.4	6.7	6.8
고용환경개선정책	9.6	8.4	8.9	10.1
교육지원정책	15.1	16.5	16.1	13.7
교육비지원정책	4.7	5.1	5.0	4.0
연구비지원정책	2.7	2.8	3.1	2.6
인건비지원정책	3.4	3.5	3.7	3.2
진로탐색지원정책	4.3	5.1	4.4	3.9
주거지원정책	23.9	22.0	22.6	26.0
공공주택지원정책	8.2	7.0	7.6	9.7
민간주택활용정책	6.8	6.5	6.9	6.9
주택비용지원정책	8.9	8.5	8.1	9.4
생활지원정책	20.2	21.4	20.1	20.2
건강검진지원정책	7.0	6.7	6.8	7.6
금융환경지원정책	5.2	6.0	5.7	4.6
현금지원정책	8.0	8.7	7.6	8.0
정책참여지원정책	11.7	12.9	13.2	10.9
애국심 고취 지원정책	3.6	4.2	4.7	3.8
의견 수렴장 마련 지원정책	8.1	8.7	8.5	7.1

그런 다음 전체 100% 중요도에서 16개 중분류 정책의 평균 중요도인 6.25%보다 상위인 중분류 정책들을 핵심관리과제로 각각의 집단에서 분류하였다. 분류결과 총 16개 중분류과제 중 9개가 핵심관리과제로 도출되었는데 대분류 수준에서 교육지원정책이 누락했을 뿐 일자리 정책 등 4개 대분류 정책이 포함되었다.

〈표 4-20〉 청년정책의 중분류 정책 중 핵심과제 도출

구분	대분류 정책	중분류 1순위		중분류 2순위		중분류 3순위		
		정책	%	정책	%	정책	%	
전체	일자리 지원	고용환경개선	9.6	취업연계	7.0	취업비용	6.9	
	주거지원	주택비용지원	8.9	공공주택지원	8.2	민간주택활용	6.8	
	생활지원	현금지원	8.0	건강검진지원	7.0			
	정책참여지원	의견 수렴장 마련	8.1					
청년 이행 주기	재학생	일자리 지원	고용환경개선	9.7	취업연계	7.3	취업비용	6.5
		주거지원	주택비용지원	8.7	공공주택지원	6.8	민간주택활용	6.3
		생활지원	현금지원	8.1	생활비대출	6.5		
		정책참여지원	의견 수렴장 마련	8.7				
	취업 준비생	일자리 지원	고용환경개선	9.8	취업비용	8.9	취업연계	8.1
		주거지원	공공주택지원	7.6	주택비용지원	7.2		
		생활지원	현금지원	8.2	건강검진지원	6.8		
		정책참여지원	의견 수렴장 마련	8.1				
	미혼 직장인	일자리 지원	고용환경개선	9.3				
		주거지원	주택비용지원	10.6	공공주택지원	10.3	민간주택활용	8.1
		생활지원	건강검진지원	8.3	현금지원	7.7		
		정책참여지원	의견 수렴장 마련	7.7				
성 별	남성	일자리 지원	고용환경개선	8.6	취업비용	7.1	취업연계	6.7
		주거지원	공공주택지원	8.2	주택비용지원	8.1	민간주택활용	7.4
		생활지원	현금지원	7.7	건강검진지원	6.8		
		정책참여지원	의견 수렴장 마련	8.7				
	여성	일자리 지원	고용환경개선	9.9	취업연계	7.2		
		주거지원	주택비용지원	9.4	공공주택지원	8.1		
		생활지원	현금지원	8.4	건강검진지원	7.3		
		정책참여지원	의견 수렴장 마련	7.2				

구분	대분류 정책	중분류 1순위		중분류 2순위		중분류3순위		
		정책	%	정책	%	정책	%	
연령	20 ~ 24세	일자리 지원	고용환경개선	8.4	취업연계	7.4	취업비용	6.9
		주거지원	주택비용지원	8.5	공공주택지원	7.0	민간주택활용	6.5
		생활지원	현금지원	8.7	건강검진지원	6.7		
		정책참여지원	의견 수렴장 마련	8.7				
	25 ~ 29세	일자리 지원	고용환경개선	8.9	취업비용	6.9	취업연계	6.7
		주거지원	주택비용지원	8.1	공공주택지원	7.6	민간주택활용	6.9
		생활지원	현금지원	7.6	건강검진지원	6.8		
		정책참여지원	의견 수렴장 마련	8.7				
	30 ~ 34세	일자리 지원	고용환경개선	10.1	취업연계	6.8	취업비용	6.5
		주거지원	공공주택지원	9.7	주택비용지원	9.4	민간주택활용	6.9
		생활지원	현금지원	8.0	건강검진지원	7.6		
		정책참여지원	의견 수렴장 마련	7.1				

각각의 대분류 정책 하에 핵심과제들로 분류된 정책들을 살펴보면 일자리지원정책의 경우, 고용환경개선, 취업연계지원, 취업비용지원의 정책이 핵심과제로 도출되었고, 두 번째로 주거지원 정책의 경우, 주택비용 지원, 공공주택지원, 민간주택활용지원 정책 3가지가 선정되었다. 세 번째로 생활지원정책의 경우에는 현금지원정책과 건강검진지원정책이 선정되었고, 네 번째로 정책참여지원 정책의 경우, 의견 수렴장 지원 정책이 선정되었다. 한편 집단별 분석에서는 거의 모든 집단에서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핵심과제 선정과 거의 성향이 나타났는데 청년이행주기상의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들은 생활지원정책 중 건강검진 지원 보다는 생활비 대출지원정책을 핵심과제로 뽑았고, 성별에 있어 여성들은 일자리지원정책 중 취업비용지원정책과 주거지원정책 중 민간주택활용정책, 그리고 생활지원정책 중 생활비 지원정책을 타 집단과 달리 핵심과제에서 제외시켰다. 마지막으로 핵심과제도출에서는 중요도 Matrix 분석에서 일부개선 정책영역으로 도출된 청년들의 정책참여 수렴장 마련지원

정책이 중요도 절대 수치가 높아 핵심관리과제로 포함되었다. 그러는 반면 교육지원정책은 낮은 대분류 중요도 대비 4개의 영역별 중요도에서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핵심관리과제에 모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5장

청년정책의 영역별 정책방향과 평가관리체계 개선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청년정책의 영역별 기초방향 설정

제3절 청년정책의 평가관리 체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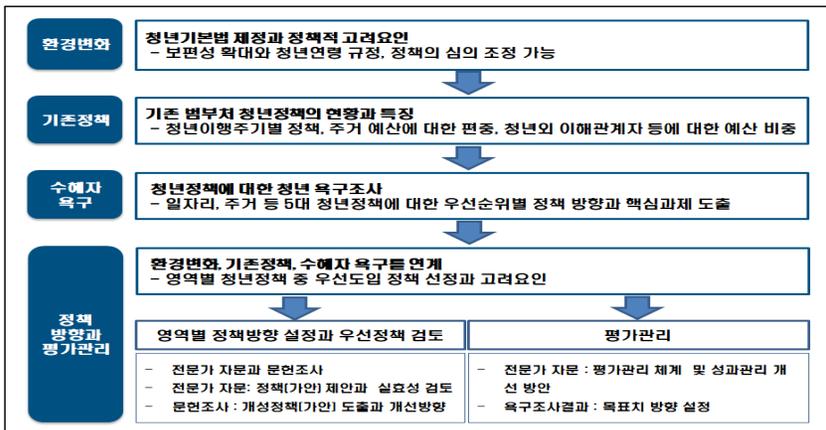
제 5 장

청년정책의 영역별 정책방향과 평가관리체계 개선

제1절 분석 개요

본 연구에서는 서론 부분에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크게 4단계의 연구방법론은 제시하였다. 첫째는 청년정책의 환경변화로써 청년기본법 제정이 청년정책 방향 설정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인인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청년기본법과 시행령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단계는 기존 범부처가 추진해온 청년정책의 현황과 특징을 파악해 보완하거나 강화해야할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청년정책의 수혜자인 청년들이 직접 필요로 하는 정책이 어떤 것이 있으며 이를 정책실행자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를 구체화하기 위한 청년 욕구조사였다.

[그림 5-1] 청년 정책 영역별 기초방향 설정을 위한 분석방법론



이를 기반으로 본 장에서는 청년정책의 영역별 기초방향과 각 정책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 개선 방향 도출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 방법론을 설정하였다. 우선 청년정책의 영역별 정책 방향의 경우 앞서 분석된 3가지 정책 자료를 기반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한 후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개발이나 개선방안을 전문가 의견 수립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와 기존 청년정책의 실효성 검토가 이루어졌던 문헌들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청년기본법 제정으로 인해 향후 전체 청년정책이 기존의 선별적 정책에서 보편적 정책으로 인식될 수 있을 만큼 보편성 있는 새로운 정책의 도입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정책의 심의·의결에 대한 권한이 확보된 만큼 182개 기존 청년 정책들 중 수혜자인 청년들의 정책에 대한 욕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 등 정책들의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 조정가능하다는 관리 가능성도 담고 있다. 또한 기존 정책에 대한 청년 욕구조사 결과는 청년정책의 전체 및 영역별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어느 개별 정책에 대하여 새로운 정책개발 영역과 개선정책들의 분류를 가능케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년영역별 정책 방향은 앞서 언급한 3가지 분석 결과를 전제조건으로 가정하고 향후 추진해야할 정책방향 제시와 더불어 각 영역별로 새롭게 도입해야 하거나 개선해야 할 정책들을 대안으로 그 정책들의 실효가능성 검토에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각 영역별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하여 앞서 언급한 내용에 대해 자문을 구한 후, 관련정책에 대한 문헌조사를 통해 정책의 실효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우선, 특히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일자리 등 5대 청년정책 영역별로 전문가를 섭외하여 청년기본법 제정이 청년정책방향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정책에 대한 욕구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각 영역별로 추진해야할 정책들

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 그리고 현 정책 이외에 청년들에게 보편적으로 추진 가능한 새로운 정책들에 대한 아이디어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 과정에서 현 정책들 중 효과성이 낮은 정책들의 이유와 향후 수정방향에 대한 의견도 동시에 수집하였다. 결국, 이와 같은 전문가 간담회 결과를 기반으로 본고에서는 청년정책의 전체 추진방향과 영역별 추진 방향 이외에 청년기본법 제정 효과로 도입 가능한 보편성 강화 측면의 정책들에 대하여 문헌조사 등을 통해 현황을 검토한 후, 제2절 각 영역별 청년정책에서 보편성 추진 방향이라는 항목으로 도입 정책들을 제시하였다.

〈표 5-1〉 청년정책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 참석자와 주요 논의 내용

정책구분	전문가 간담회 참석자	일시 및 장소	주요내용
일자리	- 한국노동연구원 *** 연구위원 - 한국노동연구원 *** 연구위원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선임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교수	- 2020 8.7, 10:00~13:00 - 서울역 대우재단 빌딩 5층 스파크 플러스 회의실	
교육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선임연구위원 - 한국교육개발원 *** 선임연구위원 - 건국대학교 *** 교수	- 2020 8.13, 10:00~13:00 - 서울역 대우재단 빌딩 5층 스파크 플러스 회의실	-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청년정책 방향 제시
생활	- 좋은 삶 생활경제연구소 굿랩 *** 소장 -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교수	- 2020 8.13, 14:00~18:00 - 서울역 대우재단 빌딩 5층 스파크 플러스 회의실	- 청년육구조사 결과와 관련된 정책 도출
주거	- 충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 *** 교수 - 국토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 2020 8.14, 10:00~13:00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조사센터 회의실	- 보편성 강화를 위한 청년정책 아이디어 제시
참여	- 대구한의대 청소년교육상담학 *** 교수 - 경제문화공동체 더함 *** 소장 - 부천시 여성청소년 재단 *** 이사장 - 아주대학교 스포츠 레저학과 *** 교수 -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 교수 - 청년유니온 **** 사무처장	- 2020 8.14, 14:00~18:00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조사센터 회의실	

두 번째로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에서는 앞서 기존 182개 청년정책에 대한 분석 시 도출된 성과지표와 목표치 설정의 문제점을 청년육구조사와 연결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평가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전체 성과관리 체계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적합한 성과지표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런 다음 청년육구조사 결과인 각각의 영역과 세분류 정책들에 대한 방향들을 적용시켜 목표치 설정 방향을 재구성하는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주목했던 점은 개별 청년정책 사업의 성과뿐만 아니라 전체 정책들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관리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기존의 정부 기본계획에서 사용되었던 몇몇 특정 지표 중심의 성과관리는 5년 주기로 반복되는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부적합하기 때문이었다.

제2절 청년정책의 영역별 기초방향 설정

1. 전체 청년정책 방향

본 연구의 연구목적 중 첫째인 기존의 범부처 청년정책이 청년기본법 제정으로 인해 향후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와 관련하여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 <표 5-2>와 같다. 첫째는 정책 범위에서 그 범위가 확장되었다는 것이다. 기존 청년정책은 청년 창업지원정책을 포함해서 주거, 생활, 교육, 참여 크게 5대 대분류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청년기본법에서는 정책 분야를 크게 9가지로 세분화 하고 있다. 청년기본법 제4장에서는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으로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제17조), 청년창업지원(제18조), 청년능력개발(19조), 청년주거지원(제20조), 청년복지증진(제21조), 청년금융생활지원(제22조), 청년문화활동지원(제

23조), 청년국제협력지원(제24조) 등 총 8개를 명시하고 있으며, 더불어 제13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제 14조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그리고 제15조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확대 부분에서 위원회 구성이나 정책 결정과정에서 위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 다양한 청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표 5-2〉 전체 청년 정책의 정책방향 설정

구분	기존 청년정책(5대분류)	청년기본법(9대 분류)	정책 대상 보편성 정도	수혜자 욕구: 정책방향
일자리	- 일자리 지원 (청년창업 포함)	-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질 - 창업지원정책 포함	낮음	기존정책 강화
주거	- 주거	- 주거	높음	기존정책 유지
생활	- 생활(금융환경, 저소득 계층 수당지급 포함)	- 복지증진 - 금융생활지원	중간	기존정책 유지
교육	- 교육	- 능력개발지원	중간	기존정책 유지
참여	- 참여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높음	기존정책 개선
문화	- 없음	- 청년문화활동	높음	신규 개발정책
국제협력	- 없음	청년국제협력지원	높음	신규 개발정책

주: 보편성 정도에서 기존 5개 정책은 〈표3-19〉의 전체 과제 수 대비 일반청년 대상 과제비율로 측정, 일자리(3개/104개), 교육(2개/37개), 생활(2개/16개), 참여(5개/12개), 이중 주거는 무주택자 청년이 보편적이라고 판단하여 高로 설정, 문화와 국제협력은 기존 정책이 부재해 청년기본법 규정을 정용해 보편성 高 정책으로 분류

이중 청년창업, 복지증진, 금융생활지원, 청년참여 등 4개 청년정책은 부족하나마 기존 청년정책에 포함되어 있어 정책방향 설정에 큰 어려움이 없으나 청년문화활동지원과 국제협력지원의 경우에는 부재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청년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이나 청년 국제협력을 지원하는 분야에 대한 새로운 청년 정책을 개발·시행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는 청년기본법의 취지인 청년들의 권익향상 및 평등한 기회 제공 등 보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정책 대상의 확대 또는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제3장에서 기존 정책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현 청년정책들이 연령보다는 청년의 이행주기 즉,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졸업 후 취업준비생-미혼 직장인 단계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청년기본법에서 설정한 19~34세 청년 모두에게 혜택이 가는 보편적인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각 분야별 청년정책 대상의 연령이나 수혜자 조건을 살펴보면 일자리 정책의 경우 연령이 15세에서 39세까지 설정되어 있으며, 34세 이상인 경우는 청년 창업희망자, 대학원 생 및 연구교수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생활분야에는 보편적인 청년 전부보다는 군인이나 대학생 이외에 신용회복 지원이나 햇살론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이나 근로빈곤 청년 등 특정한 대상들에 대한 정책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교육정책 중 교육비 지원에서도 대표적인 청년정책인 국가장학금 지원정책의 경우, 부모의 소득분위에 따라 지원대상이 분류된다. 따라서 기존 정책 분야의 경우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되 청년대상 모두를 포괄하는 보편적인 정책을 개발하거나 기존정책을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본고에서는 제3장의 기존 과 4장에서 분석한 청년대상의 욕구조사 결과에 기반한 청년정책의 정책 방향과 청년기본법 제정의 의미를 연결시켜, 향후 전체 정책 방향을 설정하였다. 일자리와 주거 정책의 경우, 기존 정책의 강화정책을 추진하되 기존 정책 중 보편성 있는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고, 교육·생활의 경우에는 기존정책은 유지하되 새롭게 보편적인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리고 참여, 문화 활동지원과 국제협력지원은 전체적으로 청년이행주기와 연령대와 관련성이 있다는 근거 확보가 부족하여 신규과제를 개발하되, 보편성이 강한 정책들을 고려해볼만 하다고 판단된다.

2. 청년 일자리 지원정책에 대한 정책방향 설정

앞서 전체 청년정책 방향 설정에서 청년 일자리 정책의 경우, 기존정책을 강화하되 기존 정책 중 보편성 있는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정책방향이라고 언급하였다. 그 이유는 현 경제상황하에서 일자리에 대한 불안이 가장 크고 기존 정책의 초점이 연령이 아닌 청년이행주기에 맞추어져 추진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보편성을 고려해서 강화해야할 세부 정책 분야로서는 기존의 고용환경개선정책과 취업비용지원 확대를 고려해 볼만하다고 판단된다. 우선, 고용환경개선 정책은 앞서 기존정책 현황에서도 소개한바 있지만 아르바이트생중심의 '청소년 근로조건강화', 취업준비생 대상의 'NCS 능력중심 채용 및 공공/민간 블라인드 채용', 그리고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근절 추진' 등을 포함하는 정책이다. 즉 청년들이 취업 시 사업장의 불합리한 근로조건으로 인한 횡포와 학벌 등에 의한 채용기회 박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장들에 대한 감독 감시를 강화해 주기 위한 정책들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고용환경개선정책의 경우, 청년들에게 취업과정과 직장에서의 동등한 보상 부여 등 청년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연계되기도 하고, 행정관련 제도 문제이기 때문에 <표 5-3>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기존 정책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또한 정책의 수혜자에 있어서도 청년이 아닌 기업이나 관계기관, 대학과도 관련성이 적으며, 정책 대상자중 1·3위인 취업준비생과 취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정책의 보편성 확대라는 측면에도 부합한다고 하겠다.

두 번째는 대학생 대상의 취업연계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취업연계 제도는 미취업 청년들을 구인기업과 연계해주는 일종의 취업지원서비스 제도로써 크게 청년들에게 진로 및 취업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

심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표 3-10>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정부는 군인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약 17개의 취업연계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쉬운 점은 청년이행주기별로 정책을 추진하여 예비 취업준비생인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대상의 취업연계서비스가 ‘대학 일자리 지원센터’외 부재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대학일자리센터 역시 ‘진로지도 및 취창업 서비스 제공’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기업과 직접 연계되는 서비스는 취약한 편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수도권보다는 기업이 적은 지방으로 갈수록 더욱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대학생 중심의 취업연계센터 확대 시, 고려해야 할 점 중의 하나는 정책예산의 확보인데, 이와 관련하여 일자리 지원정책 중 청년들이 정책 중요도가 낮다고 평가된 직업훈련지원 정책 중 해외기업 체험 지원정책과 직무교육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 하다고 판단된다.

<표 5-3> 청년 일자리지원 정책의 방향 설정

구분		주요 내용
청년기본법 내용분석	보편성 정도(수혜자)	- 낮음
	연령 조정시급 정도	- 높지만, 청년이행주기 별로 접근
수혜자 욕구: 정책중요도	정책 우선순위	1. 고용환경개선 2. 취업연계/취업비용 3. 직업훈련지원
	핵심관리과제	1. 고용환경개선 2. 취업연계 3. 취업비용
기존 정책 현황	적정 연령범위 과제/전체과제 수	- 10개/104개
	주요 대상순위	1. 취업준생(42개) 2. 창업희망자(23개) 3. 취업자(12개) 4. 대재(7개) 5. 군인(6개)

구분		주요 내용
	예산 비중/ 전체 정책 예산	- 23.4%/100% 1. 취업비용지원(14.6%) 2. 직업훈련지원(5.5%) 3. 창업환경조성(2.5%)
	정책 수혜자별 예산비중/전체 예산	1. 청년(10.8%) 2. 기업(6.8%) 3. 관계기관(4.8%) 4. 대학(0.9%)
종합적 정책방향	영역별 정책 방향	- 기존정책의 강화
	보편성 추진 정책 방향	- 고용환경개선 및 취업연계 제도 확대

3. 청년 주거지원 정책에 대한 정책방향 설정

전체 청년주거정책의 정책방향은 기존 현 정책을 유지하는 것으로 앞서 전체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욕구조사에서 파악되었다. 그러나 <표 4-14>와 청년이행주기별 중요도 Matrix 분석에서 미혼 직장인의 경우에는 주거 정책이 일자리 정책보다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강화정책으로의 검토 필요성이 있다. 주거정책이 청년 등 타 지원정책과 차별점 중의 하나는 정책의 보편성이 대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청년주거정책의 주요 대상은 청년이행주기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취업준비생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전체 13개 정책 중 9개이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2개 정도 존재한다. 그리고 이들을 대상으로 주택 마련 및 임대비 지원을 위한 전월세 지원마련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라는 2가지 정책적 수단을 이용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혼 직장인에 대한 주거 지원을 확대한다면 전·월세 지원 정책의 경우, 대출 금리를 1% 미만으로 낮춤으로써 정책 수요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 대출금리가 중소기업 청년의 경우 1.2%, 취업준비생의 경우, 1.5%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금리인하의 경우에는 수요자 확대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기숙사 공급 대상인 대학생들에게도 전·월세지원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여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대학생은 현재 정부가 기숙사 확충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국 대학 재학생을 약 200만 명으로 가정 시, 2025년까지 기숙사 약 1만호 건설은 정책 효과성이 낮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가구에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저소득 청년가구에 대학 재학생을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대출지원이 현금지원보다는 예산 건전성에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한편 공공임대주택 지원은 현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판단된다. 주거지원 정책 중 공공주택공급은 호당 소요되는 예산이 가장 클 뿐만 아니라 공급의 시급성에 있어서도 상당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책적 효과가 타 정책 대비 상대적으로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2020년 주거복지로드맵 2.0에서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공급계획을 기존 46만호에서 2025년까지 약 75만호로 약 30만호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상태이다.

(표 5-4) 청년 주거지원 정책의 방향 설정

구분		주요 내용
청년기본법 내용분석	보편성 정도(수혜자)	- 높음
	연령 조정시급 정도	- 청년이행주기 별 접근
수혜자 욕구: 정책중요도	정책 우선순위	1. 주택비용지원
		2. 공공/민간주택
	핵심관리과제	1. 주택비용지원
		2. 공공주택 공급 3. 민간주택 활용
기존 정책 현황	적정 연령범위 과제/전체과제 수	3개/13개
	주요 대상순위	1. 무주택 청년(9개) 2. 대학생(2개)

구분		주요 내용
	예산 비중/ 전체 정책 예산	- 58.5%/100%
		1. 주택비용지원(37.3%)
		2. 공공주택지원(19.1%)
	정책 수혜자별 예산비중/전체 예산	3. 민간주택 활용(2.1%)
		1. 청년(53.2%)
		2. 기업(2.5%)
종합적 정책방향	영역별 정책방향	- 기존정책 유지 ·미혼 직장인의 경우 강화정책 추진
	보편성 추진 정책 방향	- 급리 인하를 통한 전월세 지원 대상자 확대 및 전월세 지원 대상자에 대학생 포함 고려

〈표 5-5〉 주거복지로드 맵 2.0 중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정책 변화

기존 로드맵('18~'22)	2.0로드맵('18~'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주택 21만호('18~'22) · 일자리 연계 3만호 · 기숙사형 5천호 · 고시원 리모델링 5천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주택 35만호('18~'25) · 일자리 연계 6만호 · 기숙사형 1만호 · 고시원 리모델링 1만호 - 민간 공유주택 활성화 - 청년 주거비 별도지원(주거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혼부부 주택 25만호('18~'22) · 신혼희망타운 15만호 · 사업승인('18~'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혼부부 주택 40만호('18~'25) · 지원확대(만 6세 이하 자녀가구) 사업승인('18~'22) · 신혼희망타운 분양주택 10만호 입주자 모집완료 · 다자녀가구 3만호

자료: 정부24(2020). 주거복지로드맵 2.0으로 달라지는 점.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2121922>에서 2020. 11. 23 인출

4. 청년 생활지원 정책에 대한 정책방향 설정

기존 청년 생활지원 정책의 특징을 살펴보면 일자리 등 5대 대분류 정책 중에 보편성이 가장 낮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정책의 대상을 청년 이행주거나 연령대가 아닌 청년 가구의 소득별 접근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청년 생활지원정책 대상자를 살펴보면 저소득 계층 청년을 대상

으로 하는 정책이 총 16개 정책 중 6개(37.5%)를 차지하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정책들은 청년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금융환경지원에 관한 정책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청년 생활지원 정책 중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정책으로는 ‘20~30대 청년세대에 대한 국가건강검진 확대’ 지원 사업으로 ‘2년에 1회 일반검진 및 우울증 검사를 무료지원’하는 사업이 있다. 그러나 청년들의 욕구조사에 반영된 정책 중요도 차원에서는 현금지원 정책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이는 기존의 현금지원성 생활지원정책의 대상을 일부 저소득 계층에서 일반 대학생 등 청년으로 확장해 달라는 요구로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생활비 대출로 인한 청년들의 고통을 경감해 주기 위해선 생활비를 지원하는 현금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판단된다. 실례로 2018년 7월 기준으로 학자금 목적 이외에 은행권의 대학생 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대출 잔액이 약 1조 1,004억 원에 달하고 연체건수도 2,136건에 달한다.

[그림 5-2] 청년들의 생활비 대출 현황(2018년 7월 기준)

구분	2014년 말	2015년 말	2016년 말	2017년 말	2018년 말
대출 잔액	6,193 억원	7,520 억원	8,796 억원	10,019 억원	11,004 억원
연체액	21 억원	21 억원	28 억원	37 억원	55 억원
연체율	0.3%	0.3%	0.3%	0.4%	0.5%
연체건수	486건	682건	1,048건	1,605건	2,136건

자료: 권해영(2019.1.16.). [청년리포트] 빛 없인 시작조차 할 수 없다. 아시아경제.
<https://www.asiae.co.kr/article/2019011610204544070>에서 인출.

이와 같은 결과는 정부가 ‘청년 신용회복지원’과 같은 금융환경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반청년들이 생활비 대출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정책은 부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는 청년들의 생활지원을 위한 현금지원으로 독일의 바피크(BaFöG)와 같은 생활비 지원정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바피크는 부모의 경제력에

다른 우수한 학생들의 학업중단과 청소년의 교육기회 균등을 목표로 1969년 도입한 독일의 학자금 지원정책을 말한다. 지원대상은 30세 일반학교 학생과 마이스터 제도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생활비와 학습교재비를 지원하는데 대학생의 경우, 지원금의 절반은 무상으로 나머지 절반은 무이자 국가학자금 대출의 형태로 지원된다. 또한 대출의 경우 상환액이 1만유로가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액에 대해서는 상환 의무면제가 시행되고 있다(이철선 외, 2016).

〈표 5-6〉 청년 생활지원 정책의 방향 설정

구분		주요 내용
청년기본법 내용분석	보편성 정도(수혜자)	- 중간
	연령 조정시급 정도	- 소득별 접근 방법으로 저소득 계층에 초점
수혜자 욕구: 정책중요도	정책 우선순위	1. 현금지원 2. 건강검진 3. 금융환경 지원
	핵심관리과제	1. 현금지원 2. 건강검진지원
기존 정책 현황	적정 연령범위 과제/전체과제 수	- 6개/16개
	주요 대상순위	1. 저소득계층(6개)
		2. 대학생(4개)
		3. 군인(3개)
		4. 일반국민(2개)
	예산 비중/ 전체 정책 예산	- 0.4%/100%
1. 건강검진(0.2%)		
2. 현금지원(0.2%) 3. 금융환경지원(0.1%)		
정책 수혜자별 예산비중/전체 예산	1. 청년(0.4%) 2. 관계기관(0.0%)	
종합적 정책방향	영역별 정책방향	- 기존 정책 유지
	보편성 추진 정책 방향	- 대학생 현금성 생활비 지원제도 검토

5. 청년 교육지원 정책에 대한 정책방향 설정

청년 교육지원 정책은 청년 대상 정책 중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받는 영역이다. 우리나라 청년들의 대부분이 사회진출을 위한 대학에 재학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년정책에 대한 요구조사 결과 우리나라 청년들은 교육지원 정책에 대한 중요도가 5대 대분류 정책 중 4위에 그쳤으며, 11개 중분류 정책에 대한 중요도의 절대치로 도출한 핵심관리 과제에서도 교육지원정책의 경우, 교육비 지원, 인건비 지원, 진로탐색지원, 연구비 지원 정책 모두가 탈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교육지원정책 전반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실효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기존 교육지원 정책의 개선 방향을 청년기본법 제정의미인 보편적 정책측면과 연결하여 살펴보면 특정 집단 중심의 인건비 지원 방식인 연구비 지원 정책은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연구비 지원정책의 분야가 정보통신 등 일부 학과에 집중되어 있고 대상자 역시 석박사 대학원생과 연구교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청년정책의 주 수혜대상인 일반 청년들의 관점에서는 자신들과 거리감이 존재하는 정책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연구비 지원 정책은 정보통신분야 등 신 성장 산업의 일안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둘째로 교육지원 정책 중 청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육비 지원 정책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볼만 하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정책의 이름으로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학생가구주의 소득을 10분위로 분류 한 후, 8분위 이하의 학생들에게 차등적으로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표 5-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체 국가장학금 신청대상자 대비 수혜자 비

율을 살펴보면 2017년 1학기 기준 42.8%에 지나지 않고, 신청자 중 수혜자 비율은 66.8% 정도에 불과하다.

세 번째는 진로탐색지원정책의 확대이다. 진로탐색지원제도는 대학생이나 19~24세의 후기 청소년들에게 해외연수기회 제공,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인생설계 또는 진로탐색 학점제와 같이 청년들의 진로를 설계·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2020년 예산규모는 연구비 지원 정책 예산 3,661억 원의 약 7.5%에 불과한 276억 원으로 파악된다. 즉 청년대상자 중 수혜자가 적다는 의미이다.

〈표 5-7〉 2012~2017년 국가장학금 신청자 및 수혜자 현황

(단위: 천명,%)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신청대상자(A)	2,340		2,340		2,337		2,303		2,247		2,195	
신청자	인원(B)	1,532	1,392	1,529	1,373	1,450	1,402	1,440	1,334	1,470	1,335	1,409
	비율(B/A)	65.5	59.5	65.3	58.7	62.0	60.0	62.5	57.9	65.5	59.4	64.2
선발 결과	I유형	540	540	976	884	961	938	867	844	872	857	867
	다자녀					25	20	38	30	47	40	54
	II유형	742	692	632	589	590	553	475	584	454	515	462
	합계(C)	835	785	977	888	992	971	924	950	945	944	941
수혜자 비율	비율(C/B)	54.5	56.4	63.9	64.6	68.4	69.2	64.2	71.2	64.3	70.7	66.8
	비율(C/A)	35.7	33.6	41.8	37.9	42.4	41.5	40.1	41.3	42.1	42.0	42.8

자료: 대학교육연구소(2018). 한국장학재단. 2012~2017년 국가장학금 신청자 및 수혜자 현황.

<http://khei.re.kr/post/1846>에서 2020. 11. 23 인출.

주1: 신청대상자 : 한국교육개발원, 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기준

주2: 선발결과 합계 : 유형별 중복인원 제거

〈표 5-8〉 청년 교육지원 정책의 방향 설정

구분		주요 내용
청년기본법 내용분석	보편성 정도(수혜자)	- 중간
	연령 조정 시급 정도	- 청년이행주기별로 접근
수혜자 욕구: 정책중요도	정책 우선순위	1. 교육비지원 2. 인건비/진로탐색 3. 연구비 지원
	핵심관리과제	
기존 정책 현황	적정 연령범위 과제/전체과제 수	- 4개/37개
	주요 대상순위	1. 대재(24) 2. 취준생(5) 3. 창업희망자(2)
	예산 비중/ 전체 정책 예산	- 17.7%/100% 1. 교육비 지원(15.7%) 2. 연구비지원(1.4%) 3. 인건비지원(0.5%)
	정책 수혜자별 예산비중/전체 예산	청년(16.3%) 대학(1.3%)
종합적 정책방향	영역별 정책방향	- 기존 정책 개선 후 유지
	보편성 추진 정책 방향	- 국가장학금 대상자 확대 - 연구비 지원 정책 제외 진로탐색지원제도 확대

6. 청년 참여지원 정책에 대한 정책방향 설정

청년 참여지원제도는 기존 청년정책 중 청년기본법 제정과 관련하여 가장 보편성을 추진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기존 청년참여 지원정책이 민원 및 고충 수렴, 청년 참여 플랫폼 조성, 청년 공동체 활성화, 소비자 보호의 구체화 등 청년정책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청년기본법 제정으로 인한 참여정책은 어느 정도의 의사결정권을 행사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즉 청년기본법령과 시행령에서

는 청년정책의 심의 조정기구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일정 비율 청년 대표를 포함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 청년 참여 지원 정책에 대한 일반 청년들의 정책 중요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청년들의 정책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의견 수렴장 지원정책 대비 국토순례를 통한 애국심 고취지원정책의 경우,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이는 청년의 정책 참여를 위한 의견 청취보다는 정부가 추구하는 정치적 이슈나 국가에 대한 가치관을 청년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하여 국내의 경우 국토순례, 해외의 경우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즉 그 수혜자나 정책 참여라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반면에 의견 수렴장 지원정책은 청년의 삶의 질 개선과 관련된 청년정책들에 대하여 정책 담당자가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하는 민주주의 형식의 정책참여 지원정책은 ‘청년 참여 플랫폼 운영 사업’ 과 ‘국민생각함 청년 참여 프로그램’, 2가지이다. 즉 청년이 직접 참여하여 토론하는 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를 반영하듯 2020년 기준, 정부의 의견수렴장 지원정책의 예산 규모는 약 18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하여 검토해 볼만한 정책으로는 청년이 직접 정당이나 의회에 직접 참여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유럽의 민주주의 육성제도이다. 대표적으로 독일과 핀란드의 경우, 각 정당별로 15세부터 35세 까지 참여할 수 있는 청년조직을 각각의 정당에서 운영하면서, 청년정책 등에 관한 토론 결과를 모 정당에 개진하고, 향후 연방의회에 진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연방정부의 예산으로 연방정치교육원을 각 지역에 설치해 세미나 지원과 토론장 제공 등을 통해 시민들의 민주주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이 2가지 정책 중 장기적으로는 정당의 청년조직

을 육성시켜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단기적으로는 일부 지자체에서 계획 중인 지역별 청년센터가 독일의 연방정치교육원과 같은 역할을 담당케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표 5-9〉 유럽의 청년 민주주의 육성 제도

구분	주요 내용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별 청년 양성 시스템 구축 · 각 정당별 청년조직 가입 연령은 만 14세부터 가입 · 기민당(영유니온), 사민당(유소스), 자민당(젊은 자유주의자) 등 정당별로 운영 · 교육과 토론이 중심인 청년조직을 통해 정당의 이념과 민주주의 등을 학습 · 각 지역별 청년조직에 연방의회 의원 좌석 1개씩 할당 - 정부는 국비지원으로 연방정치교육원 설립과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민주주의 교육을 지원 · 온라인, 오프라인 자료 제공, 세미나 등 토론 토론장 제공, 기타 기관지원
핀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년 대 초부터 지방지자체가 청소년 의회 제도를 의무화 · 각 학교별 대표를 선발해 운영 후 청소년 의회제도 멤버로 영입 · 독일과 같이 정당별 청년조직(15~30세 가입 가능)을 운영 · 각 정당 이사회에 좌석을 확보하여 모 정당 내 독립단체로써 운영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9). 세계 민주주의를 만나다. 영상프로그램을 재정리.

〈표 5-10〉 청년 참여지원 정책의 방향 설정

구분	주요 내용	
청년기본법 내용분석	보편성 정도(수혜자)	- 높음
	연령 조정 시급 정도	연령보다는 청년이행주기별 접근
수혜자 욕구: 정책중요도	정책 우선순위	1. 의견수렴장 마련 2. 애국심 고취
	핵심관리과제	1. 의견수렴장 마련
기존 정책 현황	적정 연령범위 과제/전체과제 수	- 2개/12개
	주요 대상순위	1. 대학생(5)
		1. 일반 학생(5)
	예산 비중/ 전체 정책 예산	- 0.0%/100%
		1. 의견수렴장 마련(0.0%) 2. 애국심 고취(0.0%)
정책 수혜자별 예산비중/전체 예산	청년(100.0%)	

구분		주요 내용
종합적 정책방향	영역별 정책방향	- 기존 정책 개선
	보편성 추진 정책 방향	- 애국심 고취 정책은 청년정책에서 제외 고려 의견 수렴장 지원 정책으로 지역별 청년센터 활용을 고려

제3절 청년정책의 평가관리 체계 개선

1. 전체 평가관리 체계 방향 설정

본고의 주요 연구 내용 중에서 셋째는 청년정책의 전체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세부 정책을 도입한다면 지속적으로 어떻게 관리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이다. 즉, 청년정책 기본계획 상에 적절한 평가체계와 성과 지표, 그리고 목표치 설정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 할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이다. 이 중 첫째 세부 문제인 평가체계 설정 방향과 관련해서 본고는 수혜자인 청년육구와 정부의 세부 청년 사업과제에 대한 달성도를 반영한 ‘청년정책지수’를 제안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첫째는 향후 구축될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범부처가 추진해온 기존 정책과제들이 연속적으로 실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청년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될 청년정책 사업들 간의 연계성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청년기본법 상의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5년 주기마다 새롭게 구축되기 때문에 그 목표와 세부 청년정책 사업이 교체되더라도 청년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관리 부처 입장에서 각 연도마다 청년정책에 대한 성과관리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표 5-11〉 청년정책 지수 (가안)

차원	중분류	과제명		중요도	평가(달성도)	
청년정책지수(5대 차원중요도*차원달성도의 합, 100점 만점)						
일 자 리	차원 중요도			33.37	80.0	
	1. 직업훈련	요인(중분류) 중요도			5.00	85.0
		직무교육	개별유형(세분류) 중요도		5.00	100.0
			개별 과제	사업(세세분류) 중요도	1.00	80.0
				청년취업 아카데미		
	
.		
교육	차원 중요도			36.80	83.0	
주거	차원 중요도			10.92	85.0	
참여	차원 중요도			0.47	80.0	
생활	차원 중요도			18.43	90.0	

청년정책지수는 우선 청년정책 분야를 차원과 요인, 세부유형, 정책 사업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수준에 걸쳐 중요도와 달성도를 정량조사 방법으로 측정하게 된다. 청년정책지수의 수준은 차원과 요인, 세부유형, 정책과제 4가지로 분류되며, 이중 차원은 청년정책의 5대 대분류 정책을 의미하며, 요인은 5대 대분류 정책 중 일자리 등 특정 영역의 정책을 의미한다. 그리고 세부유형은 요인을 구성하는 지원정책의 유형을 의미하며, 정책 사업은 실제로 정부 부처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책 사업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4가지 수준별로 중요도를 산정하게 되는데 차원과 요인, 세부유형은 청년대상의 실태조사를 통해 구하고, 정책 사업은 각 차원의 예산규모를 100% 산정한 후, 개별과제의 예산비중으로 적용한다. 한편 달성도는 정부가 선정한 성과지표를 통해 당년도 목표치를 달성하거나 초과하면 100%로 가정하여 측정하게 된다.

〈표 5-12〉 청년정책 지수의 구성요인과 내용

구성요인	개념 및 산정
청년정책지수	- 차원(대분류 정책) 중요도에 차원 달성도를 곱해 산출된 점수들의 합 - 청년정책지수는 100점 만점으로 변환해 산정
차원 중요도	- 기본계획상에 포함된 일자리, 교육, 주거, 생활, 참여 등 정책 분야를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5가지 차원으로 구성 - 5대 정책의 수혜자인 청년들이 요구하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중요도로 적용 - 5대 차원 중요도의 합은 100%로 가정
요인 중요도	- 일자리 분야 에 속한 직업훈련지원, 취업비용지원 등 중분류 과제 명에 대한 중요도 - 예) 일자리분야의 중요도가 30%로 측정된다면 직업훈련지원(5%), 취업비용지원(10%), 취업연계지원(10%), 고용환경개선(15%)로 구성
세부유형 중요도	- 일자리 분야 중 직업훈련지원을 세부유형으로 구분한 항목에 대한 중요도 - 예) 일자리분야의 직업훈련지원의 중요도가 5%로 측정된다면 이를 구성하는 세부유형 중요도는 직무교육지원(1%), 국내기업 체험형(2%), 해외기업 체험형(0.5%), 자격증 취득지원형(1.5%)로 구성
정책사업 중요도	- 청년정책 기본계획 상에 포함된 각 부처의 개별과제들에 대한 중요도 - 각 요인에 포함된 개별과제들의 예산 합 대비 개별과제들의 예산액 비율을 구해 산정
정책사업 달성도	- 개별 정책과제의 성과지표로 측정 후 목표치와 비교한 달성도를 절대 점수로 환산 - 예) 100% 또는 초과 달성 시 100점, 100% 미만은 달성도를 점수화 (달성도 80% → 80점)
세부유형 달성도	- 정책사업 달성도에 정책과제 중요도를 곱한 점수들의 합
요인 달성도	- 세부유형 달성도에 세부유형 중요도를 곱한 점수들의 합
차원 달성도	- 요인 달성도에 요인 중요도를 곱한 점수들의 합

2. 평가지표의 개선 방향

본고에서는 〈표 3-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 범부처 청년정책 182개 중 약 20개의 과제에서 성과지표가 부재하다는 점과 〈표 3-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과관리에 부적합한 지표인 만족도(19개)와 수행건수(27개) 그리고 예산액(7개)과 같은 53개의 지표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수행건수에서는 법령 마련 등 1회성 지표를 재출한 경우가 28개 중 6개였으며, 나머지는 교육 횟수와 같이 지속적인 경우였다.

이외에도 참여인원 수나 증감률 등에서도 각각 부적절한 지표가 약 3개 발견되었다. 이들 지표가 청년정책 평가 지수를 측정하는데 있어 부적합 이유는 앞서 3장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수행건수는 5년간 추진되는 기본계획상에서 단발성으로 끝날 경우, 정책의 지속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만족도는 감정을 포함하여 수혜자가 해당 정책에 대해 느끼는 총체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측정상황에 따른 감정에 따라 그 결과치가 변동되기 쉬우며, 매년 목표치 설정도 어렵다. 그리고 예산액은 국회와 예산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협의 상황에 따라 예산액이 계획과 상관없이 변동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총 182개 중 성과지표가 부재한 20개와 부적절한 평가지표 35개를 포함해 총 55개의 성과지표를 대상으로 새롭게 지표를 개발하였다.

〈표 5-13〉 기존 범부처 성과지표 검토 결과 및 변경 사항

분류	성과지표 유형	과제 수	주요 내용
전체 과제		182	
성과지표 유지		127	기존 지표 및 산정방식 유지
성과지표 신설		20	- 기존 성과지표 없음 → 사업 내용과 부가지표를 고려해 신설
성과지표 변경	소계	35	- 지표 변경
	만족도	19	- 목표관리의 어려움으로 변경
	예산액	7	- 국회 등 협의 시 가변성이 높아 변경
	수행여부/건수	6	- 연속적 평가를 위해 1회성 성과지표는 제외
	참여인원 수	1	- 실질적인 정책효과 측정을 위해 취업자 수 등으로 변경
	증감률	1	- 인지도는 가변성이 높아 참여자수로 변경
	기타	1	- 수요 인원 전체는 성과지표 보다는 목표치에 가까워 변경

수정이 필요한 총 55개 과제 중 일자리 관련 과제는 28개였으며, 다음으로 교육정책이 15개, 생활정책이 7개, 주거정책이 4개, 그리고 참여정

책이 1개로 파악되었다. 이중 일자리 관련 정책사업의 성과지표는 개인의 경우 취업자 양성이라는 취지에서 취업자나 수혜자 수를 중심으로 지표를 구성하였으며, 기업의 경우에는 참여기업 수나 창업률을 중심으로 지표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도 상당부분 관련 산업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많았기 때문에 취업자 수나 교육관련 참여자 수를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구성하였다. 이외에 주거정책과 생활 지원정책의 경우에는 정책사업의 연도별 수혜자 수로 성과지표를 변경하거나 신설하였다.

〈표 5-14〉 기존 범부처 청년정책 중 부적절한 성과지표의 신설 및 변경

분류	과제 번호	과제명	기존성과지표	신설/변경	신설/변경지표
일 자 리	78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강화		신설	관련 노동쟁의 해결 수
	83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신설	강소기업 연간 선정 수
	141	청년채용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 지원		신설	참여기업 수
	70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일자리 지원	만족도	변경	신규 석·박사 지원 수
	85	중소기업탐방	만족도	변경	참여자 수
	99	국민취업지원제도	수행여부/건수	변경	2차년 도 이후 참여율
	102	청년여성 내일역량 개발 지원	만족도	변경	세일여성센터 인턴 연계 실적
	121	해외건설 청년 일자리창출	참여인원 수	변경	취업자 수
	126	해운항만 물류전문인력 양성 산학연계	만족도	변경	취업자 수
	175	사회복무요원 사회진출 지원	수요인원(기타)	변경	참여인원 수
	3	대학창업펀드 조성	만족도	변경	창업률
	51	청년 콘텐츠기업 투자 펀드		신설	취업자 수
	137	청년창업기업 세금 면제		신설	세금면제 액
	139	청년창업펀드 추가조성		신설	조성 액으로 인한 창업률
	145	대규모 창업혁신공간 조성	수행여부/건수	변경	창업률
	146	유망청년창업기업 보증 제공	예산액	변경	보증건수

142 청년정책 영역별 기초방향 수립연구

분류	과제 번호	과제명	기존성과지표	신설/변경	신설/변경지표	
	147	신규 사업자 카드 우대 수수료 적용	예산액	변경	참여기업 수	
	148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을 통한 청년창업	예산액	변경	데모데이지원 스타트업 수	
	1	고용증대세제		신설	참여기업 수, 취업자 수	
	2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신설	소득세 감면액	
	46	공공 빅데이터 청년 인턴십 사업	수행여부/건수	변경	취업자 수	
	50	예비 예술인 첫 공연 지원		신설	수혜자 수	
	52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신설	취업자 수	
	101	사회적 경제분야 청년 여성일자리 창출		신설	취업자 수	
	149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수행여부/건수	변경	취업자 수	
	150	은행권 일자리펀드 운용 지원	예산액	변경	취업자 수	
	88	청년고용지원		신설	관련 콘텐츠 개발 수/보급수	
	142	좋은 일자리 중소기업 플랫폼	만족도	변경	취업자 수	
	주거	153	청년 전·월세지원프로그램	예산액	변경	수혜자 수
		109	대학생 기숙사 확충		신설	수혜자 수
181		사회주택도입 신진예술가주거공간마련	수행여부/건수	변경	수혜자 수	
123		역세권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신설	수혜자 수	
교육	10	대학생 대상 해외연수 기회 확대	만족도	변경	참여자 수	
	22	ICT 석박사 인재의 글로벌 연구역량강화	만족도	변경	특허건수/취업자 수	
	27	SW중심대학	만족도	변경	참여학생 수	
	32	융합보안 핵심인재양성	만족도	변경	관련업종 취업자 수	
	34	인공지능 핵심 고급인재 양성	만족도	변경	관련업종 취업자 수	
	64	청년귀농 장기교육	만족도	변경	관련업종 취업자 수	
	65	산업전문인력 역량 강화사업		신설	관련산업 매출 석박사 수	
	77	물 산업 프로젝트 매니저 양성사업	만족도	변경	취업자 수	
	93	일반고 특화과정		신설	참여자 수	
	6	국가장학금 확대	예산액	변경	수혜자 비율	
	9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	만족도	변경	취업률	

분류	과제 번호	과제명	기존성과지표	신설/변경	신설/변경지표
	55	농업분야 취창업 연계 장학금	만족도	변경	취업자 수
	8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	만족도	변경	연간 사고절감 수
	12	고교취업연계장려금	만족도	변경	취업자 수
	13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학생 지원	만족도	변경	참여인원 수
생활	80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설	참여자 수
	156	사회초년생의 신용평가 불이익 완화		변경	제도개선건수
	158	청년·대학생금융지원	예산액	변경	수혜자 수
	159	청년·대학생 햇살론 재출시		신설	수혜자 수
	43	군인연금 미 수혜 전역자 고용 보험 가입		신설	수혜자 수
	69	산업단지 중소기업 재직 청년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교통비 지원	만족도	변경	수혜자 수
	75	빈곤 청년에 대한 근로인센티브 확대		신설	수혜자 수
참여	127	대한민국 해양영토 대장정	증감률	변경	연도별 참여자 수

3. 목표치 설정 방향

본고에서는 앞서 <표 3-25>를 통해 총 182개 중 158개 과제의 성과지표 목표설정근거를 확인한 바 있다. 3년 평균 실적치를 목표설정 근거로 확인된 경우는 89개로 전체의 56.3%였으며, 그 다음으로 자료 수집을 통한 목표치 설정이 24개(15.2%), 전년대비 상향조정이 19개(12.0%)의 순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과제 상위계획반영이 16개(10.1%), 신규사업 7개(4.4%)의 순이었다. 이와 같은 목표 설정근거는 전체 청년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보다는 기존의 각 부처가 추진해온 관례에 의존한 성향이 높고, 또한 예산 등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전체 청년정책에 대한 총괄부서가 부재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제정된 청년기본법에서는 전체 청년정책에 대한 심의·조정권을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구성원들 역시 중앙정부의 행정부서장으로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전체 청년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별 정책추진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전체 청년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별 목표치 설정에 관련되는 변수로는 어떤 변수를 고려할 수 있을까? 우선, 본고에서 추정한 5대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른 정책방향을 고려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청년기본법의 수혜 대상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정책에 대한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책 수준별 중요도 Matrix을 활용해 각 수준별 정책추진방향을 <표 4-13>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중요도 Matrix을 반영해 도출된 정책 추진방향은 목표치 설정에 반영되어 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 배정의 우선순위에도 동일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 정책적 목표 달성이 가능해 진다. 둘째는 청년정책 사업이 소속부처 상위정책의 하부사업으로 구성되고, 예산 등 계획이 미리 결정된 경우이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주거정책 중 공공주택공급 정책의 경우에는 현행 유지 부문으로 선정되었지만, 2020년 초 국토해양부는 주거로드맵 2.0을 통해 '22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청년주택 공급량을 약 2배가량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상위 정책계획의 하위 정책 사업으로 청년 공공임대 정책의 규모가 타 부처 등과 협의하여 결정된 만큼 목표치 설정에 있어서도 이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세 번째는 담당부서와의 목표치 설정 논의이다. 특히 본고에서는 제5장 제2절 청년정책의 영역별 정책방향 설정에서 청년기본법 제정으로 인해 기존 정책 중 보편성 확대가 가능한 정책들, 예를 들면 교육지원 정책의 경우, 국가장학금 확대 정책들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정책들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정책 확대 시, 수혜자 규모와 필요한 예산 등을 확보해야 가능한 문제이므로 사업 담당부서와 논의가 당연히 필요하다. 또한

교육정책 중 연구비 지원정책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청년과는 연관성이 낮은 정보통신 분야 등의 석박사 대학원생과 연구교수 등이 수혜자로 되어 있는 만큼 보편성이 낮아 본고에서는 산업인력 육성 정책으로 분류하여 청년정책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역시 지속적으로 청년정책에 포함할 것인지? 포함한다면 타 청년 정책 대비 예산이나 수혜자 규모를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담당 부처와 논의할 필요가 있다.

〈표 5-15〉 청년정책의 목표치 설정 방향

구분		5대 대분류 정책	목표치 설정 방향	
강화 정책		일자리		
공격적 강화		- 고용환경개선	- 전년도 성과 대비 10% 상향	
점진적 강화		- 취업연계지원, 취업비용지원	- 전년도 성과 대비 5% 상향	
수정 후 강화		- 직업훈련지원	- 전년도 성과 대비 3% 상향	
보편성 확대 정책		- 대학생 취업연계 제도	- 별도 도입	
유 지 정 책	1 순 위	대분류 정책	주거	
		확대 유지	- 주택비용 지원	- 전년도 성과 대비 3% 상향
		현행 유지	- 공공주택지원, 민간주택활용	- 상기 계획 목표 적용
		일부 유지		
		보편성 확대 정책	- 대학생 전월세 프로그램 지원	- 별도 도입
	2 순 위	대분류 정책	생활	
		확대 유지	- 현금지원	- 전년도 성과 대비 3% 상향
		현행 유지	- 건강검진지원	- 3개년 평균 사업 실적
		일부 유지	- 금융환경지원	- 담당부서와 목표치 설정 논의
		보편성 확대 정책	- 청년기본소득형 생활비 지원	- 별도 도입
	3 순 위	대분류 정책	교육	
		확대 유지	- 교육비 지원	- 전년도 성과 대비 3% 상향
		현행 유지	- 인건비 지원, 진로탐색지원	- 3개년 평균 사업 실적
		일부 유지	- 연구비 지원	- 전년도 성과 대비 3% 상향 담 당부서와 목표치 설정 논의
		보편성 확대 정책	- 국가장학금 확대	- 별도 도입
개선 정책		정책참여		

구분	5대 대분류 정책	목표치 설정 방향
전면 개선	- 애국심 고취지원	- 전년도 성과 대비 10% 하향
일부 개선	- 정책의견 수렴장 지원	- 전년도 성과 대비 5% 하향 담 당부서와 목표치 설정 논의
보편성 확대 정책	- 지역청년센터 확대	- 별도 도입

따라서 본고에서는 5대 영역별 정책방향에 따른 목표치 설정 수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강화정책 분야는 수혜자 및 예산 배정 규모 등을 강화하되 정책별 수준에 따라 전년도 성과 대비 목표치를 3~10%까지 차등화 하여 정책 추진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유지정책 분야의 목표치는 평균 3개년 사업 성과치를 설정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정책 중요도가 평균 중요도 대비 높은 정책들의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3% 정도 목표치를 설정하여 강화정책으로서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개선정책 분야는 사실 상 정책의 실효성 측면에서 낮은 정책들로 전년도 대비 5~10% 정도 목표치를 낮추되 담당부서와의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유지 및 개선 정책 중 청년기본법의 취지를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정책들, 예를 들면, 전월세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자로서 대학생 포함, 국가장학금 대상자 확대, 현금지원성 청년 생활비 지원, 청년 민주주의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원 도입 등과 같은 경우, 담당 사업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별도의 목표치 설정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기본법 제정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인 보편성 확대를 위해 고려한 정책들은 새로 도입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타 정책들의 목표치 설정 방법인 전년도 성과치 대비 상향/유지/하향의 방법보다는 일단 도입 후, 1년 성과 치를 살펴본 후 다음 년도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6장

향후 과제와 연구의 한계점

제1절 연구의 시사점

제2절 연구의 한계점

제 6 장 향후 과제와 연구의 한계점

제1절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2020년 청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향후 수립되어야 할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영역별 정책 수립방향과 평가관리에 기여하고자 시도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정된 청년기본법의 내용분석과 기존 범부처 청년정책의 현황에 대한 내용 및 정량분석, 그리고 청년정책의 수혜자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정책 욕구에 관한 인터넷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런 다음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청년정책의 총괄분서인 국무조정실이 일자리, 주거, 생활, 교육, 참여 등 전체 5대 청년정책 추진 상의 우선순위와 각각의 영역별 청년정책 추진 시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세부과제들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평가관리 상에 필요한 평가체계 구축방향과 성과지표의 보완, 그리고 목표치 설정 방향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기본법 제정은 선택적 복지 정책으로 추진되어온 기존 범부처의 청년정책 방향을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전체 청년정책의 조정·심의권을 부여하는 당위성을 제공함으로써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고 판단된다. 청년기본법에 대한 내용분석 결과, ‘청년이 인간으로써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청년기본법 제2조)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할 경우에는 ‘청년 개개인의 자질향상과 능동적 삶의 구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의 참여, 교육·고용·직업훈련 등에서의 청년의 평등한 기회제공과 사회적·경제적 환경마련'을 고려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청년기본법 제 13조에서는 중앙부처 장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여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심의·조정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둘째, 기존 범 부처에서 추진되어온 182개 청년정책관련 사업들에 대한 현황 및 관리사항을 파악하여 향후 청년정책 수립 및 관리 계획에 관한 기본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국무조정실로부터 기존 182개 청년정책관련 사업의 정책분야, 대상, 예산, 성과지표, 산출산식, 목표치 등이 포함된 정책카드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분석한 결과, 기존 청년정책들은 연령보다는 대학 및 대학원 재학-취업준비생-미혼직장인 등 청년이행 주기별로 정책이 구성되어 있었으며, 예산배정에 있어서도 수혜자가 많은 일자리보다는 주거정책이, 그리고 일자리에서도 취업준비생보다는 취업한 중소기업 직장인에게 예산이 많이 배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기본정책에 대한 성과지표와 목표치 설정 현황에 관한 분석에서도 부적절한 지표설정과 정책 우선순위보다는 관례적으로 추진되어온 목표치 산정 방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보편적인 청년보다는 특정 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져 정책이 추진됨으로써 청년정책에 대한 일반 청년들의 체감도가 감소되는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셋째, 대학 및 대학원생, 졸업 후 취업준비생, 결혼을 앞둔 직장인 등 600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기존 청년정책에 대한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청년정책 기본계획에서 정부가 추진해야할 정책간의 우선순위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그동안 182개에 달하는 많은 정책들이 다년간 시도되었지만 청년들의 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 이유는 청년정책의 수혜자인 청년들의 규모를 고려하여 그들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문

제해결 정책보다 특정시기에 이슈화 되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보완하여 결국, 특징 없는 백화점씩 구색 맞춤의 정책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조사결과에서도 청년들은 일자리 지원정책 중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취업비용지원정책 등보다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방지와 같이 예산이 가장 적은 고용환경개선정책의 중요도가 높았다. 또한 일자리 지원정책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예산도 2020년 기준 약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직업훈련지원정책(2020년 기준)의 경우에는 중요도가 가장 낮았는데 그 이유는 연간 약 8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직무훈련에 대한 중요도가 국내기업체험이나 자격증 취득지원사업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존 청년정책에 대한 특성분석과 청년들의 청년정책 욕구조사, 그리고 전문가 간담회 결과를 기반으로 청년정책 중 어떤 정책에 가장 주력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정책은 현재 상황을 유지하고, 어떤 정책은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책방향 기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6-1〉 청년정책의 영역별 기초방향과 분석 근거

구분	일자리	주거	생활	교육	참여	분석근거	
정책 방향	우선순위	강화정책	유지정책	유지정책	유지정책	개선정책	- 기존 정책 특성분석 - 수요조사 후 중요도 분석
	1차 주력 분야	고용환경 개선	주택비용 지원	현금지원	교육비 지원	정책의견수렴	
	2차 주력 분야	취업연계 지원 취업비용 지원	공공주택 지원 민간주택 활용	건강검진 지원	진로탐색 지원 인건비 지원	-	
	검토분야	직업훈련지원		금융환경지원	연구비 지원	애국심 고취	
보편성 확대 고려 정책	대학생 취업 연계 제도	대학생 전일제 프로그램 지원	청년기본소득형 생활비 지원	국가장학금 확대	지역청년센터 확대	- 기본법 내용 분석 - 전문가 간담회	
평가체계	- 중요도 대비 정책 실효성에 기반한 청년정책지수 구축 정책우선순위에 따른 목표치 설정 및 평가지표 수정					- 기존 정책 특성분석 - 수요조사 후 중요도 분석	

넷째, 본고에서는 향후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후 정책에 대한 관리방안으로서 평가체계를 지수화 하는 방안과 그에 부합하는 성과지표의 개발 및 목표치 설정 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기존에 추진되어온 청년정책들이 182개에 달하고 이들 정책이 청년정책기본계획 구축에 기반이 되는 만큼 정책의 연속성과 전체 청년정책 사업들의 관리를 위해서는 ‘고용률’ 또는 ‘취업률’과 같은 대표지표 보다는 각 사업별 정책추진 강도를 의미하는 중요도와 평가지표를 기반으로 목표달성도를 연계하는 지수형태의 평가체계가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족도 등 현재 성과지표로 사용되고 있으나, 청년정책지수에 부합하지 않는 55개의 과제에 대하여 새로운 평가지표를 제시하였고, 또한 평가지표의 목표치 설정에서도 앞서 제시되었던 5대 대분류 및 11대 중분류 청년정책의 정책 추진방향에 맞추어 각 수준별 목표치 수준을 설정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기존 정부의 정책개발 및 추진, 그리고 관리 측면에서 정책 전문가와 공무원 중심의 접근보다는 정책의 수혜자인 청년들의 정책 욕구에 기반해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제2절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는 앞서 언급했던 4가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연구진행 상에 있어서 3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기존 청년정책의 현황을 분석하는데 있어 국무조정실로부터 2020년 5월 기준의 범부처 청년정책 182개에 관한 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에서는 보고서 작성 시점인 2020년 9월 현재기준으로 청년정책의 범위를 약 179개로 조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분석된 청년정책들에 대한 현황분석 결과와 국무조정실의 현황분석 결과 간에는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기존 청년정책들의 범위가 총괄부처의 부처로 인해 관련사업 부처들의 임의적 판단 하에 설정되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그 범위가 조정되었기 때문이다. 관련사업 부처들에 따라 청년정책의 수혜자는 청년이 아닌 전달체계 상의 타 관련기관 등이 될 수도 있고, 예산규모 역시 산출하는 기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일례로 현재 공공임대 주택의 예산에는 건설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청년들이 민간주택 임대 시 소요되는 비용에는 임대비 외에 건설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둘째는 정책범위에 있어서 청년기본법 제4장에서 제시한 청년문화활동지원 정책과 청년국제협력지원 정책, 2가지 분야에서 향후 정책적 방향과 목표치 설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청년문화활동지원과 청년국제협력지원 정책의 경우, 기존 범부처 청년정책이 일자리, 주거, 생활, 교육, 참여 등 5대 대분류 정책에 맞추어져 진행되어 실제 추진된 정책과제가 부재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 연구의 접근 방식이 청년정책의 수혜자인 청년들이 판단하는 정책의 중요도를 조사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조사대상인 청년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청년문화활동지원 정책과 국제협력지원 정책에 대한 욕구를 조사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청년기본법에서 제시된 기존 정책과제 중 그 내용을 보완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는 정책 분야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참여정책의 경우, 중앙부처의 청년정책 조정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그리고 지자체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어떤 청년단체들이 포함되어야 할지에 대한 논의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청년정책의 수혜자로서 대표성을 가지는 단체와 인물을 선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는 청년기본법의 내용분석에서 타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일자리 등 기존 청년정책들은 청년고용촉진법 등 다양한 근거 법령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청년기본법 제정으로 인해 정책과제의 조정 및 실행 등에 있어서 법적 근거로서 청년기본법이 어느 정도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청년기본법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청년 일자리 관련 타 법률에서 연령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청년기본법이 그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지만, 주거기본법처럼 주거지원 필요계층으로 청년을 규정하고 그 연령 및 조건을 규정한 경우라면 주거기본법을 따라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총 182개 기존 정책 사업들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각각의 사업을 청년정책조정심의위원회가 조정하는데 있어 사업 관련 근거가 되는 법률들을 청년기본법과 연계하여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향후 청년정책기본계획이 결정된 후 정책실행에 앞서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었다.

〈표 6-2〉 청년기본법 외 청년정책관련 법률과 문제점

구분	청년관련 법률	문제점
일자리	- 고용정책기본법, 청년고용촉진법,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 조세특례제한 법 등 6개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제외한 타 법률은 청년인구집단을 직접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거나 청년의 연령범위를 임의적으로 설정하여 청년정책대상이 법률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 발생
교육	- 진로교육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산업현장 일학습 병행지원에 관한 법,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청년고용촉진법 등 6개	- 관련 법률 안에 교육지원 사항은 존재하지만 실제로 대학 등 고등교육단계에서의 진로교육, 학교에서의 현장실습 등에서 실효성이 적음

구분	청년관련 법률	문제점
주거	- 주거기본법, 공공주택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주택도시보증법 등 3개	- 신혼부부 등을 포함한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주거지원 필요계층'으로 규정했으나 공공임대주택 공급대상에 포함되도록 명시한 역사가 짧음

자료: 김기현 외(2020), 청년정책 현황 진단 및 정책추진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자료를 재인용.

넷째는 청년대상의 청년정책 욕구조사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준비생과 전문대 재학생, 34세 미만 창업희망자와 기혼직장인,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조사가 누락되어 이들에 대한 청년정책 방향 및 지원 분야에 있어서 한계점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정책 욕구조사의 대상자를 청년이행주기에 따라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대학 및 대학원 졸업 후 취업준비생, 그리고 결혼을 앞둔 미혼직장인으로 한정하고 각각 200명씩 할당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조사는 제한된 예산 안에서 표본추출의 범위를 조정하다보니, 고졸 취업준비생 및 전문대생을 포함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창업희망자와 34세 미만 기혼직장인이 조사대상에서 누락된 이유는 인터넷 조사 과정에서 무작위로 조사 대상자를 선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취약계층에 속하는 청년에 대한 조사는 청년기본법 제8조에서 언급하는 바처럼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전문화된 조사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었다. 이외에도 청년주거지원정책의 경우, 수도권과 지역에 따라 그 수요가 차별적일 수 있음에도 청년이행주기에 맞추어 조사 설계를 실행하였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보편성 확대정책의 아이디어 청취를 위해 일자리, 교육, 생활, 주거, 참여 등 기존 5대 대분류 청년정책별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약 5회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섭외는 가능하였지만 실제로 청년정책의 당사자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간담회는 진행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5대 청년정책 관련 지식과 정책 변화에 대하여 전체 청년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의 존재여부가 불분명하여 간담회 섭외가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한계점은 향후 국무조정실이 청년기본법에 명시된 청년 실태 조사를 실시할 경우 충분히 보완·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정부는 기본계획 등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고 청년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제3항에서는 실태조사의 대상·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실태조사 시, 조사대상의 범위와 정책 유형에서 본 연구에서 누락된 부분이 포함되기를 기대한다.



- 국회 법제실(2016). 법제이론과 실제, p472-474. 서울: 국회 법제실.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2020). 청년정책 카드.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2020). 청년정책 사업기술서.
- 김기현, 유민상, 변금선, 배정희, 이민정, 배진우(2020). 청년정책 현황 진단 및 정책추진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김기현, 유민상, 변금선, 배정희, 권향원, 김창환, 박미선, 성재민, 이철선, 최한수, 배진우(2020).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지경, 정연순, 이계백(2015).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4년제 일반대학 재학 및 졸업자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대학교육연구소(2018). 한국장학재단. 2012~2017년 국가장학금 신청자 및 수혜자 현황. <http://khei.re.kr/post/1846>에서 2020. 11. 23. 인출.
- 배정희, 김기현, 배진우(2020). 청년정책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청년기본법 전문 및 시행령. <https://www.law.go.kr>에서 2020. 9. 8. 인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전문. <https://www.law.go.kr>에서 2020. 9. 8. 인출.
- 변금선, 김기현, 하형석, 이용해(2019). 청년정책 체계성 강화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권해영(2019.1.16.). [청년리포트] 빛 없인 시작조차 할 수 없다. 아시아경제. <https://www.asiae.co.kr/article/2019011610204544070>에서 인출.
- 이철선, 김문길, 임성은(2016). 해외 주요국 청년정책 현황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철선, 김영란, 변수정, 김난주, 김지경, 최서지, 최혜선, 선보영, 이민경, 김은경(2016). 청년지원정책 해외입법사례 및 한국의 청년 및 청년가구 지원정책 제도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정부24(2020). 주거복지로드맵 2.0으로 달라지는 점은. <https://www.gov.kr/>

portal/ntnadmNews/2121922에서 2020. 11. 23. 인출.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9). 세계 민주주의를 만나다.

통계청(각년도). 청년실업률 추이. <https://www.index.go.kr>에서 2020. 9. 8. 인출.

한국교육개발원(각년도). 고교 졸업자의 대학진학률 현황.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20에서 2020. 11. 23. 인출.

IMF(2020.6.). 세계경제전망 수정(*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https://www.imf.org>에서 2020. 9. 8. 인출.

[부록 1] 정부의 청년정책에 대한 욕구조사



진행률 :  8%

닫자크기 

정부의 청년정책에 대한 욕구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정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입니다. 본 연구원에서는 최근 국회에서 우리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현 정부의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과 욕구를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본 조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본 조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어 설문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2조(성실 응답의무)와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될 예정입니다. 본 조사와 관련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철선 연구위원(Tel:044-287-8149)

진행률 : 12% 글자크기 + -

※ 다음은 응답자 분의 연령 등 인구 통계 관련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보기에 체크해 주세요.

귀하의 성별은?	<input type="radio"/> 남성 <input type="radio"/> 여성
귀하의 연령은?	<input type="text" value=""/> 세
귀하의 혼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input type="radio"/> 미혼 <input type="radio"/> 기혼 <input type="radio"/> 기타
귀하는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input type="radio"/> 종로이하 <input type="radio"/> 고졸 <input type="radio"/> 대학생 <input type="radio"/> 대학원생(석.박사 과정) <input type="radio"/> 대졸 이상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진행률 :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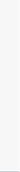
글자크기  

Q1.5. 귀하의 직업은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 대학/대학원 재학 중(휴학, 군입대 포함)
- 대학/대학원 졸업후 취업 준비생
- 공무원, 직업 군인
- 사무직
- 기술직
- 판매, 서비스직
- 전문직(교수, 의사, 법률가 등)
- 생산, 기능, 노무직
- 자영업자
- 기타 ()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진행률 :  33%

글자크기  

Q1_6. 현재 주거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본인 자가 거주

본인 전세 거주

본인 월세 거주

기숙사

부모님 집

친구 등 지인 집 거주

기타 ()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설문 형식에 대한 설명

- 본 설문조사는 매우 간단한 하나의 질문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응답시간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5분에서 최장 10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 먼저 1개의 설문을 통해 본 설문 의 응답 형식이 얼마나 간단한 지 보여 드리고 본 설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종에서 기르는 대표적인 가금류 소, 돼지, 닭 3가지의 선호도를 알기 위해 다음과 같이 두개씩 짝을 지어 어느 쪽을 더 선호하는지 응답받고자 합니다. 다른 형식의 질문도 만들 수 있으나 여기서는 선호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질문이 구성되었습니다.
- 아래의 설문(AHP 방식)은 논리 구성에 따라 응답의 신뢰도를 검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아래의 응답처럼 '돼지' 보다 '소'를 선호하고, '닭' 보다 돼지를 선호하고, 단연히 '닭' 보다 '소'를 선호하는 응답은 논리가 맞는 응답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닭'을 '소'보다 더 선호한다고 응답한다면 논리에 맞지 않는 응답이 됩니다.
- 본 설문조사는 청년 지원정책 수립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논리에 맞지 않는 응답은 배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금류 더 많이 선호함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돼지
소 더 많이 선호함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닭
소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소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진행률 : 41%
 글자크기 + -

- 지금까지 본 설문에 들어가셨습니다. 본 조사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 청년 구직자, 결혼을 앞둔 청년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로서 향후 정부의 청년 지원정책 수립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응답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지금까지 정부는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 교육, 건강, 주거, 참여 등 크게 5개 영역에 대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설문 구성은 이 5개 분야에 대한 중요도(비중)와 각 분야별 세부정책의 선호도를 묻는 것입니다. 설문은 아래와 같이 두 정책을 비교하여 어느 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선호하는지를 묻는 간단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먼저 1개의 설문을 통해 본 응답방법을 숙지하고 본 설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Q2-1. 귀하께서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어떤 정책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먼저 일자리와 교육을 중에서 어떤 정책 분야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귀하의 의견을 여쭙어 보고자 합니다. 정부의 모든 정책이 그렇듯이 청년지원 정책의 예산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확정된 예산하에 어떤 정책 분야의 지원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하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두 정책이 똑같은 비중으로 지원되어야 한다면 '동등하게 지원'을 선택하시면 되고, 어느 한쪽 정책의 비중이 더 커야 한다면 표현된 설문을 참고하여 선택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없는 부분은 양쪽 옆에 있는 설명의 중간 정도임을 의미합니다.

일자리지원 정책	극히 더 많이 지원	매우 많이 지원	상당히 더 지원	약간 더 지원	동등하게 지원	약간 더 지원	상당히 더 지원	매우 많이 지원	극히 더 많이 지원	교육 지원 정책
	<input type="radio"/>									
청년 취업을 위한 직장연계 및 직업 훈련, 불합리한 고용환경 개선, 지역 중소기업 취업자를 위한 인턴 지원 등에 관한 정책										
청년들에게 교육비, 연구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청년 자신이 진로를 스스로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Q2.2. ※ 계속해서 앞에서와 같이 정책에 대한 설명을 잘 읽어 보시고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해 주시면 됩니다.
 귀하께서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어떤 정책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음 첫째 상자 안에 제시된 정책 설명들을 잘 읽어보신 후, 두 번째 상자에 2정책이 1쌍으로 구성된 질문에서 어느 정책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할지를 평가하여 주세요.
 한정된 예산하에 어떤 정책 분야의 지원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하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정책 설명	<p>임자리 지원정책 청년 취업을 위한 직장연계 및 직업훈련, 불합리한 고용환경 개선, 지역 중소기업 취업자를 위한 임금지원 등에 관한 정책</p> <p>주거지원 정책 청년들의 주거생활 지원을 위한 임대주택 지원 및 전월세 자금 지원을 지원하는 정책</p> <p>생활지원 정책 청년들이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생활비와 무료 건강검진 등을 지원하는 정책</p> <p>정책참여지원 정책 청년들의 의견 수렴과 정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 정책</p>
-------	---

정책 분야	극히 더 많이 지원	매우 많이 더 지원	상당히 더 지원	약간 더 지원	동등하게 지원	약간 더 지원	상당히 더 지원	매우 많이 더 지원	극히 더 많이 지원	정책 분야
임자리 지원	<input type="radio"/>	주거 지원								
임자리 지원	<input type="radio"/>	생활 지원								
임자리 지원	<input type="radio"/>	정책참여 지원								

진행률 :  50%
 글자크기  

Q2.3. 계속해서 귀하께서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어떤 정책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음 첫째 상자 안에 제시된 정책설명들을 잘 읽어보신 후 한정된 예산하에 어떤 정책 분야의 지원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하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교육지원 정책	청년들에게 교육비, 연구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청년 자신이 진로를 스스로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주거지원 정책	청년들의 주거생활 지원을 위한 임대주택 지원 및 전월세 자금세 저리로 지원하는 정책
생활지원 정책	청년들이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생활비와 무료 건강검진 등을 지원하는 정책
정책참여지원 정책	청년들의 의견 수렴과 정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 정책

정책 분야	극히 더 많이 지원	매우 많이 더 지원	상당히 더 지원	약간 더 지원	동등하게 지원	약간 더 지원	상당히 더 지원	매우 많이 더 지원	극히 더 많이 지원	정책 분야
교육 지원	<input type="radio"/>	주거 지원								
교육 지원	<input type="radio"/>	생활 지원								
교육 지원	<input type="radio"/>	정책참여 지원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Q2_4. 계속해서 귀하께서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어떤 정책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음 첫째 상자에 제시된 정책 설명들을 잘 읽어보신 후 **한정된 예산하에 어떤 정책 분야의 지원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하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정책 설명	주거지원 정책	청년들의 주거생활 지원을 위한 임대주택 지원 및 전월세 자금세 저리로 지원하는 정책
	생활지원 정책	청년들이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생활비와 무료 건강검진 등을 지원하는 정책
	정책참여지원 정책	청년들의 의견 수렴과 정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 정책

정책 분야	극히 더 많이 지원	매우 많이 더 지원	상당히 더 지원	약간 더 지원	동등하게 지원	약간 더 지원	상당히 더 지원	매우 많이 더 지원	극히 더 많이 지원	정책 분야
주거 지원	<input type="radio"/>	생활 지원								
주거 지원	<input type="radio"/>	정책참여 지원								
생활 지원	<input type="radio"/>	정책참여 지원								

진행률 :  58%
 글자크기  

Q3_1. ※ 이번에는 일자리지원 분야의 세부 정책 영역들에 대한 선호도를 앞서와 같은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취업 연계, 고용환경 개선, 직업훈련 지원 등 크게 4개 영역에 대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귀하께서는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어떤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더 선호하시나요? 다음 첫째 상자 안에 제시된 정책 설명들을 잘 읽어보신 후, 두번째 상자에 2정책이 1쌍으로 구성된 질문에서 어느 정책을 더 선호하는지 응답해 주세요.

직업훈련 지원 정책	구직을 위해 국내외 현장체력, 자격증 취득, 직무교육 등을 지원
취업비용 지원 정책	청년 취업을 위한 지역일자리, 지역 중소기업 취업자를 위한 현금지원
취업연계 지원 정책	구직자를 구인 기업과 연계하는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고용환경 개선 정책	공평하고 투명한 청년 채용 및 중소기업 등의 근로환경 개선을 추진

정책 분야	극히 더 많이 선호함	매우 많이 더 선호함	상당히 더 선호함	약간 더 선호함	동등하게 선호함	약간 더 선호함	상당히 더 선호함	매우 많이 더 선호함	극히 더 많이 선호함	정책 분야
직업훈련 지원	<input type="radio"/>	취업비용 지원								
직업훈련 지원	<input type="radio"/>	취업 연계 지원								
직업훈련 지원	<input type="radio"/>	고용환경 개선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진행률 : 62%

글자크기 + -

Q3.2. 계속해서 귀하께서는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어떤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더 선호 하시나요? 다음 첫째 상자에 제시된 정책 설명들을 읽어보신 후, 두번째 상자에 2정책이 1쌍으로 구성된 질문에서 어느 정책을 더 선호하는지 응답해 주세요.

정책 설명	취업비용 지원 정책	취업연계 지원 정책	고용환경 개선 정책
	청년 취업을 위한 지역일자리, 지역 중소기업 취업자를 위한 현금 지원		
	구직자를 구인 기업과 연계하는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공평하고 투명한 청년 채용 및 중소기업 등의 근로환경 개선을 추진		

정책 분야	극히 더 많이 선호함	매우 많이 더 선호함	상당히 더 선호함	약간 더 선호함	동등하게 선호함	약간 더 선호함	상당히 더 선호함	매우 많이 더 선호함	극히 더 많이 선호함	정책 분야
취업비용 지원	<input type="radio"/>	취업연계 지원								
취업비용 지원	<input type="radio"/>	고용환경 개선								
취업연계 지원	<input type="radio"/>	고용환경 개선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진행률 : 66%

글자크기 + -

Q3_3. ※ 정부는 청년들의 일자리 지원문제를 위해 수당지급, 월급 보조, 자산 형성 등으로 구성된 취업비용 지원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귀하께서는 청년들의 취업비용 지원 정책 중 정부가 어떤 세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더 선호하시나요? 다음 첫째 상자 안에 제시된 정책 설명들을 읽어보신 후, 두번째 상자에 2정책이 1쌍으로 구성된 질문에서 어느 정책을 더 선호하는 지 응답해 주세요.

정책 설명 명	수당 지급 정책	훈련생, 구직자,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각각 관련 수당을 제공하는 정책
	월급 보조 정책	인턴십, 생활지도사, 농업법인, 사회서비스, 지역 중소기업 등 지역일자리 취업청년과 중소기업 벤처기업에게 인건비를 보조
	자산 형성 정책	중소기업 청년취업자들의 부 형성을 위해 정부가 현금을 보조

정책 평가	극히 더 많이 선호함	매우 많이 더 선호함	상당히 더 선호함	약간 더 선호함	동등하게 선호함	약간 더 선호함	상당히 더 선호함	매우 많이 더 선호함	극히 더 많이 선호함	정책 평가
수당 지원	<input type="radio"/>	월급 보조								
월급 보조	<input type="radio"/>	자산 형성								
자산 형성	<input type="radio"/>	수당 지급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진행률 : 70%

클라크키

Q3_4. ※ 정부는 청년들의 일자리 지원문제를 위해 국내기업 체험, 자격증 취득, 직무교육, 해외기업 체험 등으로 구성된 직업훈련 지원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귀하께서는 청년들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 정책 중 정부의 어떤 세부 정책을 더 선호하시나요? 제시된 정책 설명들을 읽어보신 후, 각각 비교하는 두 정책을 더 선호하는 지 응답해 주세요.

정책 설명	직무교육 지원	산업현장 맞춤형 직무교육과 관련된 훈련비,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는 정책
	국내기업 체험지원	국내 중소기업 탐방, 인턴십 등을 통해 구직자의 실무역량을 강화시켜주는 지원 정책
	해외기업 체험지원	구직자에게 해외 기업 등 현장체험 기회 및 비용을 제공하는 정책
	자격증 취득 지원	군 복무, 위기청소년 대상으로 취업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지원하는 정책

정책 평가	극히 더 많이 선호함	매우 많이 더 선호함	상당히 더 선호함	약간 더 선호함	동등하게 선호함	약간 더 선호함	상당히 더 선호함	매우 많이 더 선호함	극히 더 많이 선호함	정책 평가
직무교육 지원	○	○	○	○	○	○	○	○	○	국내기업 체험 지원
직무교육 지원	○	○	○	○	○	○	○	○	○	해외기업 체험 지원
직무교육 지원	○	○	○	○	○	○	○	○	○	자격증 취득 지원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진행률 :  75%

글자크기  

Q3_5. 계속해서 귀하께서는 청년들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 정책 중 정부의 어떤 세부 정책을 더 선호하시나요?
 제시된 정책 설명들을 읽어보신 후, 각각 비교하는 두 정책 중 어느 정책을 더 선호하는 지 응답해 주세요.

정책 설명	국내 중소기업 지원	국내 중소기업 탐방, 인턴십 등을 통해 구직자의 실무역량을 강화시켜주는 지원 정책
	해외기업 체험지원	구직자에게 해외 기업 등 현장체험 기회 및 비용을 제공하는 정책
	자격증 취득 지원	군 복무, 위기청소년 대상으로 취업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지원하는 정책

정책 평가	극히 더 많이 선호함	매우 많이 더 선호함	상당히 더 선호함	약간 더 선호함	동등하게 선호함	약간 더 선호함	상당히 더 선호함	매우 많이 더 선호함	극히 더 많이 더 선호함	정책 평가
국내기업 체험 지원	○	○	○	○	○	○	○	○	○	해외기업 체험 지원
국내기업 체험 지원	○	○	○	○	○	○	○	○	○	자격증 취득 지원
해외기업 체험 지원	○	○	○	○	○	○	○	○	○	자격증 취득 지원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진행률 : 79%

글자크기 * □

Q4.1. ※ 우리정부는 청년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비, 연구비, 인건비, 연구비, 인건비, 진로 탐색 등 크게 4개 영역에 대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귀하께서는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정부의 어떤 정책을 더 선호 하시나요? 다음 첫째 상자 안에 제시된 정책 설명들을 읽어보신 후, 두번째 상자에 2정책이 1쌍으로 구성된 질문에서 어느 정책을 더 선호하는 지 응답해 주세요.

정책 설명	교육비 지원 정책	대학원생에게는 전공관련 연구를 위한 해외연수 비용을, 구직자에게는 SW부문에 대한 교육비용을 국가가 제공
	연구비 지원 정책	정보통신 등 이공계 대학원생 대상으로 정부가 대학이나 연구소에 연구비용을 지급
	인건비 지원 정책	이공계 대학생에게 에너지, 정보통신 등과 관련된 교육에 참가하면 훈련수당을 제공
	진로탐색 지원 정책	대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정할 수 있도록 해외현장 학습을 지원하거나 진로설계 과정을 확점으로 인정해 주는 정책

정책 평가	극히 더 많이 선호함	매우 많이 더 선호함	상당히 더 선호함	약간 더 선호함	동등하게 선호함	약간 더 선호함	상당히 더 선호함	매우 많이 더 선호함	극히 더 많이 선호함	정책 평가
교육비 지원	<input type="radio"/>	연구비 지원								
교육비 지원	<input type="radio"/>	인건비 지원								
교육비 지원	<input type="radio"/>	진로탐색 지원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진행률 : 83%

글자크기 + -

Q4.2. 앞에서와 같은 청년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정책들입니다. 계속해서 귀하께서는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정부의 어떤 정책을 더 선호하시나요?

정책 설명	연구비 지원 정책	정보통신 등 이공계 대학원생 대상으로 정부가 대학이나 연구소에 연구비용을 지급
	인건비 지원 정책	이공계 대학생에게 예너지, 정보통신 등과 관련된 교육에 참가하면 훈련수당을 제공
	진로탐색 지원 정책	대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정할 수 있도록 해외현장 학습을 지원하거나 진로설계 과정을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정책

정책 평가	극히 더 많이 선호함	매우 많이 더 선호함	상당히 더 선호함	약간 더 선호함	동등하게 선호함	약간 더 선호함	상당히 더 선호함	매우 많이 더 선호함	극히 더 많이 선호함	정책 평가
연구비 지원	<input type="radio"/>	인건비 지원								
연구비 지원	<input type="radio"/>	진로탐색 지원								
인건비 지원	<input type="radio"/>	진로탐색 지원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진행률 :  87%

글자크기  

Q5. 정부는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주택, 민간주택, 중간주택, 주택비용 등 크게 3개 영역에 대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귀하께서는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어떤 정책을 더 선호 하시나요?** 제시된 정책 설명들을 읽어보신 후, 각각 비교하는 두 정책 중 어느 정책을 더 선호하는 지 응답해 주세요.

정책 설명	공공주택 지원 정책	대학생에게는 기숙사를, 결혼적령기 청년에게는 공적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제공
	민간주택 활용 정책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해 청년에게 저가로 임대주택을 제공, 또는 역세권 고시원을 임대주택으로 제공
	주택비용 지원 정책	청년들의 주택마련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저리로 전월세 자금을 지원

정책 평가	극히 더 많이 선호함	매우 많이 더 선호함	상당히 더 선호함	약간 더 선호함	동등하게 선호함	약간 더 선호함	상당히 더 선호함	매우 많이 더 선호함	극히 더 많이 더 선호함	정책 평가
공공주택 지원	<input type="radio"/>	민간주택 활용								
민간주택 활용	<input type="radio"/>	주택비용 지원								
주택비용 지원	<input type="radio"/>	공공주택 지원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진행률 : 91%

글자크기 + -

Q6. 정부는 청년들의 생활 문제 해결을 위해 건강검진, 생활비 대출, 현금 지급 등 크게 3개 영역에 대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귀하께서는 청년들의 생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어떤 정책을 더 선호하시나요? 제시된 정책 설명들을 읽어보신 후, 각각 비교하는 두 정책 중 어느 정책을 더 선호하는 지 응답해 주세요.

정책 설명	건강검진 지원 정책	20~30대 청년들과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국가가 건강검진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건강보험료를 지원
	생활비 대출 지원 정책	저신용, 저소득 대학생들에게 생활자금 및 대출자금 대출
	현금 지원 정책	저소득, 미혼모 청년에게 정부가 현금을 지원

정책 평가	정책 평가										
	극히 더 많이 선호함	매우 많이 더 선호함	상당히 더 선호함	약간 더 선호함	동등하게 선호함	약간 더 선호함	상당히 더 선호함	매우 많이 더 선호함	극히 더 많이 선호함	생활비 대출 지원	건강검진 지원
건강검진 지원	<input type="radio"/>										
생활비 대출 지원	<input type="radio"/>										
현금지원 정책	<input type="radio"/>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진행률 : 95%

글자크기  

Q7. ※ 정부는 청년들의 정책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애국심 고취, 의견수렴장 마련 등 크게 2개 영역에 대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귀하께서는 청년들의 사회문제에 관한 정책참여를 위해 어떤 정책을 선호하시나요? 제시된 정책 설명들을 읽어보신 후, 비교하는 두 정책 중 어느 정책을 더 선호하는 지 응답해 주세요.

정책 설명	애국심 고취 지원 정책	국토나 독립운동 사적지 순례 등 청년들의 애국심 고취를 위한 지원
	의견수렴장 마련 지원 정책	정부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정책 평가	극히 더 많이 선호함	매우 많이 더 선호함	상당히 더 선호함	약간 더 선호함	동등하게 선호함	약간 더 선호함	상당히 더 선호함	매우 많이 더 선호함	극히 더 많이 선호함	정책 평가
	<input type="radio"/>	의견수렴장 마련								
애국심 고취 지원	<input type="radio"/>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진행률 :  100%

글자크기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정부의 청년정책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1:1문의하기

간행물 회원제 안내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회원 종류

전체 간행물 회원

120,000원

보건 분야 간행물 회원

7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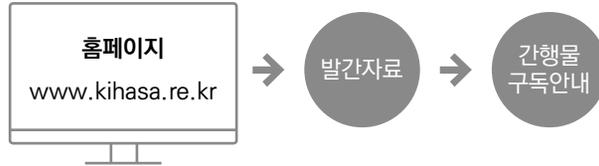
사회 분야 간행물 회원

75,000원

정기 간행물 회원

35,000원

가입방법



문의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5F
간행물 담당자 (Tel: 044-287-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한국경제서적(총판) 02-737-7498
- 영풍문고(종로점) 02-399-5600
- Yes24 <http://www.yes24.com>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